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575-01

수탁연구
2020-00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2020. 3. 28.

사업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출 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기간: 2019. 6. 17.~ 2020. 3. 28.)」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2020. 3. 28.
제 출 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인)
과제책임자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여연구원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조원	황효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목 차례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정책지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_11

제1절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24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및 방향	35

제3장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검토_41

제1절 기존 정책지표 활용사례 검토	43
제2절 국내외 기존 사회 관련 지표 검토	61
제3절 기존 지표 활용 방향	80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_81

제1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과정	83
제2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결과	100
제3절 기존 성과지표와 사회정책지표 비교	119

제5장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사회정책 현황점검_123

제1절 시계열검토	125
-----------------	-----

ii 제목 차례

제2절 국제비교	182
제3절 소결	207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_217	
제1절 연구요약	219
제2절 향후과제	224
참고문헌_227	

표 차례

<표 2-1>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5단계)	22
<표 2-2>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개요	33
<표 2-3> 『추진계획』 81개 성과지표의 투입, 산출, 결과 분류	36
<표 3-1> 사회정책 관련 PSA의 목표와 활용지표 및 관련기관	49
<표 3-2> EU 국가행동계획의 공통 목표와 가이드라인	52
<표 3-3> EU 국가행동계획 지표	53
<표 3-4> EU의 사회적배제 지표의 상세: 1차 지표	54
<표 3-5>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의 원칙과 사회적 점수판의 지표	56
<표 3-6> ESPR 점수에 따른 성과	57
<표 3-7> 검토대상 주요 사회 관련 지표 비교	63
<표 3-8> 한국의 사회지표 구성	65
<표 3-9>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변화	66
<표 3-10> 국민 삶의 질 지표 주요 변화	69
<표 3-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선정기준	70
<표 3-1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체계	70
<표 3-13> 국가발전지표의 지표체계 현황	72
<표 3-14> OECD BLI 지표체계	76
<표 3-15> OECD QoL의 지표체계	79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	86
<표 4-2>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가된 후보지표	92
<표 4-3> 델파이 전문가 최종 명단	95
<표 4-4> 델파이 조사 절차	96
<표 4-5> 선정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64개)	101
<표 4-6>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정책주기 분류(투입, 산출, 결과)	103

<표 4-7> 후보지표 중 주관적 지표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선정여부	105
<표 4-8> 사회정책지표(64개)의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에 따른 분류	107
<표 4-9> 사회정책지표 중 기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지표	110
<표 4-10> 『추진계획』상 기존지표와 작성된 사회정책지표의 통합 성과지표 체계	111
<표 4-11> 선정된 사회정책지표들의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114
<표 4-12>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분류	117
<표 5-1> 한국 학생들의 PISA 학업성취도 순위	133
<표 5-2> 범죄피해율: 2012~2016년	170
<표 5-3>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183
<표 5-4> PISA 국가별 분야별 평균점수(2018년)	185

그림 차례

[그림 1-1] 투입, 산출, 결과의 관계	5
[그림 1-2] 정책 결과의 결정요인	7
[그림 2-1] 지표의 개념 예시	13
[그림 2-2] 성과관리체계	16
[그림 2-3] 지표작성의 6단계	18
[그림 2-4] 정책선택의 사이클	19
[그림 2-5] 정책 평가의 사이클	21
[그림 2-6]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3단계)	22
[그림 2-7]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27
[그림 2-8] 지체된 복지국가 완성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28
[그림 2-9]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29
[그림 2-10]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비전과 9대 전략	29
[그림 2-11] 3대 비전, 9대 전략의 정책수요자 중심 재편성	31
[그림 2-12] 중층적 생애주기 개념도	32
[그림 2-13] 정책을 통한 성과지표 도출과	38
[그림 2-14]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두 가지 조건	40
[그림 3-1]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관리업무 흐름도	44
[그림 3-2]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46
[그림 3-3] PSA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48
[그림 3-4] 영국 공공서비스 협정과 부처목표의 연계	50
[그림 3-5]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Country Map 사례: 성인 학습 참여율(2016년)	59
[그림 3-6]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정책영역별 성과의 Heatmap 사례 ·	60
[그림 3-7] 주요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64

[그림 3-8]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틀	68
[그림 4-1] 사회정책 지표작성 과정	84
[그림 4-2]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과제	121
[그림 5-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좌)과	126
[그림 5-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 2014~2018	127
[그림 5-3]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28
[그림 5-4]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및 수혜율	129
[그림 5-5] 교육비 부담도 추이(2008~2018): 전체(좌), 소득수준별(우)	130
[그림 5-6]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 (2008~2019)	131
[그림 5-7] 국가장학금 신청률 및 수혜율 (2012~2017)	132
[그림 5-8] PISA 성취도가 2수준 미만 및 5수준 이상 학생 비율(2009~2018)	133
[그림 5-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평균(위), 집단별(아래)	134
[그림 5-10]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위), 집단별(아래)	135
[그림 5-11] 기업체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의 비중 (2008~2018)	136
[그림 5-12] 성·연령별 고용률(2000~2018)	137
[그림 5-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와 기업규모별 비중	138
[그림 5-1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성별·기업규모별 비중	139
[그림 5-15] 자녀 연령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2015~2019	140
[그림 5-16]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00~2018	141
[그림 5-17] 사업장규모-고용형태별(상), 성별-고용형태별(하) 임금격차	142
[그림 5-18] 임금 5분위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43
[그림 5-1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추이(2013~2018)와	144
[그림 5-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2009~2018)	145
[그림 5-21] 직무스트레스 정도: 2008~2018	146
[그림 5-22] 주당 54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비율	147
[그림 5-23] 총 근로시간 추이: 2006~2018	148

[그림 5-24] 여가시간 추이: 2014~2016	149
[그림 5-25] 여가시간 충분도 추이: 평일(위), 휴일(아래)	150
[그림 5-26] 휴가경험률(좌) 및 연간사용휴가일수(우): 2014~2018년	151
[그림 5-27]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위) 및 공공체육시설(아래) 현황	152
[그림 5-28]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2009~2019	153
[그림 5-29]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2009~2019	154
[그림 5-30]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	154
[그림 5-31] 치매환자 등록률	155
[그림 5-32]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비중: 2010~2018	156
[그림 5-33] 실업률, 장기실업률, 연령대별 실업률: 2000~2018	157
[그림 5-34] 연령집단별 빈곤율: 2011~2018	158
[그림 5-35]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률: 2012~2019	159
[그림 5-3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좌)와 세전후 지니계수 감소율(우): 2011~2018	159
[그림 5-37] 소득 5분위 분배율: 2011~2018	160
[그림 5-38]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161
[그림 5-39]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62
[그림 5-40]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 2012~2016	163
[그림 5-41] 환경만족도 추이(2010~2018) 및 지역별 격차(2018)	164
[그림 5-42]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2010~2018)과 지역별 오염도(2018)	165
[그림 5-43] 산재발생율 및 사망률 추이(2000~2018)와	166
[그림 5-44]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2000~2018)	167
[그림 5-45]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168
[그림 5-46]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율 및 신고율 추기(2004~2016)	168
[그림 5-47] 성폭력·성희롱 발생률 및 성폭력 신고율	169
[그림 5-48] 의료비 지출 구분: 2000~2018	171
[그림 5-4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172
[그림 5-50] 건강보험 보장률 및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률	172
[그림 5-51]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2011~2015) 및	173

[그림 5-52] 비만유병률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174
[그림 5-53]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175
[그림 5-5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18	176
[그림 5-55]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2015~2018)	176
[그림 5-56]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18	177
[그림 5-57]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추이	178
[그림 5-58] 신규주택 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	179
[그림 5-59] 미충족 의료율 추이 및 지역별 격차: 2008~2018	180
[그림 5-60] 의료접근성 지역별 격차: 2010~2018	181
[그림 5-61]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184
[그림 5-62] PISA 국가별 평균점수(2018년)	186
[그림 5-63] PISA 국가별 성별 평균점수(2018년)	187
[그림 5-64] PISA 국가별 영역별 학력 미달 비중(2018년)	188
[그림 5-65] 국가별 성인교육 참여율(2016년)	189
[그림 5-66] 국가별 성별 고용률(2018년)	191
[그림 5-67] 국가별 연령대별 고용률(2018년)	191
[그림 5-68] 국가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8년)	192
[그림 5-69] 국가별 임금분위별 성별임금격차(2018년)	193
[그림 5-70] 2018년 국가별 총 근로시간 변화(2008년 대비)	194
[그림 5-71] 국가별 여가시간, 가사·돌봄시간 비교(2014년)	195
[그림 5-72] 국가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5년)	196
[그림 5-7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2018년 혹은 최근년도)	197
[그림 5-74] 국가별 연령대별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2017년) ...	198
[그림 5-75] 국가별 연령대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2017년)	199
[그림 5-76] 국가별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2018년 혹은 최근년도) 201	
[그림 5-77] 2017년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2010년 대비)	202
[그림 5-78]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2017년 혹은 최근년도) ·	203

[그림 5-79] 국가별 비만유병률(BMI 25 이상)(2017년 혹은 최근년도)	204
[그림 5-80] 2017년 국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2010년 대비)	205
[그림 5-81] 2016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중(2010년 대비)	206

【 요약 】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2019년 2월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의 관리를 위한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로드맵 성격으로, 9개 부문, 22개 정책목표, 71개 정책과제, 8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 중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가 적어 성과지표의 달성이 실제 국민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지 측정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회정책 관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과 수준의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먼저 2장에서는 정책지표의 도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 로드맵과 정책지표를 통한 관리 필요성을 살펴봄.
- 이어 3장에서는 국내외의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사회정책 지표 도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4장에서는 연구진 집중검토,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를 위한 64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음.
- 5장에서는 도출된 성과지표의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과 과제를 기술적(descriptive)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음.
- 6장은 결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2. 정책지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공공선택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388-289 재인용).
 -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중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영역별 지표 중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구성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정책지표를 통해 정책문제 정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과정 모니터링, 정책결과 평가의 단계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정책주기의 어디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이 궁극적 목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중심의 정책관리가 필요
 - 물론 정책의 단계나 정책지표 활용 목적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표의 활용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수행자의 유인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에서 정책이 관리될 필요
 -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결과 수준 정책지표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가 중요
- 『추진계획』은 정책영역-정책목표-정책과제-성과지표에 이르는 정책관리 체계를 제시했지만, 81개 성과지표 중 16개 지표만이 결과 수준이며, 9개 영역 중 4개 영역에는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함.
 - 정책의 결과 수준에서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
 - 이 때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의 잠정적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3.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검토

- 기존 정책지표 활용사례로 한국의 사회보장,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SA), EU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s/inclusion), 그리고 EU의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EPSR)를 검토하였음.
- 국내외의 정책지표 활용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목표-정책과제-정책지표의 연결을 강조했으며, 특히 영국의 PSA는 이를 정부 전체의 거버넌스 차원에도 반영하여 성과중심 정책추진 및 관리를 추구하였음.
- 대부분의 경우 정책지표는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에 놓고 있었으며,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출(output) 지표를 활용하였음. 즉, 성과중심 정책관리에서 정책지표의 핵심은 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수준 정책지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음으로 국내 주요 사회지표인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를, 해외의 사회 관련 지표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와 EU의 QoL(Quality of Life)를 살펴보았음.
- 사회정책의 성과는 결국 사회지표들이 다루고 있는 삶의 질,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지표들 중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가 1차적인 후보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외 사회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영역지표로서의 사회 관련 지표들에는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주관적 웰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표들의 상당수는 앞서 살펴본 정책지표체계에 활용되고 있었음.
- 기존의 사회지표 및 사회정책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후보지표’ Pool을 형성할 수 있음.

4.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였음.

- 『추진계획』상의 9개 정책영역 및 22개 정책목표를 지표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 워크로 삼아,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 사회보장통계 등 국내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OECD의 BLI와 EU의 QoL과 같은 해외의 사회 지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영역별 중요 지표 『추진계획』에 제시되었던 기존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183개 후보지표 선정
- 20명의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3차 델파이 조사 진행(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48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31개로 후보지표 확대)
-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64개 지표 선정

<표 1> 사회정책 지표작성 과정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표 선정 기준 마련 · 5개 삶의 영역 핵심지표 검토
2	사회지표 관련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 183개 사회정책후보지표 선정
3	델파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추출 183개 지표 및 전문가 추천 48개 지표 · 지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회에 걸쳐 시행
4	사회정책 지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사회지표 후보 선정

- 선정된 64개 지표 중 투입 지표는 1개, 산출 지표는 23개, 결과 지표는 40개로 결과 중심 사회정책지표 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였음. 선정 지표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씬(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 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사회정책지표 선정 결과

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일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 고용률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쉼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4-1. 총 근로시간

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노후	5-5. 설립 구분별 장기 요양보호시설 비중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률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소득		6-3. 실업급여 수급률 6-6. 공적연금 수급률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1. 환경 만족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3. 비급여 본인부담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 비스 이용 포기 경험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사도 격차 8-6.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9-3.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의 과제를 남김.

- 영역별 지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향후 결과 수준 지표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 상의 성과지표의 보완적 활용을 위해 투입-산출-성과를 결합하는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 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 측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주관적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5.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점검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장에서는 64개 지표의 시계열을 검토하고, 일부 지표를 국제비교하였음.
- 시계열 검토
 - [돌봄]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움]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크고,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일]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도 증가함. 다만 휴가 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고,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노후]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어 있음.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하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 아동 안전 사고, 범죄피해를,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큼.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다고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 [건강] 의료비 총액의 증가 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료 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주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요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6.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결과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된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사회정책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64개 지표를 제시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체계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작성된 지표체계는 ① 영역별 지표 불균형이 있고, ② 기존 추진계획 상 지표들과 통합적 체계를 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지표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추진계획상의 투입-산출 중심 지표와 본 연구의 산출-결과 중심 지표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 투입-산출-결과를 포괄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체계의 보완을 위해서는 추가적 조사도 검토할 필요
 - 본 연구의 후보지표로 선정했던 주관적 지표들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시 높은 평가를 못했는데, 이는 기존 주관적 지표들이 정책반응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 이의 보완을 위해 정책반응성이 높으면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가능한 주관적 지표개발이 필요함.
 - 또한 결과 수준의 정책지표로서 적합성이 높지만 지표주기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지표(PIAAC, 생활시간조사 등)나 현재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지만 필요한 지표(세대 간 사회이동, 교육-노동시장 이행,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 건강불평등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만함.
- 다음으로는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기존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
 - 정책지표는 정책의 문제설정, 대안선택, 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그리고 문제의 재설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정책 지표들로 측정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영국 PSA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 환류(feedback)체계를 정부 부처 간 정책과제 수행의 거버넌스 체계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2019)을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를 통해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영역-목표-과제-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그러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정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측면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결과(outcome)의 비중이 낮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고, 이에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것임.¹⁾
-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를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렸던 전후 30년간의 호황이 끝난 1980년대 영국에서 이른바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등장하면서부터였음(오윤섭, 2017).
 - 19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한 케인스주의적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기 시작했으며,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1) Outcome 수준의 지표는 국내 연구에서 ‘성과’로 번역되기도 하고 ‘결과’로 번역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결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결과 수준의 지표’(outcome indicator)를 구분하기 위함임. 실제로 성과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성과지표가 투입수준, 산출수준, 결과수준 모두에서 작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제2장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결과’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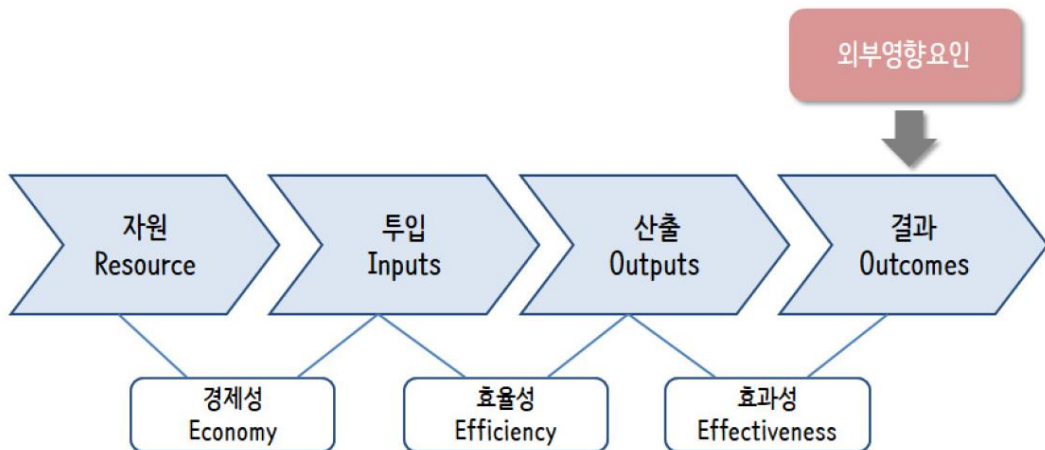
4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 그 결과 1980년대 민영화와 규제완화 흐름과 더불어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중심 관리체계가 제시되었음.
 -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정부부문에서 수행하는 사업, 즉 정책에 대해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실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performance goal)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음(고영선 외, 2004).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이와 같은 등장배경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적용에 대한 적합성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역사적으로 신공공관리의 배경이 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가의 역할 축소를 추구한 바, 이와 반대로 복지 친화적이고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의 사회정책과는 대립적인 측면이 있음.
 - 신공공관리 관점의 성과관리는 단기적이고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성을 갖는 바, 이는 가치 지향적이고 장기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박경돈·이재원, 2009; 강영철·이종학, 2010; 원종학 외, 2010).
- 그러나 “성과의 다의성”을 고려할 때 다른 시각의 접근도 가능함(오윤섭, 2018: 53-54).
- 성과는 단기적이거나 효율성 측면의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오히려 앞서 언급한 사회정책의 특성이야말로, 일반적인 조직 평가와 다른 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성과지표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근은 정책주기 상에서 어떤 단계를 측정하는가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분류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접근에서 정책주기는 3단계(투입input - 산출output - 결과outcome)에서 5단계(투입input - 과정process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 영향impact)까지로 구분하는데, 각각 어느 단계의 성과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성과지표 자체도 구분되는 것임.

- 예컨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한다고 할 때,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산 증가를 측정하면 투입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석률을 측정하면 과정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수를 측정하면 산출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의 역량 향상을 측정하면 결과지표,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면 영향지표라고 볼 수 있음.

[그림 1-1] 투입, 산출, 결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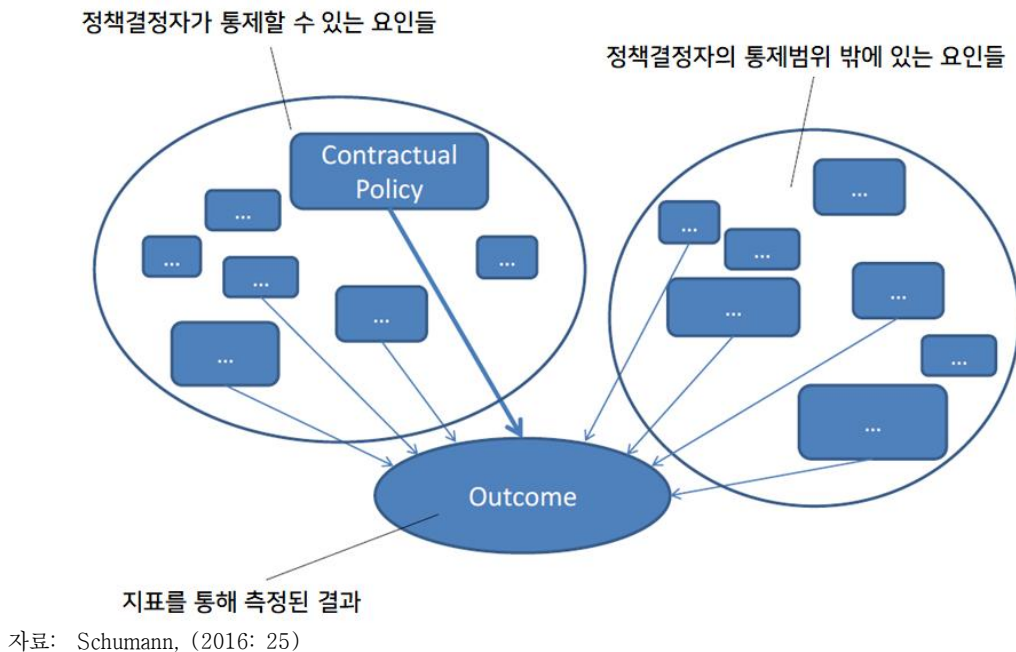
자료: HM Treasury(2001: 9)에서 일부 수정

- 정책주기에 따른 성과지표는 그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만, 실제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님.
-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지표가 결과(outcome) 수준이 아닌 투입이나 산출 위주로 설계될 때, 정책수행의 주체들의 유인왜곡을 발생시키며, 그 결과 성과지표는 달성했으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음(고영선 외, 2004).
- 물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체계’는 투입-산출-결과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지표가 각각의 정책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책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의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한 사회정책의 실행 및 관리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추진계획 상의 성과지표는 물론, 국내외의 정책지표 활용 사례와 사회지표 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지표체계를 작성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것에 있기에 이 계획에 제시된 국민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기반(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을 지표체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각 영역별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 혹은 델파이 조사의 형태로 참여하였음.
- 결과수준의 성과지표에 바탕하여 정책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그 정책의 결과(outcome)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고려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성과 중심 환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임.
- 어떤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에는 정책결정자가 관리할 수 있는 요인뿐 아니라 관리할 수 없는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요인 간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러나 사회정책 성과체계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표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과모형 역시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적이지 않음.
- 이는 결과수준의 사회정책 관리가 고정된 정책과제와 고정된 정책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1회성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과제 실행을 측정하는 정책지표를 통한 평가가 다시 정책과제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결과 수준의 지표로 인한 평가 결과는 정책을 수행한 수행 주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의 정책목표 및 과제에 대한 진단 성격의 평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함. 이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사전적으로 결과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즉, 결과수준 정책성과지표를 통한 평가는 상벌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림 1-2] 정책 결과의 결정요인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은 일종의 이론적 검토로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작성할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될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내용을 분석함.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결과 중심 지표로 구성된 사회정책 지표체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제시할 것임.
- 제3장은 기존의 정책지표와 사회지표에 대해 검토함. 정책지표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검토는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기존 사회지표는 영역지표로서 사회정책지표와 차이가 있지

만(제2장 참조), 사회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이 사회정책의 성과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 관련 영역지표들을 검토하고, 이어지는 장에서의 후보지표 선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들을 모색할 것임.

- 제4장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지표의 작성과정 및 결과를 제시함.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한 검토 및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로서 도출된 64개 지표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이 64개 지표와 기존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새롭게 선정된 지표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지표와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 제5장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시계열 통계를 제시하고 이 중 국제비교가 용이한 일부 지표들을 선정하여 국제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종단적·횡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 파악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정책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음.
- 제6장은 결론으로서 이전 장들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것임.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체계가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지표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결론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장·단기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분석, 사회정책협력망²⁾ 전문가들을 비롯한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 사회정책 지표연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 연구가 포괄해야 하는 사회정책 영역이 매우 넓어 지표체계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의 정책영역 및 정책목표를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 정부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기관 전문가들과

2)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에 의한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싱크탱크' 기능을 확립할 필요에 의해 조성된 사회분야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뜻함.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단, 그리고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차적으로는 사회정책지표를 바탕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수행과 관리를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향후 성과지표 중심의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는 기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기존 성과지표에서 부족했던 결과 수준의 지표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성과지표체계를 개선하고,
- 이를 통해 향후 성과지표 중심의 사회정책관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정책지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제1절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및 방향

제2장 ■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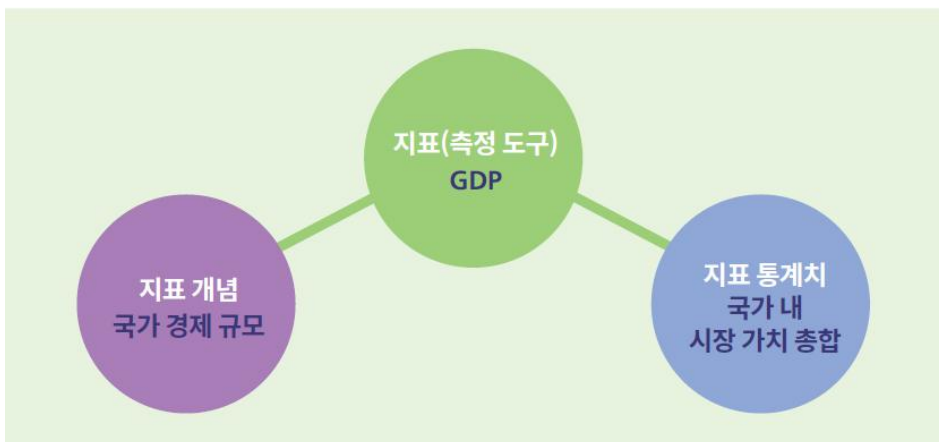
제1절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지표와 정책지표

○ 지표(indicator)의 개념

- 지표는 “어떤 한 체계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접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통계”로 정의됨(노화준, 2003: 386~387).
- 지표는 그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개념(indicator concept)과 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그리고 그 측정도구로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로 구성됨(남궁근, 2001: 7).

[그림 2-1] 지표의 개념 예시



자료: 통계개발원(2019: 8)

○ 지표체계와 지표 프레임워크

-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는 지표의 측정대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구성한 체계를 가리키며, 지표의 프레임워크는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지표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가이드라인을 말함(통계개발원, 2019: 8).
- 지표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찾고,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지표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

○ 영역별 지표체계

- 지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경제지표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지표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운동의 영향으로 대두하였음(남궁근, 2001: 8).
- 1960~1970년대 사회지표 운동은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GDP만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혹은 웰빙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관적 접근을 포함한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가 부각된 것으로, 이후 1980~1990년대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과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 및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지금의 사회지표 체계가 형성됨(이재열 외, 2014).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환경지표로 이어져 현재 국가통계는 대체로 경제, 사회, 환경통계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점차 중첩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경향임(이재열 외, 2014).

○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경제·사회·환경지표는 그 중 관심이 특정한 영역의 시스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음. 이와 같은 영역별 지표에는 윤리적·규범적 지향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노화준, 2003).
- 반면,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288-289 재인용).

- 요컨대 정책지표는 영역별 지표와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성격 상으로는 특정한 윤리적 가치에 근거한 정책적 지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정책지표 간의 관계는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며, 서로 다른 지표개념(정책적 효과성 vs. 특정 영역의 변화)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의 상당수가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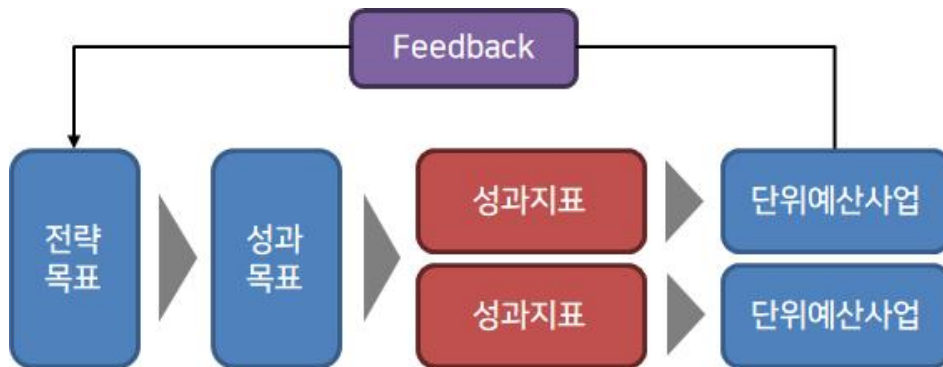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정책지표

- 성과지표란 어떤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박경외, 2004: 11).
- 성과지표는 경영학에서 제시된 “전략적 성과관리”(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의 과정에서 전략목표 구체화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목표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성과지표에 기반한 전략적 성과관리는 본래 민간부문에서 시작됐지만, 1980년대 이후 공공선택이론의 영향 하에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고영선 외, 2004).
- 성과관리 체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관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도 마찬가지임. 즉,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됨.
-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동시에 정책지표의 성격

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한국 정부는 성과지표를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성태제 외, 2006: 11)로 정의하고 있어 정부 조직의 성과지표는 곧 정책지표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
- 후술하겠지만 정책지표 역시 [그림 2-2]에 나타난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뿐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류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일종의 성과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음.

[그림 2-2] 성과관리체계



자료: 박경귀 외(2004: 8)

- 이상에서 정책지표의 정의 및 다른 지표분류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정책문제정의, 정책대안선택, 정책성과평가 등의 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다른 영역별 지표와 달리 윤리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공의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가리킴.
 - 이는 어떤 지표가 정책지표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지표 자체의 성격에도 있지만 그 지표가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지표·사회지표·환경지표 등 주요 영역별 지표와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영역별 지표들과는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에 포함된 지표들은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삶의 질이나 사회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이 중에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지표도 있고, 정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지표도 있을 것임. 이때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지표는 사회지표뿐 아니라 사회정책지표(social policy indicator)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는 사회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정책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다만 어떤 지표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지표 자체의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극단적으로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분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라면 Gini 계수와 같이 분배와 관련된 지표는 정책지표로서 의미가 없겠지만, 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중요한 정책지표가 될 수도 있음. 반대로 사회의 변화가 정책적 관심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6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같은 지표는 일·가정 양립 문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부각 이후에 정책적 의미가 높아진 지표의 예로 볼 수 있음.
- 정부기관의 성과지표는 정책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반대로 말하면 정책지표는 그 자체로 성과지표의 성격을 가짐. 물론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정책지표라고 해서 반드시 정책의 ‘결과’ 차원에서의 성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정책지표는 일종의 성과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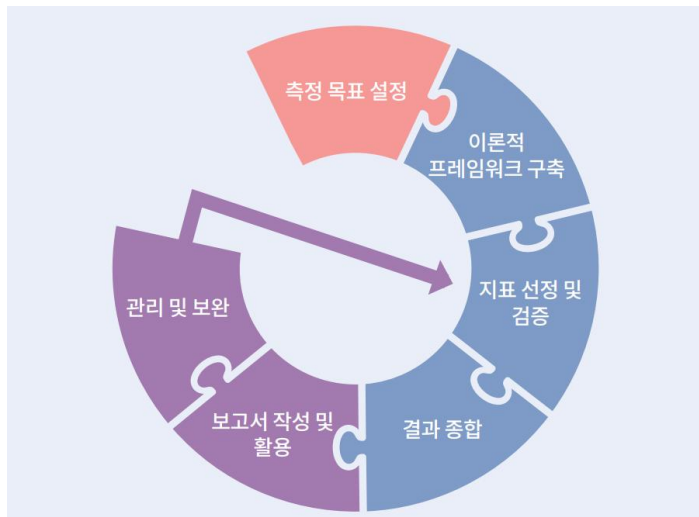
2. 정책지표의 작성과 활용

○ 통계개발원(2019)은 정책지표의 작성과정을 6단계로 제시하고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측정목표 설정” 단계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두 번째 단계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로 측정대상의 본질과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하위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세 번째 단계는 “지표 선정 및 검토” 단계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된 하위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하는 단계임.

- 네 번째 단계는 “결과 종합” 단계로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통계 혹은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단계임.
- 다섯 번째 단계는 “보고서 작성 및 활용”의 단계로 정책 지표의 경우 이 지표들을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여섯 번째 단계는 “관리 및 보완” 단계로 정책효과 측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 혹은 연구자 등을 참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및 보완해야 함.

[그림 2-3] 지표작성의 6단계



자료: 통계개발원(201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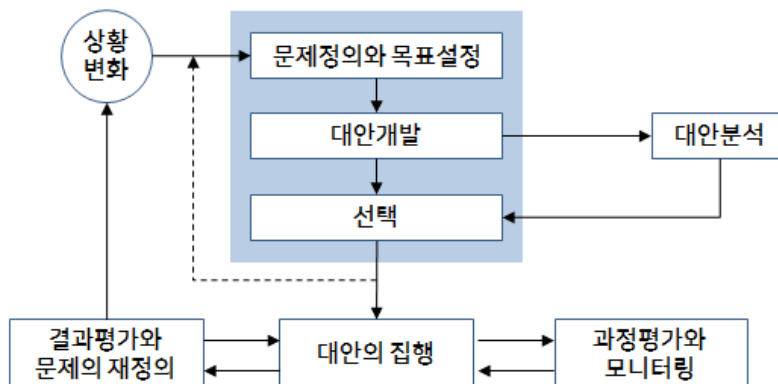
- 지표 작성의 이와 같은 6단계는 사실 정책지표 뿐 아니라 영역별 지표에도 측정목표가 다를 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정책지표의 작성과 영역별 지표의 작성이 달라지는 부분은 ‘측정목표’에 있음.
- ‘정책’과 ‘지표’의 관계에서 볼 때 만약 영역별 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는 과정은 영역별 지표를 통해 사회의 해당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될 것임.
- 반대로 정책지표를 일종의 성과지표로 보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책’을 먼저 설정하고, 이 ‘정책’을 일종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지표체계를 작성할 수도 있음.
- 전자와 후자의 접근을 대비할 때 전자가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이라면, 전자

는 “정책 중심의 연역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김석호, 2019).

- 그러나 정책지표의 작성과정을 길게 보면 이 두 과정은 결국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사회지표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 인식으로부터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제시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지표를 활용한다면, 전술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은 결국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전자의 과정이 정책지표의 ‘문제설정 과정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과정은 ‘정책 결과 평가와 문제 재정의 과정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음.

- 정책지표 활용의 이와 같은 특성은 정책선택의 싸이클 상에서 정책지표의 활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노화준, 2003: 389~394).
- 정책선택의 단계는 (1) 정책 문제의 정의와 목표선택,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 (3) 정책집행, (4) 정책집행 결과 평가 및 문제의 재정의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정책지표의 활용이 가능함.

[그림 2-4] 정책선택의 싸이클



자료: 노화준(2003: 390)

- 앞서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는 짜여진 정책목표체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특정 영역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지표로부터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좀 더 일

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일단 어떤 정책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그 정의에 활용된 영역지표는 정책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표로 활용됨.

-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지표가 활용되는데, 이때는 특정한 인과적 모형을 통해 정책과 지표 간 관련성을 가정하게 됨. 인과모형은 엄밀한 계량적 분석을 요구하지만, 종종 정책결정시에는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가설적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됨(노화준, 2003: 392). 이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기도 함.
- 정책지표는 정책집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활용되는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표를 통해 진행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정책대안 선정 과정에서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보완하거나, 정책이 당초의 목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표는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로 기능하여, 정책의 결과(outcome)나 영향(impact)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정책문제를 재정의하며, 이를 거쳐 다시 한 번 환류과정을 거치게 됨.

3. 정책지표의 유형과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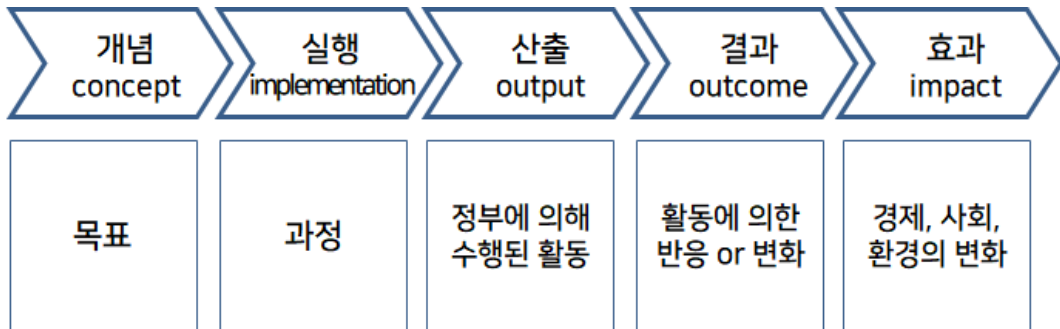
○ 정책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흔히 사용되는 지표의 분류방식으로 직접지표와 간접지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와 같이 지표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으며(통계개발원, 2019),
- 좀 더 정책지표에 특화된 분류로는 지표가 내생변수인지 외생변수인지, 정책의 산출물이 화폐가치인지, 물리적 단위인지, 사회심리적 단위인지, 정책지표의 적용대상이 국가 전체인지, 지역인지, 혹은 다른 하위단체인지, 그리고 정책분석을 목표로 하는 지표(정책분석지표)인지 정책평가를 목표로 하는 지표(정책평가지표)인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함(남궁근, 2001).
- 정책지표가 정책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효과성 지표, 효율성

지표, 효과성과 효율성이 공유된 지표, 기타 측면의 지표로 구분하기도 함(박중훈, 1999).

- 또한 정책지표가 정책의 주기 중 어느 단계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투입, 산출, 결과 지표 등으로 분류하기도 함.
- 실제 정책지표의 선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많은 지표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류는 정책의 주기에 따른 분류 방식임(Eurostat, 2014; Schumann, 2016; 박경귀 외, 2004; 고영선 외, 2004; 이민호 외, 2012; 이은국 외, 2015 등).
- 정책주기에 따른 정책지표 분류는 정책 성과관리체계와 관련성이 높으며, 정책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 정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성과지표로서의 정책 지표 관리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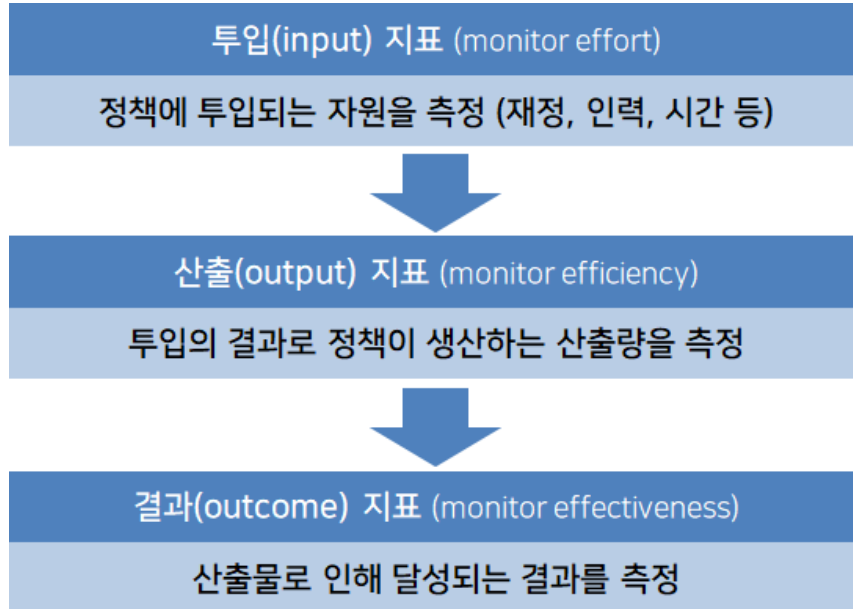
[그림 2-5] 정책 평가의 사이클



자료: Eurostat(2014: 8)

-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데,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사이에 과정(process)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outcome)와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구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5단계까지 구분됨.
- OECD의 경우 3단계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에 투입된 자원을 측정하는 투입지표, 투입에 따라 생산된 산출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그리고 산출로 인해 달성된 결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그것임.

[그림 2-6]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3단계)



자료: Schumann(2016: 7)

<표 2-1>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5단계)

지표	내용
투입(input)지표	정책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연 자원을 측정
과정(process)지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정도를 측정
산출(output)지표	정책시행 완료 후 생산된 생산물, 자본, 서비스 측정
결과(outcome)지표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중·단기적 변화
영향(impact)지표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장기적 변화

자료: 통계개발원(2019: 38)과 박경귀 외(2004: 12)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정리

- 5단계 구분 방법을 취할 경우 결과지표와 영향지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데, 이에 대해 Eurostat(2014)는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장기적인지, 중·단기적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³⁾
- 몇 단계 구분을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산출과 결과의 구분임. Schumann(2016)은 산출은 정책의 ‘무엇’을 보여준다면, 결과는 ‘왜’를 보여준다고

3) 그러나 Eurostat(2014)의 구분 기준 역시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지표와 영향지표를 구분하지 않았음.

설명함. 즉, 산출은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책 시행 전에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산출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작용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임.

○ 결과(outcome) 수준 지표의 중요성

- 결과 수준의 지표가 정책이 ‘왜’ 시행되는지를 보여준다는 Schumann(2016)의 설명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과 수준 지표라는 것을 의미함. 물론 투입, 과정, 산출 수준의 지표는 정책이 애초의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monitoring)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이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것은 결과 수준의 지표임.
- 이 때문에 성과 중심 정책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결과 수준의 지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결과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정책을 실행하는 이들이 정책의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입이나 산출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뒤바뀐’(goal displacement)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고영선 외, 2004).
-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결과수준의 지표달성은 정책의 결정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정책의 결과에는 그 정책뿐 아니라 다른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이렇게 본다면 결과 수준의 지표 활용은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상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위한 점검의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결과 수준의 지표라는 것 이외에 ‘좋은 정책지표’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정책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정(PSA)를 제시하며, 좋은 성과지표의 조건으로 꼽은 8가지를 소개하겠음(HM Treasury, 2001).

- 관련성(relevant): 조직 혹은 정책의 목표와의 관련성
- 유인왜곡 회피(avoid perverse incentives): 바람직하지 않거나 낭비적인 행위를 촉발하지 않을 것
- 귀속성(attributable): 성과지표는 실행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명확성(well-defined): 일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 적시성(timely): 필요한 시점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 신뢰성(reliable): 측정결과가 정확하고, 진행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
 - 비교가능성(comparable): 성과를 과거와 혹은 다른 사업과 비교할 수 있을 것
 - 검증가능성(verifiable): 분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측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
- 좋은 정책지표를 만들고자 할 때 ‘결과(outcome) 수준’과 함께 고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관련성(relevant)임.
-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결과 수준을 보고자 할 때 지나치게 장기적인 영향(impact)을 측정하게 되면, 정책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겠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정책지표로 삼는다면, 실제로 정책적 활용도는 제약이 클 것임.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든 나빠지든 그 원인이 어떤 정책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 따라서 정책지표는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는 목적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결과지표 중심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투입이나 산출지표 역시 정책과정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⁴⁾

1.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취임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그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

4) 본 절은 연세대학교 최승훈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 작성하였음.

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움(대한민국정부, 2017).

- 구체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박능후, 2017, 김미곤 외, 2017: 5 재인용)라고 정의되었으며,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음.

- 이후 문재인 정부의 ‘포용’은 복지를 넘어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기 시작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연계된 개념으로 자리매김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악화 속에서 주요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을 강조하였음. 이들은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분배전략을 통한 불평등 개선이 그 자체로 성장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OECD, 2014; IMF, 2017; OECD-World Bank, 2017 등).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종전의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복지 영역을 넘어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확대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였음.⁵⁾
-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라고 정의되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음.⁶⁾

5)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정책위키 「혁신적 포용국가」 참조(<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최종접속일: 2020-03-01

6)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정책위키 「혁신적 포용국가」 참조(<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이 애초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사회정책의 역할은 중요하게 제시됨.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처음으로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듬해 2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정책의 추진 로드맵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관계부처합동, 2019).
- 이 계획들에서 정부는 사회정책이 내수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분배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하였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을 강조함으로써 고도성장기 동안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음.⁷⁾

○ 이하에서는 각각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2.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2018. 9)⁸⁾

- 『비전과 전략』은 한국사회와 사회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한 후,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비전(3대 비전)과 전략(9대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비전과 전략』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제시함.
 -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대체로 나타난 성공적인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를 통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정책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양재진, 2001; 2005; 정무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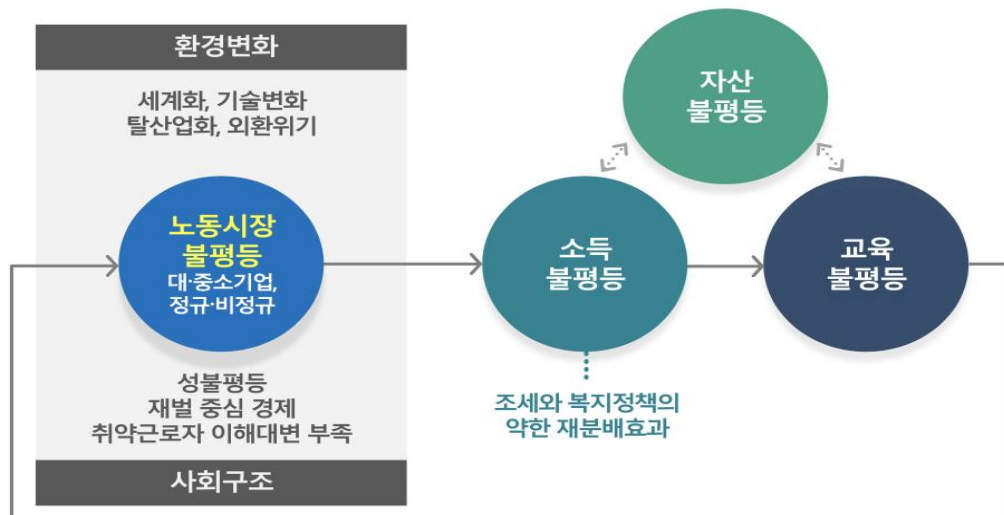
[View.do?newsId=148855401](https://www.inclusivekorea.go.kr/index.jsp)), 최종접속일: 2020-03-01

7)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 참조(<http://www.inclusivekorea.go.kr/index.jsp>), 최종접속일: 2020-03-01

8)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인용이 없는 경우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을 참조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성장 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 심각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2015년 개인소득⁹⁾이 2천만원 이하에 속한 저소득층이 59.5%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높으며(홍민기, 2017),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됨(OECD, 2014; IMF, 2017).
- 이와 같은 불평등의 원인에는 노동시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 여기에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성 불평등, 기술변화,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전이 겹쳐지며, 가계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스로가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¹⁰⁾, 이와 같은 사회 부문의 낙후와 불평등 증가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7]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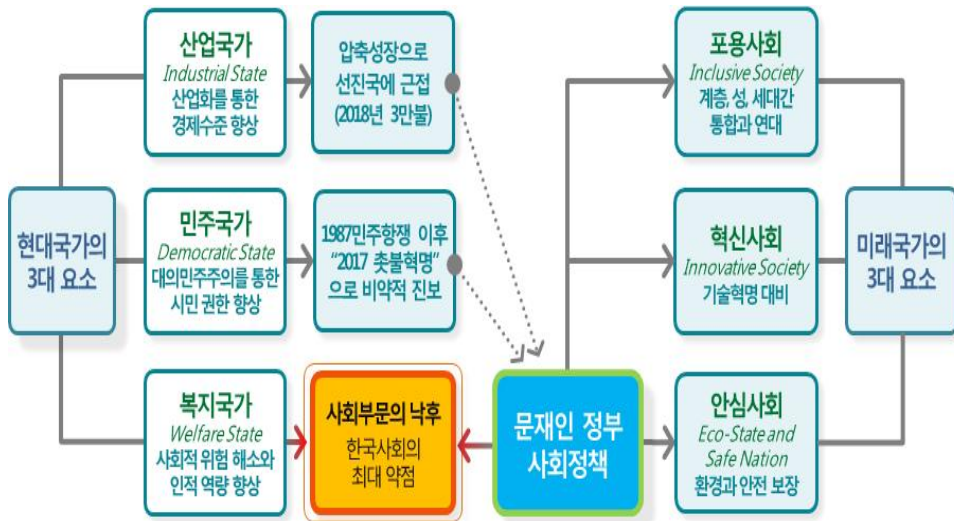
9) 여기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10) 사회정책과 관련된 지표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다수 위치하는데, 특히 장시간 근로자 비중(32위), 여가·돌봄시간(24위), 고용률(21위), 자기보고 건강상태(35위), 지원 관계망의 질(35위) 부분은 최하위에 머물러 삶의 질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당부분 뒤쳐진 상황이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역할

-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인해 미발달한 사회안전망은 상기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게 됨.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사회정책이 크게 낙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통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활용해야 함.
- 사회정책은 빈곤, 불평등, 질병, 노령 등 산적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전병유 외, 2006)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계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체된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지님.

[그림 2-8] 지체된 복지국가 완성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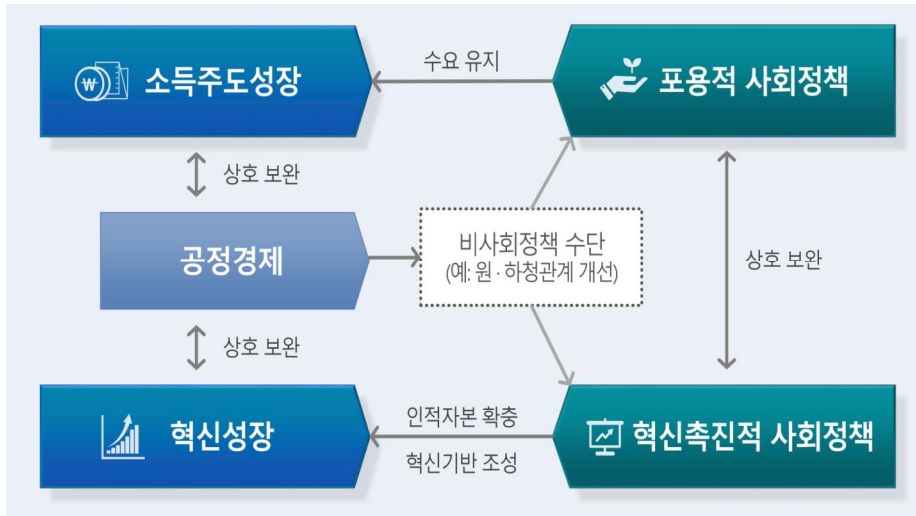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0)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크게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촉진적 사회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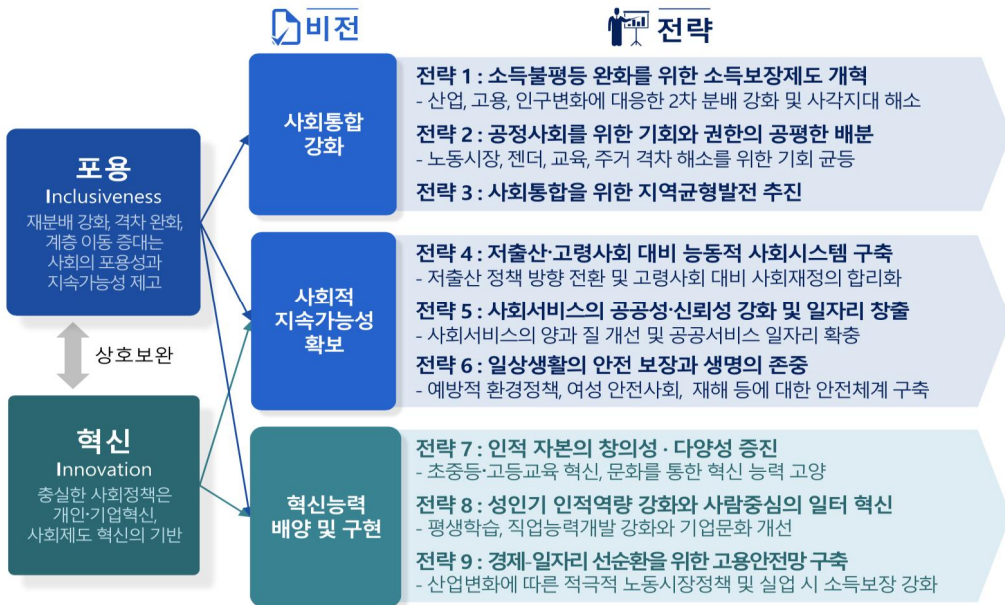
[그림 2-9]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3)

- 이와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비전과 전략』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3대 비전은 각각 ‘사회통합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비전에 대한 3가지 전략이 도출됨.
- 각각의 비전에 대한 전략으로는 먼저, 사회통합강화의 전략으로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전략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이 꼽혔음.
- 마지막으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제시되었음.

[그림 2-10]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비전과 9대 전략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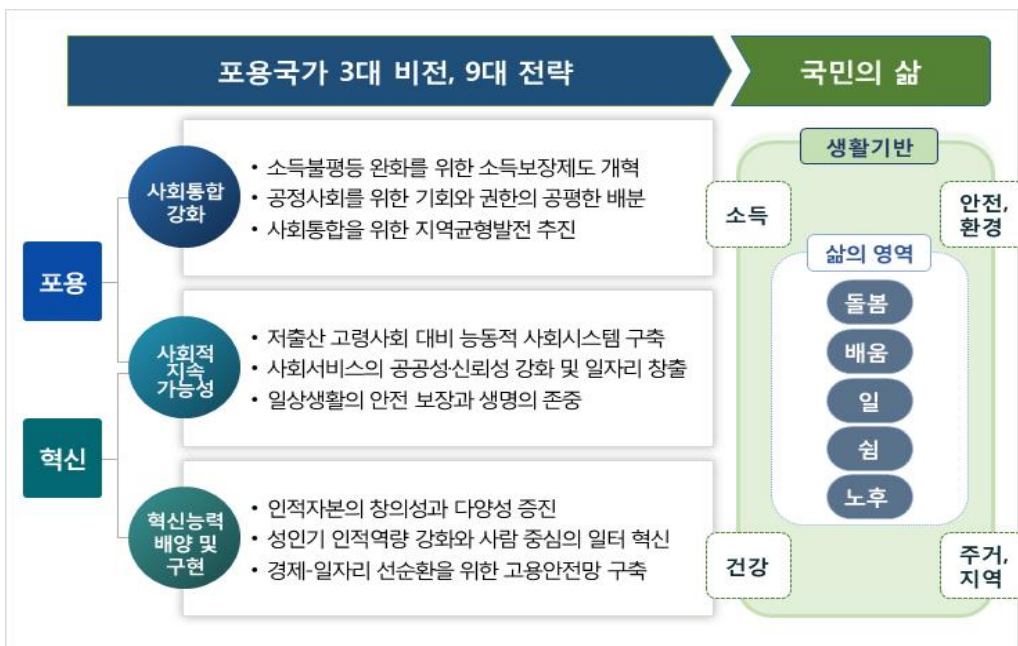
- 『비전과 전략』은 사회정책의 비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OECD 수준의 복지지출’이나 ‘복지국가 건설’과 같이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이 단지 분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즉,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확충하며, 조직의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이 향상되고 이것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임.
- 또한 그간의 한국 사회정책 의제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소득보장’, ‘사회적 투자’, 그리고 ‘좋은 일자리’라는 과제들을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반가운 외, 2019).
- 다만 『비전과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포괄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정책과제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의 틀로 구성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임.

- 구체적인 로드맵과 성과관리의 틀을 제시한 것은 『비전과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 발표된 『추진계획』으로, 다음으로는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3.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2019. 2)¹¹⁾

- 2019년 2월 발표된 『추진계획』은 기존에 제시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성한 로드맵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기존 『비전과 전략』은 복합적인 사회정책에 관한 과제를 균형 있게 포괄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도출되어 수요자(국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그림 2-11] 3대 비전, 9대 전략의 정책수요자 중심 재편성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4)

-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계획』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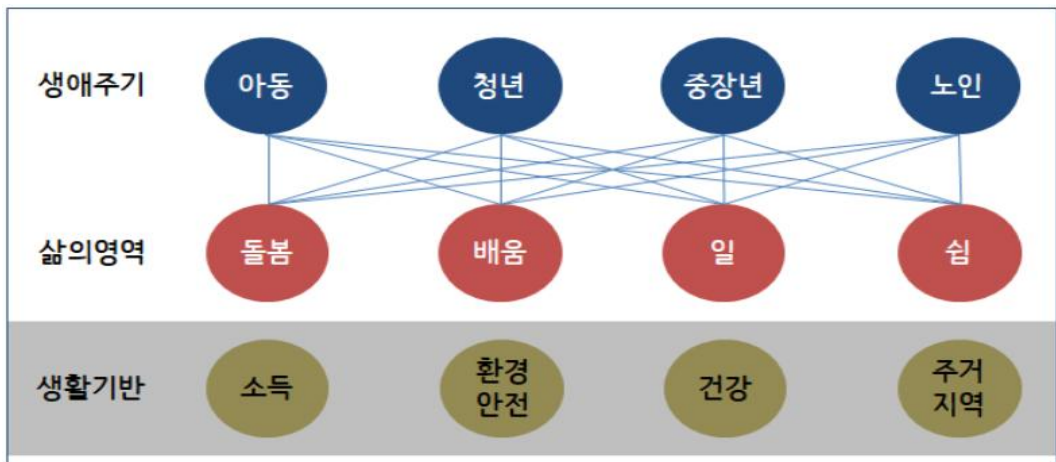
11)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인용이 없는 경우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을 참조하였음.

고 5개의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4개 생활기반(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재편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추진계획』의 주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음.

- 『추진계획』의 국민 ‘삶의 영역’은 개인의 삶의 과정을 「출생-영유아-아동청소년-취업-은퇴」로 연결되는 선형적 경로로 설정해 이에 부합하는 출산, 보육, 교육, 노동, 노인 정책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전 과정에 걸쳐 ‘돌봄’, ‘배움’, ‘일’, ‘쉼’과 같은 활동이 나타난다는 ‘중층적 생애주기 관점’을 반영한 것임(반가운 외, 2019).¹²⁾
- 생활기반 역시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인프라와 같은 개념으로 제시하였음.

[그림 2-12] 중층적 생애주기 개념도



자료: 반가운 외(2019: 145)

-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은 『추진계획』이 국민 삶의 5가지 영역과 4가지 기반에 걸쳐 주요한 정책목표(22개)와 정책과제(71개), 그리고 성과지표(82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점이 『추진계획』이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실질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임.

12) ‘노후’만이 이에서 벗어나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반가운 외(2019: 144-145)

<표 2-2>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개요

	정책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투명성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확대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지수 ·다문화 이해교육
배움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도입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기초학력 보장 강화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교학비 부담 ·대학 입학금 ·1인당 정부채원 장학금 지원액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현장실무능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강화 ·BK21 사업 개편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성장 지원	·고교학점제 확대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평생학습참여율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강화	·남성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0대 여성 고용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성과공유기업 확산 ·상생결제 확산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성과공유기업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일터 혁신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
삶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찰 현장 출동시간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근로자 휴가 지원	·연간 노동시간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정책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일터 사업	·문화예술 관람율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문화격차 해소	·문화기반시설 개소 수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노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규모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전국 확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 직접일자리 수 ·공익활동 수당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실 운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내실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치매환자관리율 ·방문건강관리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소득	고용안전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안정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수혜자 수 ·기초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경·안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노후경유차 감축·친환경차 보급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리기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미세먼지 농도(서울기준) ·노후경유차 수 ·친환경차 보급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산재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국민안전 체감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보호 확대 및 안전 체감도 제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아동학대 발견율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환경이 마련됩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생애 단계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뉴딜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 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주민건강센터 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에서 연구진이 요약

- 특히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의 실행여부를 관리하고자 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
- 후술하겠지만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는 정책과제의 도출 당시에 그 과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계획』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사회정책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정책영역 -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사회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책의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 수준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지표들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추진계획』이 완결성 있는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체계를 재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및 방향

1.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 앞서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이 ‘결과’(outcome) 수준에서 설정될 때, 정책 실행 주체의 유인구조 왜곡으로 인한 수단과 목적의 전도를 피할 수 있으나, 현재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를 그렇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투입, 산출, 결과 수준 모두에서 작성 가능한 것은 사실이며, 각각의 지표가 서로 다른 지표개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부분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는 결과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 『추진계획』의 경우 81개 성과지표 중 결과 수준의 지표는 16개에 불과하며, 산출 수준 지표가 39개로 가장 많고, 투입 수준의 지표가 21개로 뒤를 잇고 있음. 또한 결과 수준 지표의 절반이 특정 영역(환경·안정)에 집중되어 있음. 요컨대 성과지표체계의 구성 자체가 투입과 산출 위주로 이루어진 것임.
- 이는 『추진계획』이 「정책영역 -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을 반감시키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과관리의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의 목적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표 2-3> 『추진계획』 81개 성과지표의 투입, 산출, 결과 분류

영역	투입 (21개)	산출 (39개)	결과 (16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 -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수 - 다문화 이해교육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무상교육 시행 - 대학 입학금 -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 고교학점제 확대 -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ICT 인재 - 평생학습참여율 -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육아휴직 비율 -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 성과공유기업 수 -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 - 경찰 현장 출동시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여성 고용률 - 저임금 노동자 비율 -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 개소 수 -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노동시간 - 문화예술 관람률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 수당 -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 노인 직접일자리 수 	

영역	투입 (21개)	산출 (39개)	결과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교실 운영 방문건강관리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환자관리율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아동수당 수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경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경유차 수 친환경차 보급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농도(서울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산재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국민안전 체감도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여성폭력 피해(성폭력·가정폭력) 경찰 신고율 아동학대 발견율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주거지원(가구) 도시재생뉴딜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 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주민건강센터 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에서 연구진이 분류하여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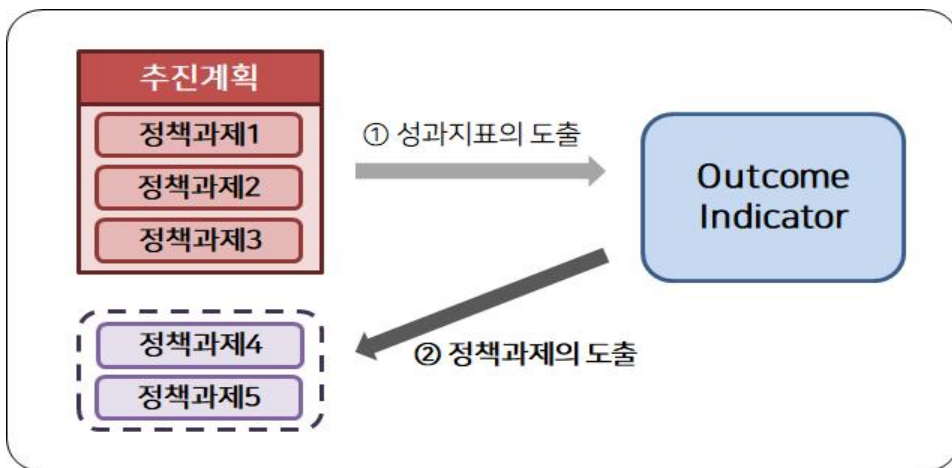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추진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개선 및 보완하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의 사회정책지표 보완이 필요

- 결과 수준의 사회정책지표는 각각의 『추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22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사회정책과제의 수행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
- 결과수준의 성과지표는 투입과 산출수준의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보완하여 성과를 측정함.
- 이를 통해 투입과 산출수준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수준의

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과제와 정책목표달성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충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수 있음.

- 그리고 이는 다시 투입 단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바, 결국 투입 → 산출 → 결과 → 투입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사이클을 구축하게 되는 것임.
- 이와 같은 과정은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계획』을 통해 형성된 혁신적 포용 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의 성과측정을 위해 사회정책지표를 설정하고, 다시 사회정책지표를 통한 성과점검이 사회정책 과제들을 보완하게 되는 것으로, “정책 중심의 연역적 접근”에서 시작해 다시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김석호, 2019)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13] 정책을 통한 성과지표 도출과
성과지표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의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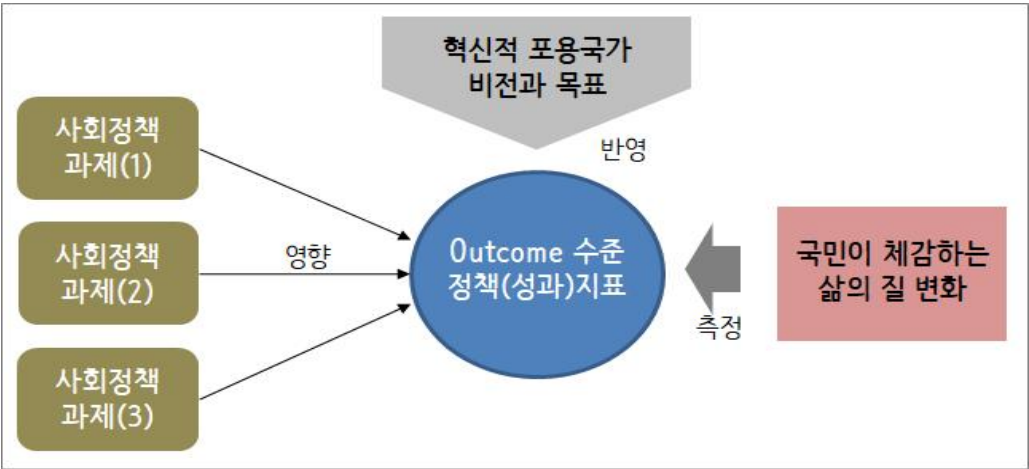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2.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작성방향

- 앞서 정책지표 작성의 6단계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작성은 6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함.
 - 통계개발원(2019)이 제시한 정책지표 작성의 6단계는 ① 측정목표 설정, ②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③ 지표선정 및 검토, ④ 결과종합, ⑤ 보고서 작성 및 활용, ⑥ 관리 및 보완임.
 - 그런데 『추진계획』은 이미 측정목표(국민 삶의 질 변화)와 이론적 프레임워크(3대 비전 9대 전략을 중층적 생애주기 관점에 따라 재분류한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실제의 지표작성은 3단계인 “지표선정 및 검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지표선정 결과를 종합하고(4단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임(5단계).
 - 6번째 단계인 관리 및 보완은 본 보고서 이후 도출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하는 과정이 될 것임.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에서 유의할 부분은 사회정책지표의 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정된 지표들이 ‘좋은 성과지표의 조건’(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참조)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임.
 - 첫째,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정책의 결과 측정).
 - 둘째,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의 결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표여야 함(정책과의 가설적 인과관계 성립).
 - 이 때 고려할 부분은 하나의 지표가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에 잠정적인 상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사회정책지표의 도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됨.

[그림 2-14]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두 가지 조건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제3장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검토

제1절 기존 정책지표 활용사례 검토

제2절 국내외 기존 사회 관련 지표 검토

제3절 소결: 기존 지표 활용 방향

제3장 ■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검토

제1절 기존 정책지표 활용 사례 검토¹³⁾

-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책지표의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국내외 정책지표 중에서도 정책에 대한 계획과 지표의 활용이 밀접하게 결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국내 사례로는 사회보장통계, 해외 사례로는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사례와 EU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 NAPs/inclusion), 그리고 EU에서 회원국의 사회 및 노동시장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PSR)와 사회적 점수판(Social Scoreboard)을 살펴봄.
 - 사례의 선정의 기준은 국내외의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과 정책지표 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정책지표를 활용한 경우를 선별한 것임.
 - 정책지표가 아닌 영역지표의 성격이 더 강한 사회지표들의 경우는 이어지는 2절에서 별도로 살펴볼 것임.

1. 한국의 사회보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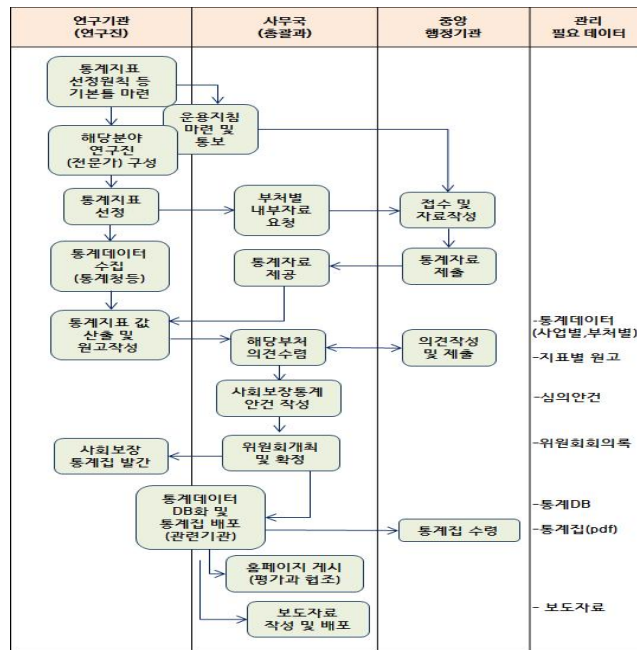
-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근거 중심으로(evidence-based) 지원하는 동시에 통계치를 통한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이 요구되어옴에 따라(고경환 외, 2012; 정영철 외, 2014),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를 위해

13) 본 절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이민아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이 제기됨(고경환 외, 2012).

- 첫째, 사회보장 관련 통계의 효과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형성의 기반을 마련함.
- 둘째,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만족도 증진을 위해 수급자인 국민의 개인적 정보, 즉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연계망을 구축함.

[그림 3-1]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관리업무 흐름도



출처: 정영철 외(2018)

-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그리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도입·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의 의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현행 체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에 관한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책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회보

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필요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계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관련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제시하였음(고경환 외, 2012).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여전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는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정영철 외, 2018).
 -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계수집의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넓혔고, 그리고 범위 역시도 2013년 가족, 보육 및 교육, 근로,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장해왔음.
 - 뿐만 아니라 신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0년 기준 269개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지표는 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각 정책분야 혹은 정책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평가는 사회보장통계에서 제공하는 정책목표 또는 정책분야별 성과지표로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업 또는 과제별 개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오윤섭 외, 2017; 오영민 외, 2019).
 - 이는 앞서 설명한 정책지표와 정책과제 간의 환류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통계가 당초의 목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 이러한 평가체계의 개별화는 제도 간 연계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사회보장통계 등 사회보장통계의 중장기적 관리와 현황 분석, 평가에 활용할 사회보장통계의 순차적 연계 및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연계방안 마련, 통합적 행정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오영민 외, 2019).

[그림 3-2]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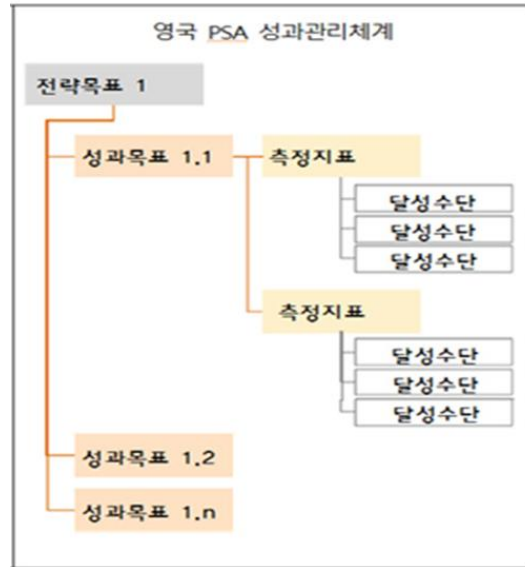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은 1998년 집권한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이 시행한 정부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임.
- 당시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1999년 발행한 『정부현대화백서(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를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 기반 정책(ideological led-based policy making)에서 벗어나 근거 중심의 정책 입안(evidence-based policy making)으로의 전환을 통한 정부개혁을 주장함(반가운 외, 2018).
- PSA의 도입과 시행은 정부정책의 성과평가와 정부재정 지출의 정당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진남·한승희, 2014).
- 각 전달전략에 대한 실행체계와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존 협정의 모호성을 극복함(반가운 외, 2018).

- 총 30개의 PSA는 모두 공통적으로 각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처의 장관이 이행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의 Senior Responsible Officer가 고위공직협정집행위(Senior Official PSA Delivery Board)의 의장으로 배정됨(최영준 외, 2012; 최영준 외, 2017; 반가운 외, 2018).
 - 관련 내각위원회는 성과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이행을 관리함. 부처간 이견 발생 시 이를 조정함.
 - 모든 협정에는 중앙정부와 지역차원 두 단계에서의 이행주체 및 관련주체와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예를 들어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PSA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부와 NHS가 관련 부처와 협력을 맺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는 PCT(Primary Care Trust)와 LAA(Local Area Authorities)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에 필요한 민간·제3부문과의 파트너십 조성 등의 내용까지 모두 명시함.
 - 공공서비스 및 공공지출 내각위원회(PSX)는 재무성(HM Treasury)과 함께 각 부처에서 제안된 목표가 정부의 전반적 목표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논의하며, 의회 산하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는 성과 및 정책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통보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함.
 - 또한 각각의 PSA에 따른 비전 및 전략과 평가뿐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PSA는 성과중심주의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각 전략목표 아래 성과목표를, 그리고 각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배치함으로써 정책과 측정지표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됨(최영준 외, 2012; 최영준 외, 2017).
 - 각각의 PSA는 국가의 변화중심 수행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진행 정도를 측정함. 또한 이 지표들의 일부는 특정 국가목표치(national target)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이 동반됨.
 -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개입의 적정성도 평가 범주에 포함됨. 각 부처는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적·관리함.
 - 각 부처의 성과목표는 기관운영 및 정책개선을 위한 관리 목적 외에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배정에 연계되도록 노력함.

[그림 3-3] PSA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자료: 최영준 외(2017: 120)에서 일부 수정

- PSA는 크게 네 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PSA 전달전략이 해당 대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은 각각 경제성장, 고용, 이민정책, 직업훈련, 과학기술 증진, 수송망, 기업활동 환경 등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함.
 - 둘째,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기회’는 아동 청소년 복지, 빈곤 완화, 고용, 노인복지 등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함.
 - 셋째, ‘더 강력한 지역사회와 더 나은 삶의 질’에서는 건강과 복지, 주거환경, 안전한 환경, 사법체계 개선, 알코올 및 약물 피해 감소, 국외 테러 방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넷째,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대응안을 비전으로 제시함.
- 이 중 사회정책과 관련된 일부 PSA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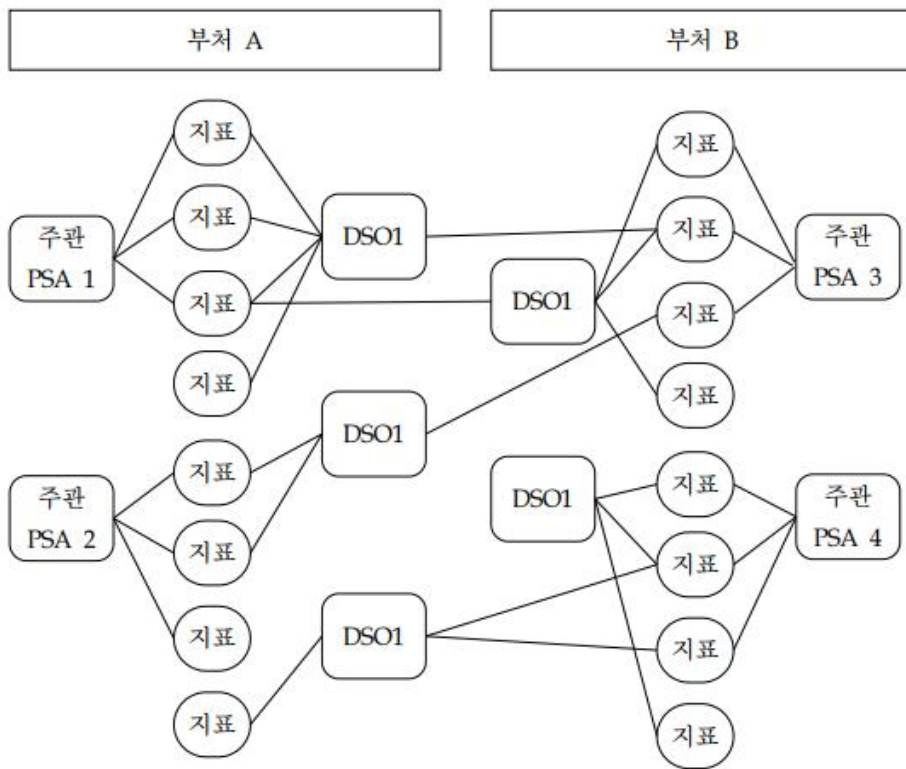
<표 3-1> 사회정책 관련 PSA의 목표와 활용지표 및 관련기관

목표	활용지표	관련기관
9. 아동빈곤 감소	절대빈곤가구의 아동의 수, 상대빈곤가구의 아동의 수, 상대빈곤가구 및 물질적 결핍을 겪는 아동의 수	잡센터플러스, 아동학교가족부, HMSC, 지역당국, 장애및돌봄서비스국
10, 11. 아동청소년 교육성취 향상 및 격차완화	아동 및 청소년기 학업성적 달성률, 소득분위별 전업학업참여격차 등	아동학교가족부, 가족아동청년위원회
12. 아동청소년 건강 및 안녕감 증진	6~8주 모유수유 보급률,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의 비율, 아동비만수준, 정신건강 및 안녕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CAHMS), 장애아동부모의 서비스 및 ‘핵심 서비스(core offer)’ 경험	아동학교가족부, 잉글랜드 간호부, 지역당국, 1차 의료신탁, 정부사무소, 전략적보건당국, 공중보건 지역책임자
13. 아동청소년 안전증진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비율, 7일 이내 초기사정을 받은바 있는 보호아동의 비율, 아동청소년 부상으로 인한 응급입원, 아동사망리뷰패널과정을 통한 방지 가능한 아동사망 수	아동학교가족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부,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 혁신대학기술부, 문화미디어체육부, 재무성, 총리실전달유닛(PMDU), 내각실, 교통부, 국경이민국
14. 아동청소년 성공	16~18세 NEET족의 감소, 긍정적인 활동 참여 증대, 불법약물·알코올·취발성용제 남용 감소, 18세 이하 임신률 감소, 10~17세 초범 형집행 감소	아동학교가족부, 법무부, 지역당국, 1차의료신탁, 전략적보건당국, 청소년 변호팀, 경찰, 제3부문 기관, 학교, 대학 등
15. 소수자성 인지	성별임금격차, 독립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권·통제·유연성 수준, 여성·소수인종·장애인의 공적생활참여, 고용차별, 서비스 이용시 공정성	여성부, 정부평등국, 9개 정부사무소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인구에 대한 보호	시설 내 사회적 배제 성인인구 비중, 고용·교육·훈련 중인 사회적 배제 성인인구 비중	지역사회및지역정부, 법무부, 아동학교가족부, 노동연금부, 보건부, 혁신대학기술부, 잡센터플러스
17. 노인빈곤 및 복지	50~69세 고용률, 저소득 연금수급자 비율, 65세의 건강기대수명, 주거 및 이웃환경에 만족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노동연금부, 지역협정, 연금서비스국, 보건부, 아동학교가족부, 문화미디어체육부, 지역사회및지역정부, 교통부
18. 국민 건강 및 안녕감 증진	전 연령 사망률, 잉글랜드와 다른 지역간 전연령 사망률 격차, 흡연율, 재가인구 비율, 심리치료 접근성	보건부, 지역사회및지역정부, 아동학교가족부, 법무부, 환경식품농촌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식품기준국, NHS, 수입및관세청, 재무성, 1차 진료신탁, 지역당국
19. 공공서비스 강화	환자/서비스 이용자가 평가한 경험, NHS가 보고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대기시간, 임신 12주에 건강검진 및 사회서비스 사정을 위해 산과 혹은 의료전문인을 대면한 여성 비율, 장기간 조건, GP 서비스, 감염률	보건부, 지역사회지방정부, NHS, 1차진료신탁, 지역당국, 지역공공의료 집단, 정부사무소, 전략적 보건당국

출처: Treasury, H. M. S.(2007a; 2007b; 2007c; 2007d; 2007e; 2007f; 2007g; 2008a; 2008b; 2008c)

- 영국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각각의 중앙부처가 PSA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처 전략목표(Department Strategic Objectives, DSO)를 설정했다는 것임. PSA가 중앙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면, DSO는 각 부처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개별 부처는 PSA와 DSO를 연계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PSA와 마찬가지로 타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반가운 외, 2018).

[그림 3-4] 영국 공공서비스 협정과 부처목표의 연계



자료: 반가운 외(2018: 261)

- 영국 PSA의 사례는 정책과제와 정책지표의 연계 및 이를 통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가짐(반가운 외, 2018: 264~267).
- 첫째, 부처 목표와 전체 정부 목표를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목표체계의 일관성 및 연결성

- 둘째,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 전략과 수단을 도출하는 성과 중심주의를 통한 정책관리 거버넌스
- 셋째,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위원회 구조의 수립
- 이 중 특히 ‘성과 중심주의’는 그간 정책의 투입이나 산출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지표의 달성이 곧 정책목표의 달성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EU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 NAPs/inclusion)

- 2000년 리스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을 향후 유럽의 향방으로 지정하고 회원국 및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음(European Commission, 2004).
 - 전통적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정책 목표를 사회통합으로 확장하면서 경제적 지표인 소득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인 교육, 직업훈련, 노동능력, 건강, 주거환경, 사회참여, 상대적 박탈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게 됨.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2004년 『사회통합에 대한 합동보고서(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를 발간하면서 15개 회원국에게 공동의 목표와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음.
 - 여기서의 국가행동계획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의 여러 정책을 망라하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정책수단, 추진주체, 예산, 정책 예상 효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를 포함한 현실적이고 즉각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일컫음(강신욱 외, 2005).
- 국가행동계획의 뚜렷한 목표는 ‘2010년까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인 사람의 수 감소’에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공통 목표는 크게 4가지가 제시됨. 공통 목표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2> EU 국가행동계획의 공통 목표와 가이드라인

목표	가이드라인
1.1. 고용 증진	(a)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남녀를 위한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 접근성 증진 (b) 인적관리, 노동조직 및 평생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 증진에 의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방지
1.2.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 접근성 증진	(a) 인간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 보장과 구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보호시스템 조직 (b) 모두에게 적절하고 위생적 거주환경 제공 (c) 어느 상황에서도 접근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d) 배제위험군을 위한 교육, 사법 및 문화, 스포츠, 레저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개발
2. 배제 위험 방지	(a) 지식기반사회와 신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력 활용으로 장애인 포함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 (b) 부채, 학교이탈, 노숙 등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생애주기 위기를 감지하는 정책 시행 (c) 모든 형태의 가족 연대를 보전할 수 있는 행동 시행
3. 가장 취약계층을 지원	(a) 장애, 이민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빈곤 위험에 처한 이들의 사회통합 증진 (b)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고 사회통합 기회를 부여 (c) 배제된 지역을 위한 종합행동 개발
4. 모든 관련기관 동원	(a)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관련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참여와 자기실현 (b) 정책 전반에 배제와의 투쟁을 넣기 (c) 유관기관, 공공과 민간 사이 대화와 파트너십 조성

출처: European Commission(2004)에서 저자가 정리

○ 상기한 공통 목표에 대해 국가행동계획은 8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04).

- 첫째, 모두를 위한 권리와 기회로서의 포용적 노동시장 개발 및 고용 증진.
- 둘째,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에 필요한 적정 임금과 자원 보장.
- 셋째, 예방을 통한 교육적 불이익 제거 및 평생교육 기회.
- 넷째, 성 평등 증진과 개별 가족 구성원의 권리·혜택 및 아동권 보호로 가족 연대 보전.
- 다섯째, 모두를 위한 좋은 주거 보장.
- 여섯째, 질 좋은 (보건의료, 교통, 사회, 돌봄, 문화, 여가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
- 일곱째, 서비스 전달 개선.
- 여덟째, 다수의 박탈이 일어나는 지역 재생.

- 국가행동계획에서는 통계지표를 성과지표로써 활용하였고, 여기에 활용된 정책지표들은 2001년 레이켄 유럽 이사회(Laeken European Council)에 의해 결정되었음. 총 18개의 지표가 성과평가에 활용되는데 1차 지표에는 10개, 2차 지표에는 8개가 해당되며 1, 2차 지표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추가적으로 3차 지표는 회원국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음(강신욱 외, 2005).
- 국민행동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1, 2차 지표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음.

<표 3-3> EU 국가행동계획 지표

1차 지표	2차 지표
이전 후 저소득비율 소득분배 저소득 지속성 상대중위저소득격차 지역적 유대 장기실업률 무직가구 인구수 조기퇴학을 기대수명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저소득선 부근의 소득분포 특정시기 저소득 비율 이전 전의 저소득 비율 지니계수 저소득 지속성(중위소득 50% 이하) 장기실업률 초장기실업률 저학력 인구

출처: 강신욱 외(2005: 74-75)

- 지표에 따른 수치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에 관해서 레이켄 유럽 이사회는 비교가 가능한 공통의 용어 정의 및 산정 방식이 있어야 함에 동의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04).
- 데이터는 두 가지가 활용됨.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EU 노동인구조사(EU Labor Force Survey)를, 소득 관련 지표는 유럽커뮤니티가구패널(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사용했다가 2003년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제(EC)에 따라 EU 소득과 생활조건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로 대체됨.
- 또한 각 지표에 따른 수치를 산출하는 공통의 방법론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함.

<표 3-4> EU의 사회적배제 지표의 상세: 1차 지표

	지표	지표정의
1a	빈곤율 -연령/성별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연령대: 0~15세, 16~24세, 25~49세, 50~64세, 65세 이상
1b	빈곤율 -경제활동상태별	중위소득 60% 이하의 16세 이상 인구중 주된경제활동 상태 별로 본 빈곤율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은퇴, 비경활동)
1c	빈곤율 -가구유형별	중위소득60%이하가구에사는사람의비율 -30세이하1인가구,30~64세1인가구,65세이상1인가구,2인무 자녀성인가구,미성년자녀와성인가구등
1d	빈곤율 -주거형태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 자가, 임대 (한국: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등)
1e	빈곤선	빈곤선 액수(중위소득 60%) - 단독가구,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3	빈곤지속성	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에 속하는 사람수
4	상대적빈곤격차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5	지역적응집도	지역간 취업률의 편차
6	장기실업률	경향인구 중 ILO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비율
7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실업가구에 사는 0~65세의 가구원 수
8	학업중퇴자율	18~24세 사이의 중등교육(ISCED 21))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 고 현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동연령대에서 차지하 는 비율
9	평균기대수명	출생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
10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상위20%와 하위20% 집단에 속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WHO정의에 따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정의한 사람의 비중
11	빈곤 산포 (dispersion)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50%, 70%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
12	특정 시점 빈곤율	1995년을 기준으로 - 1997년 상대적 빈곤율 - 1994/96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1995년 상대적 빈곤율
13	이전소득이전의 빈곤율	빈곤율 -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 - 연금 포함한 소득 - 모든 공적 이전소득 이후
14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15	지속빈곤율 (중위소득의50%이하)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16	장기실직자비율	전체 실직자 중 장기 실직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7	극장기(verylong) 실직자비율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극장기 실직자(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8	저학력 비율	연령 집단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로 ISCED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 외(2005: 105)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을 통해 유럽이사회는 서로 다른 회원국들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국가별 계획수립 및 3차 지표 결정), 동시에 EU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공통의 기준(공통 정책목표 및 가이드라인, 1·2차 지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EU의 국가행동계획은 유럽차원의 공통의 조약을 통해 공통의 문제인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지표관리를 도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러 회원국이 공존하며, 개별 국가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EU 거버넌스의 한계로 회원국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강신욱 외, 2005).

4.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coreboard¹⁴⁾

- 유럽연합은 이전에는 없던 세계화, 디지털 혁명, 노동양식의 변화 및 인구발전이라는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따른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발전이 함께하는 유럽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준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2015년 용커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 유럽의회의 조인을 받아 ‘유럽 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이하 EPSR)’이 발표됨.
- EPSR은 유로존 국가 및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약속이며 책임으로써, 연합차원과 회원국 차원에서 각기 다른 국가적 체제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도입이 명시되어 있음.
- 2018년 유럽 집행위원회는 연간성장조사국 위원회(Commission in the Annual Growth Survey)가 정한 정책 우선순위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가 각 회원국의 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 고려되도록 권고함.
- EPSR은 유럽 고용사회위원회(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Council, EPSCO)의 자문정책위원회인 사회적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와 SPC가

14)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Social Scoreboard 웹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 최종접속일: 2020-02-25

EU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프레임워크인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을 통하여 각국의 사회보호 및 사회투자를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표 및 관리수단을 선정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EU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ESPR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회적 점수판(Social Scoreboard)’이 활용됨(European Commission, 2018b).

<표 3-5>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의 원칙과 사회적 점수판의 지표

대원칙	핵심 원칙	지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노동시장 접근	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성평등 동등한 기회 적극적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4세의 조기퇴학자 비중 - 20-64세의 고용률 성별격차 - 분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S80/S20 -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배제 비율 - 15-24세 NEET족 비율
역동적 노동시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사회적 보호 및 통합	안전하고 적응가능한 고용 적정 최저임금 고용환경에 대한 정보와 해고 보호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일-생활 양립 건강하고 안전하며 잘 적응된 노동 환경과 데이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4세 고용률 - 15-74세 실업률 - 인당 실질 총가처분가구소득
사회적 보호 및 통합	아동돌봄 및 지원 사회적 보호 실업급여 최저임금 노인소득 및 연금 보건의료 장애인 통합 장기요양 거주 및 노숙자 지원 필수 서비스에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감소를 위한 (연금 이외의) 공적이전 효과 - 3세 이하 공적돌봄을 받는 아동 - 주관적 미충족 의료 - 기본적 디지털 기술 보유 비율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8a), European Commission(2018b)에서 연구진이 요약

- ESPR 성과지표로써의 Social Scoreboard는 2018년 발간된 합동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 JER)에서 처음 제시되었음.

- JER은 회원국이 ESPR 달성에 있어 공통으로 사용하여 국가간 정책 성과평가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표 산출에 공통으로 적용할 개별적 방법론까지도 함께 제시하였음. 또한 보고서에서 산출된 지표의 수치들은 모두 Eurostat에서 수집된 것임.
 - 유럽 집행위원회는 JER의 사회적 점수판이 노동 및 생활여건의 모니터링,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성과와 사회보호성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점수판 지표의 결과를 분석하여 각 회원국의 ESPR 성과를 측정함. 공통된 방법론으로 산출된 공통의 수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JER에서는 각각의 지표에 따라 회원국의 순위를 분석한 바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8b).
- 추이의 파악 및 점수 산출 결과에 따른 사회적 점수판의 점수는 상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되며, JER의 기준에 따라 나누면 크게 다음과 같음. 다만 이는 가장 널리 적용되는 기준이며, 지표에 따라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음.

<표 3-6> ESPR 점수에 따른 성과

점수	
1. -1.0 미만	아주 좋은 성과
2. -1~0.5 사이	좋은 성과
3. -0.5~0.5 사이	보통의(neutral) 성과
4. 0.5~1.0 사이	나쁜 성과
5. 1.0 초과	아주 나쁜 성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b: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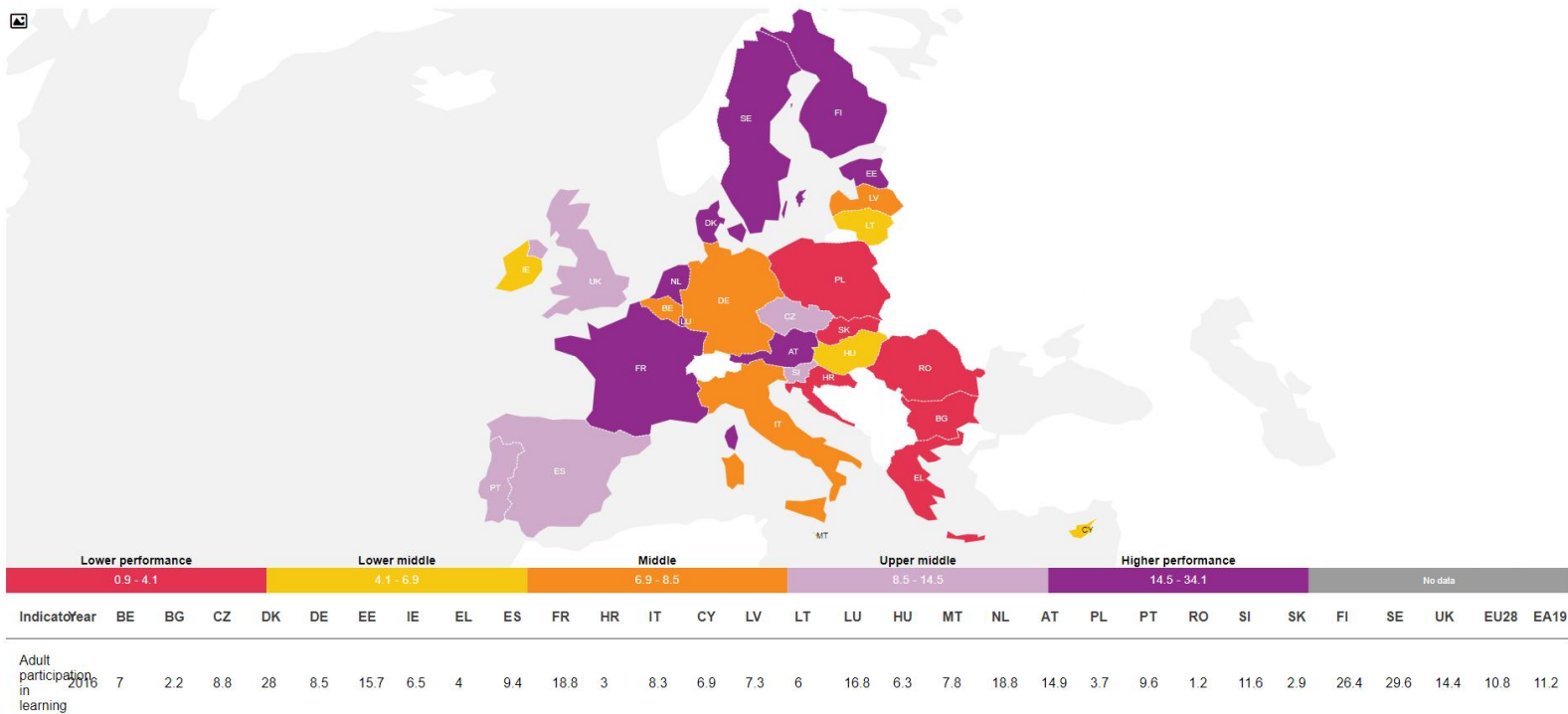
- 분석 결과는 ‘경제정책조정을 위한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 of economic policy coordination)’에 반영하여 예산책정에 산입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Hacker, 2019).
- 유럽예산회기제는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따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예산회기제의 일환으로 2018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를 권고하면서 ESPR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 정책권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를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회원국들이 자국 내 개혁 프로그램에의 ESPR 활용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Hackers, 2019).
- 4개국은 ESPR의 목표/사회적 점수판을 국가정책에서 직접 언급하거나 연계하였음. 그러나 4개국은 ESPR을 간략하게 또는 간접적으로만 언급하였고, 3개국은 인지하는 수준에 그침.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16개국은 ESPR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함.

[그림 3-5]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Country Map 사례: 성인 학습 참여율(2016년)

Adult participation in learni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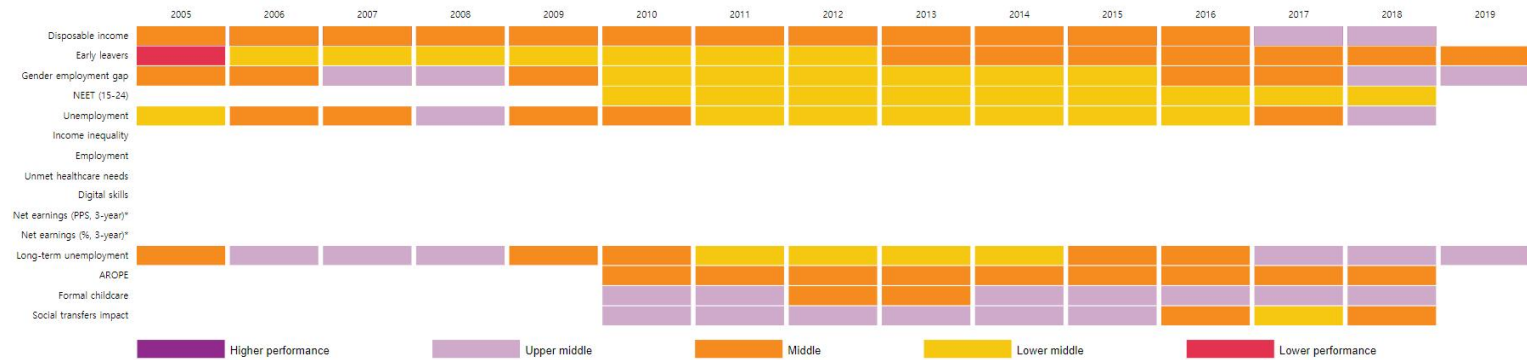


* The headline indicator on net earnings should be read and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other indicators, such as the in-work poverty rate, the wage dispersion indicator (D5/D1) and other relevant EPM/SPPM and JAF indicators.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Social scoreboard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explorer?primary-chart=worldmap>). 최종접속일: 2020-03-06.

[그림 3-6]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정책영역별 성과의 Heatmap 사례

European Union heatmap



* The headline indicator on net earnings should be read and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other indicators, such as the in-work poverty rate, the wage dispersion indicator (D5/D1) and other relevant EPM/SPPM and JAF indicators.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Social scoreboard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explorer>). 최종접속일: 2020-03-06.

5. 소결

- 이상과 같이 정책지표의 국내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음.
 - 특정한 정책영역을 목표로 하여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정책지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사례는 영국 신노동당의 PSA 사례로, 영국의 경우 목표-과제-지표의 연계뿐 아니라 이를 정부 전체의 거버넌스 차원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 문제의 해소에도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음.
 - EU 사례의 경우는 정책목표와 지표체계를 초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마련과 실행은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실행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목표와 정책지표를 연계하여 회원국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경우 정책지표는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에 놓고 있었으며,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출(output) 지표를 활용하였음. 즉, 성과중심 정책관리에서 정책지표의 핵심은 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수준 정책지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의 정책지표 사례로 제시한 사회보장 통계의 경우 사회보장 정책의 성과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입, 산출, 결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별 혹은 과제별 평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오윤섭 외, 2017; 오영민 외, 2019), 향후 정책지표와 정책의 성과평가 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국내의 기존 사회 관련 지표 검토¹⁵⁾

- 본 절에서는 국내의 주요 사회 관련 지표들의 구조와 개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5) 본 절의 내용은 한양대학교 이다미 박사와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 국내 사회 관련 지표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를 살펴볼 것이며, 해외의 사회 관련 지표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와 EU의 QoL(Quality of Life)를 살펴볼 것임.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역별 지표와 정책지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지표 작성에 앞서 국내외 주요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표들이 사회정책지표 체계에 포함될 지표들의 Pool이 될 것이기 때문
- 사회정책의 성과는 결국 사회지표들이 다루고 있는 삶의 질,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지표들 중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가 1차적인 후보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내외 사회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각 지표의 구성에 관해 개괄적으로만 살펴봄.

1. 국내 사회 관련 지표

-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주요 지표체계들로 사회지표(1979), e-나라지표(2006), 녹색성장지표(2011), 삶의 질 지표(2014), 국가발전지표(국가주요지표)(2014) 등이 있음. 여기에서는 이 지표들 중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이 깊은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를 살펴보고자 함.
- 녹색성장지표는 사회지표라기보다는 환경지표의 성격이 더 강할 뿐 아니라 환경 관련 주요 지표들 중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주요한 내용은 삶의 질 지표나 국가주요지표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에 제외하였음.
- e-나라지표는 국가발전지표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도 사회정책 관련 영역에서는 다른 지표들과 중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 세 가지 지표체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박영실 외, 2017).
- 사회지표는 한국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을 제시하는 가장 오래된 영역지표의 하나로, 특히 사회정책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 삶의 질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주제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국가발전지표는 가장 넓은 포괄범위를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분야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지표임.

<표 3-7> 검토대상 주요 사회 관련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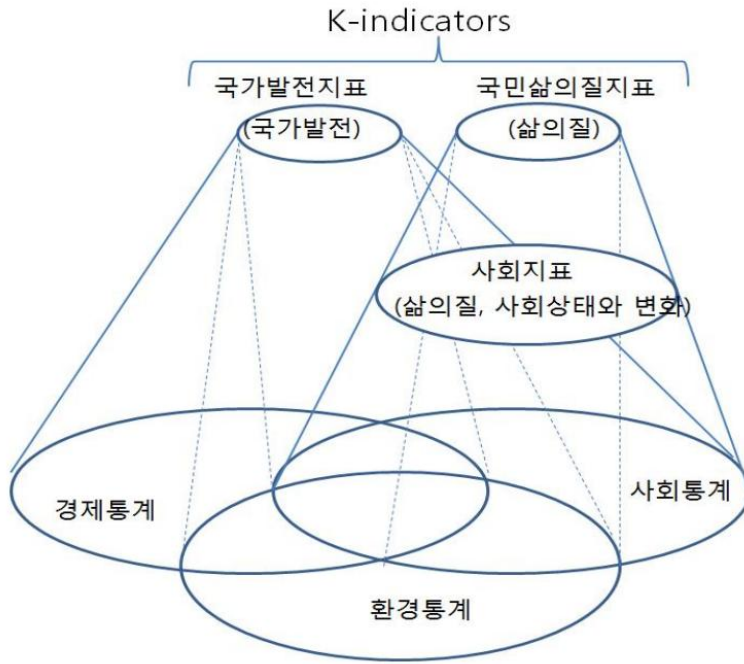
구분		국가발전(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시작		2014	2014	1979
작성목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고 국민 복리에 기여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개편시점		2016	2014	1995, 2004, 2012, 2019*
핵심개념		국가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의 질, 주관적 웰빙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작성주기		1년	1년	1년
지표 체계 구조	계층1	3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12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등)	11개 영역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계층2	14개 영역	-	-
	계층3	50개 하위영역	-	54개 하위영역
	계층4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 96개	81개 지표	277개 지표
강조분야		사회>환경>경제	사회>환경	사회>경제
국제비교		○	×	○

주: 2019년에 사회지표 개편이 진행되었으나, 본 장의 작성시점인 2019년 2월까지 발표되기 전으로 이 부분의 내용은 2012년 개편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자료: 박영실 외(2017: 26)에서 연구진이 편집

-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국가발전지표 간의 위상관계를 [그림 3-7]과 같이 살펴보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지표의 부분집합 성격이, 그리고 국가발전(주요)지표는 삶의 질 지표는 사회지표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한준 외, 2018).
- 그러나 이는 측정의 개념상의 위상관계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모든 개별지표가 사회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는 아님.

[그림 3-7] 주요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자료: 한준 외(2018: 18)

○ 이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음.

가. 한국의 사회지표¹⁶⁾

○ 개요

- 작성 기관, 작성 주기: 통계청, 1년(1979년 이후 매년)
- 작성방법: 통계청 및 각 통계 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작성되며,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조사 및 행정통계 자료들로,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됨(통계청, 2018).

○ 작성 목적

-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고 사회 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16)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없는 경우 통계청(2018)과 통계청(2019)를 참조하였음.

- 이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통계청, 2012).

○ 기능 (장영식 외, 2004)

- 국민생활 수준 측정
-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 사회변화의 예측
-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측정

○ 지표 구성: 11개 부문 281개 지표 (2018년)

<표 3-8> 한국의 사회지표 구성

11개 부문	하위영역						
1.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2.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시스템				
3. 가구·가족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4.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5.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취업현 황	임금근로자 근로조건	노사관계			
6. 소득·소비	소득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및 투자	조세 및 재정		
7. 주거·교통	주택공급관리	주거상황	주택시장	주거의 질	교통 시설/체계/복지/환경		
8. 환경	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		
9. 안전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	형사사법활동		
10. 문화·여가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 활용			
11. 사회통합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 장

자료: 통계청(2018). pp.491~50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연혁

- 1972년: UN에서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안 제시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現 통계청)에서 UNFPA의 지원 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함.
- 1978년: 사회지표체계 수립

- 1979년: 한국의 사회지표 최초 작성 공표(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 8개 부문 350개 지표로 구성하여 출범)
- 1987년: 1차 개편 - 영역 확대(8개→9개) 총 468개 지표
- 1995년: 2차 개편 - 영역 확대(9개→13개) 총 553개 지표
- 2004년: 3차 개편 - 주관적 지표의 확대(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심리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 특정집단별(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국제비교 지표의 확충(장영식 외, 2004)
- 2012년: 4차 개편 - 이전 3차례의 개편이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등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사회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둠 → 불필요한 지표를 삭제하고 전체 지표수를 줄이면서(640개→284개), 사회변동이라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삶/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짐, 국제비교 지표의 발굴·확대(석현호 외, 2012)

<표 3-9>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변화

	최초 작성 (1979년)	1차 개편 (1987년)	2차 개편 (1995년)	3차 개편 (2004년)	4차 개편 (2012년)
영역 및 지표수	8개 영역 350개 지표	9개 영역 468개 지표	13개 영역 553개 지표	13개 영역 640개 지표	11개 영역 284개 지표
영역	1. 인구	1. 인구	1. 인구	1. 인구	1. 인구
			2. 가족 (신설)	2. 가족과 가족	2. 가족과 가구
	2. 소득·소비	2. 소득·소비	3. 소득과 소비	3. 소득과 소비	3. 소득과 소비
	3. 고용·노사	3. 고용·노사	4. 노동	4. 노동	4. 노동
	4. 교육	4. 교육	5. 교육	5. 교육	5. 교육
	5. 보건	5. 보건	6. 보건	6. 보건	6. 건강 (변경)
	6. 주택·환경	6. 주택·환경	7. 주거와 교통	7. 주거와 교통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신설)	8. 정보와 통신	(삭제)
			9. 환경(분리)	9. 환경	8. 환경
	7. 사회	7. 사회	10. 복지 (신설)	10. 복지	(삭제)
		8. 문화·여가 (신설)	11. 문화와 여가	11. 문화와 여가	9. 문화와 여가
	8. 공안	9. 공안	12. 안전	12. 안전	10.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신설)	13. 정부와 사회참여	11. 사회통합 (변경)
개편 내용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사회 관심의 변화 반영	지방자치제 실시, 세계화, 정보화 반영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반영	삶·사회의 질, 불평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지표 개발

자료: 석현호 외(2012), p.96, 1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특징

-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작성되기 시작한 지표임.
- 투입·과정·성과 지표를 모두 다루지만 가치지향성은 높지 않음(한준 외, 2018).

나. 국민 삶의 질 지표¹⁷⁾

○ 지표 개발 배경

-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높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저출산·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세대·남녀 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불평등·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 이에 경제학적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부 생활영역별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됨.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의 기본 개념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작성함.

○ 목적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봄.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특히 한국 사회의 장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각 영역별 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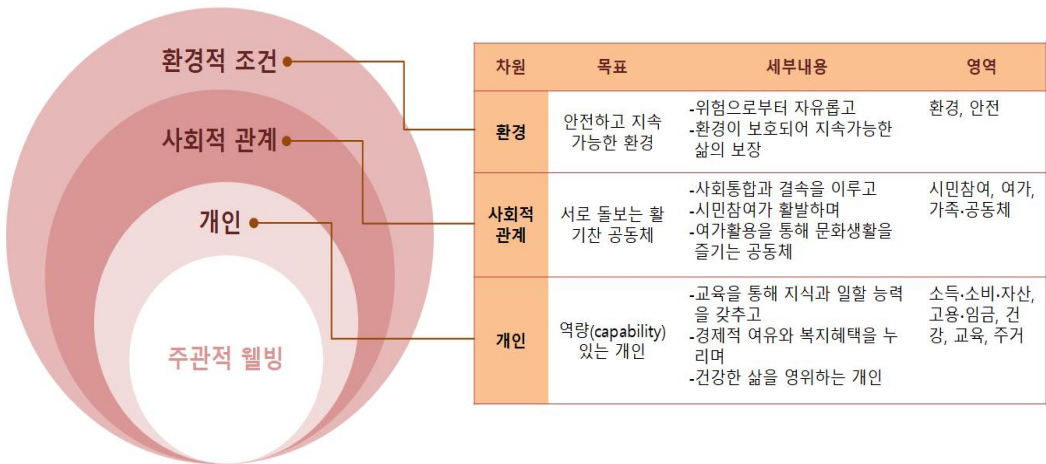
○ 지표 구성

- 11개 영역 71종 지표로 구성

17)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가지표체계(국민삶의질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qol>)을 참조하였다. 최종접속일: 2020년 3월 22일.

-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
-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3개 차원으로 구성
-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성 요소(3개 차원, 11개 영역으로 구성):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동심원 형태로 구성됨.

[그림 3-8]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틀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s://www.index.go.kr/unify/intro.do?page=qol>). 최종접속일: 2019.01.17.

○ 연혁

- 2011년: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여 지표체계 개발
 - OECD의 Better Life Index(BLI)의 기초가 된 스티글리츠 보고서, 일본의 신 국민생활지표(PLI), 생활개혁지수(LRI), 캐나다의 캐나다웰빙지수(CIW),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NH), 네덜란드의 삶의 만족 지표(LSI)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2018년 지표개편
 -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관계 조정을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거시적 내용의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에 중점을 둠
 - 이미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 정책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지표나 중복되는 지표를 조정함.
 - 영역 개편: 기존 12개 → 11개 영역(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거시 지표인 '사회복지' 영역을 삭제함)

- 중분류 삭제: 기존 지표체계는 하위영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 영역 명칭 변경: ‘문화·여가’→‘여가’
- 지표 조정: 신규 지표 8개, 삭제 지표 17개

<표 3-10> 국민 삶의 질 지표 주요 변화

2011년	-외부와 공동으로 프레임워크 개발(12개 영역, 84개 지표)
2012~2013년	-신규지표 개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전문가 회의 개최
2014년	-1차 지표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서비스(12개 영역, 81개 지표)
2016년	-제1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 -지표체계 검토(12개 영역, 80개 지표)
2017년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발간 -국민의견수렴
2018년	-국가지표체계 통합 서비스 -지표체계 개편(11개 영역, 71개 지표)

자료: 심수진(2019), p.68

○ 특징 (정해식 외, 2018)

-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춤
- 주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님
- 물질부문, 비물질부문을 모두 포괄하며,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 등 다층 수준 지표를 포함
- 한국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 수준이 변화한 추이를 확인하는 데에 효과적임.
- 「국가주요지표」와 달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의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지표체계 검토 및 개선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표체계를 수정·보완
- 지표체계의 면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가주요지표」에 비해 영역이 12개로 더 적지만, 「국가주요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관적 웰빙이 포함됨
-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가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단위의 삶의 질 요소와 사회 단위의 사회의 질 요소가 혼재함.

<표 3-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선정기준

1. 자료의 질	-공식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시계열 확보: 동일척도로 반복적인 특정자료가 누적
2. 적절성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비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이해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 가능한 지표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국내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3. 중립성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qol>). 최종접속일: 2019.01.17.

<표 3-1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체계

대분류 (객관, 주관)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3, 2)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5, 2)	기대수명(+), 건강수명(+),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인지율(-)
교육 (3, 3)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5, 1)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소득·소비·자산 (5, 2)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가계부채 비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4, 2)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5, 1)	통근시간(-),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 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3, 6)	미세먼지농도(PM2.5)(-), 농어촌상수도보급률(+), 1인당도시공원면적(+)	대기질 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안전 (7, 2)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사회안전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시민참여 (2, 5)	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기관 신뢰도(+), 시민의식(+), 대인신뢰도(+),
주관적 웰빙 (0, 3)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자료: 변준석 외(2019), p.96

다. 국가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¹⁸⁾

○ 개발 배경

- 경제, 사회, 환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가발전 상황 점검 및 방향 설정
-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progress)의 측면에서 살펴봄

○ 지표 선정 방법

-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고, 중요(important)지표가 아닌 핵심(key) 지표로 선정
 - 국가 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
 -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
 -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의 지표
 - 웰빙과 지속가능성의 관건이 되는 핵심 지표

○ 연혁

- 2012년: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연구 실시
- 2013년: 국가주요지표 기본 체계 마련
 - 16개 영역, 143개 주요지표, 178개 보조지표, 128개 국제비교지표 총 449개 지표로 구성
- 2014년: 대국민 서비스 시작(4월)
- 2016년: 체제개편 연구
- 2017년: 개편 지표체계 서비스 제공(4월)
- 2019년: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정립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마련, 지표체계 개편 (7월)

○ 특징

-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통계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인 삶의 질, 공동

18)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가지표체계(국가발전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kor>)을 참조하였다. 최종접속일: 2020년 3월 22일.

체, 사회의 질, 거시적 국가발전을 모두 포괄함.

- 투입요소가 아닌 성과요소 중심의 지표임.
- 방향성이 분명하고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를 포함함.

○ 주요 개편 내용

- 2016년
 - 영역, 하위영역, 지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표 축소(14개 영역, 하위영역 50개,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지표 97개)
- 2019년
 - 삶의 질 지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주요지표의 목적을 '국가발전' 측정으로 단일화
 - 명칭변경: 국가주요지표 → 국가발전지표
 -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명칭, 측정방법, 출처를 표준화

○ 지표 구성(2019)

- 16개 영역, 61개 하위영역, 93개 주요지표, 107개 보조지표로 구성
- 주요지표를 보완하는 보조지표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지표를 함께 수록

<표 3-13> 국가발전지표의 지표체계 현황

	영역 (16개)	하위영역 (61개)	지표
경제	성장	성장	경제성장률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투자	총고정투자율
		인적자원	교육연수
		기업동학	창업률
		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글로벌화	수출입비율(GDP 대비)
	안정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안정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사회	여가	금융안정	BIS자기자본비율
		여가지원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범죄와	여가결과	여가생활만족도
		범죄발생	범죄율

	영역 (16개)	하위영역 (61개)	지표
	사법정의	범죄피해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치안	기소율,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사회통합	시민성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연대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환경		포용성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자생생물종수
		육상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경제, 사회		해양수산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수자원	1인당 물사용량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고용형태	비정규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임금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만족	일자리만족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소득·소비·자산	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소비	가구중위소비
		자산	가구순자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교육	교육기회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육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교육효과	고등교육이수율
사회,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미세먼지(PM2.5)농도
		수질	4대강 BOD농도,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율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유해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환경관리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환경만족도	체감환경만족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자연재해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전력	1인당 전력소비량, 석탄화력 발전비율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경제, 사회, 환경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주거의 질	1인당 주거면적, 인구 1000명당 주택수주거환경만족도
		교통인프라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인구비
	가족	가구형성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족관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비만율, 월간 폭음률, 현재 흡연율
		보건의료서비스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kor>). 최종접속일: 2020.01.17.

2. 해외 사회 관련 지표

- 해외에는 다양한 사회 관련 지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의 용이성과 자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초국가 수준의 지표체계인 OECD의 BLI와 EU의 QoL을 살펴보기로 하겠음.
- 물론 ‘사회지표’라는 관점에서 OECD나 EU 등 국제기구의 지표가 엄밀한 프레임워크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높은 추상 수준과 거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 개별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으나(이재열 외, 2014), 본 연구에서 국내외 사회 관련 지표를 살펴보는 목적은 다음 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위한 후보지표를 추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음.
- OECD의 BLI나 EU의 QoL은 국제적 수준에서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과 같은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들과 연관되어 형성되어온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사회 관련 지표들은 한국의 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선정의 참고자료로 삼기에는 좀 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어, 해외사례지만 한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지표들은 국제 지표체계에 좀 더 잘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하에서는 두 가지 주요 해외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음.

가. OECD Better Life Index¹⁹⁾

-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교육,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주요지표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개발 배경

19)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OECD BLI 웹사이트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를 참조하였음. 최종접속일: 2020.03.22.

- 2011년 OECD는 『How's life?*』 보고서에서,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웰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의 세 차원을 고려한 삶의 질 수준의 측정지표를 제안
- 평가대상국: OECD 35개국 + non-OECD국가 포함(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향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
 - *'How's Life'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보고서(2009)의 권고와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 국가통계청(NSO)에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됨
 - *2년마다 발간되어 지금까지 2011, 2013, 2015, 2017, 2020년 총 다섯 차례 발간됨

○ 목표

- 사회의 웰빙 측정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함
-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특징

- 경제시스템인 GDP보다는 '사람': 평가의 중심에 '사람(개인 및 가구)'이 있으며, 그들의 생활 환경과 웰빙 경험에 초점
- 인풋(input)이나 아웃풋(output)보다는 '아웃컴(outcome)':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측면인 웰빙 성과에 초점을 둠
-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함
- 이용자가 직접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합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국가별 비교가 가능, 또한 각각의 지표는 성별(남/여) 비교가 가능
- 평균뿐만 아니라 불평등(inequality)에도 관심: '평균을 초월하여(going beyond the average)'
- OECD BLI의 지수화 방식: OECD는 BLI 지표를 표준화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지수화하는 과정을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각 BLI 이용자들이 부여하는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OECD, 2017).

○ 지표 구성

-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 물질적 생활조건: 주거, 소득, 일
- 삶의 질: 커뮤니티,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참여

○ 의의 (정해식 외, 2018)

- 유사한 발전 단계를 공유하는 OECD 가입국이 대상이므로, 선진국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 및 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
-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사회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제안함.
- 특정 시점의 삶의 질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한 사회의 취약 영역을 발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BLI를 구성하는 통일된 영역 및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국가를 확인하여,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제도 발전의 역사를 탐색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거가 됨.

○ 한계 (김미곤 외, 2017)

-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이는 OECD 가입국이 공유하는 규범적인 지향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양적 지표를 활용해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이므로, 국가 혹은 사회의 하위 단위에 적용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 지표 정의에 부합하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을 수 있음.

<표 3-14> OECD BLI 지표체계

구분	11개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 조건	주거 (Housing)	주거관련 지출 (Housing expenditure)
		기본시설을 갖춘 가구 (Dwellings with basic facilities)
		1인당 방의 수 (Rooms per person)
	소득 (Income)	가계 금융자산 (Household financial wealth)
		가계 순가처분소득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직업 (Jobs)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개인소득 (Person earnings)
		고용률 (Employment rate)
		장기 실업률 (Long-term unemployment rate)
삶의 질	공동체 (community)	사회 관계망의 질 (Quality of support network)
	교육 (Education)	기대교육기간 (Year in education)
		학생들의 역량 (Student skills)
		교육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환경 (Environment)	수질 (Water quality)
		대기오염 (Air pollution)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투표율 (Voter turn-out)
	건강 (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안전 (Security)	살인율 (Homicide rate)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장시간 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웹사이트(<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최종접속일: 2020.03.22.

나. EU Quality of Life²⁰⁾

○ 개요

- EU회원국(28개국)의 삶의 질을 측정
-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나타내므로, 그동안 주로 사용된 GDP지표를 보완
-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안전 등 물질적 측면을 넘어서는 가치를 측정

○ 개발 배경

- 2009년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보고서 발간: 경제, 환경, 사회적 지표를 발전시키고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5가지 우선적 행동들을 제시함.
-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웰빙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더 나은 12가지 방법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함.
- 2010년 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됨(프랑스국가통계국(INSEE)과 유럽통계국(EUROSTAT))
 -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소득, 소비, 부의 분배적 측면과 가계의 관점을 강화할 것, 삶의 질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것 등
- 2015년 위원회는 'Quality of life' 보고서 발행

○ 구성

-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8+1' 영역으로 구성
 - 8개 영역: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스스로 정의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 1개 영역: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인 '삶의 전반적인 경험'

○ 특징

- 지표별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며, EU 평균값을 제공

20)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Eurostat(2017)에서 발간한 온라인간행물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quality of life indications』 참고하였음.

○ 헤드라인 지표(List of headline indicators) 선정기준

- 일반적 기준

- 관련성, 정확성과 신뢰성
- 시의성
- 비교 가능성(회원국 간 수준의 적절함)
- 명확성

- 특별한 기준

- 객관적,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
- 계속성: 향후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일관성: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연관된 프레임워크
- '상' '중' '하'로 그룹화할 수 있는 가능성: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교
- 반응성
- 명확성

<표 3-15> OECD QoL의 지표체계

영역(8+1)	지표
1. 물질적 생활 환경 (Material living conditions)	Median income
	S80/20 (inequality of income)
	Severe deprivation rate
2. 생산적·핵심 활동 (Productive or main activity)	Employment rate
	Job satisfaction
3. 건강 (Health)	Life expectancy
	Self-perceived health status
4. 교육 (Education)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5. 여가와 사회적 상호작용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Satisfaction with time use
	Help form others
6. 경제적·물리적 안전 (Economic and physical safety)	Inability to afford unexpected expenses
	Homicide rate
	Perception of crime, violence or vandalism in the living area
7. 거버넌스와 기본권 (Governance and basic rights)	Trust in the legal system
8. 자연·생활 환경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Urban pollution
	Perception of pollution, grime or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living area
9.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Overall experience of life)	Life satisfaction

자료: Eurostat Quality of life 웹사이트(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qol/index_en.html) 참고.

최종 접속일: 2020.03.22.

제3절 기존 지표 활용 방향

- 이상과 같이 국내의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 현황을 살펴보았음.
 - 정책지표의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정책지표 활용의 관건이 정책과 지표가 어느 정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운영되는가에 있음. 초국가 단위의 정책지표라는 점에서 정책과의 밀접성에 한계가 있는 EU Social Score Board를 별도로 하면, 영국의 PSA, EU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한국의 사회보장통계 모두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그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사회 관련 지표 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역지표로서의 사회 관련 지표들에는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주관적 웰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표들의 상당수는 앞서 살펴본 정책지표체계에 활용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사회지표 및 사회정책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후보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앞서 살펴본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체계에 포함된 주요지표들을 『추진계획』의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기반(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의 틀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지표 선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형성된 후보지표들 중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전술한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와의 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며, 부가적으로는 지표의 주기와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제1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과정

제2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결과

제3절 향후과제

제4장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제1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과정

1. 작성과정 개요

○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설정

- 사회정책협력망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여 향후 정책지표 선정을 위한 기준과 5개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별 핵심지표를 검토함.
- 연구진 및 위탁기관 간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을 및 내용을 재설정하여, 사회정책지표 도출 범위를 기존 5개 삶의 영역에 4개 생활기반 영역(소득, 환경·안정, 건강, 주거·지역)을 더해 총 9개의 삶의 영역·생활기반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표-정책 관련성 분석보다는 영역별 성과지표 도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조정
- 영역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델파이 조사 내용을 사회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보완하고 델파이 조사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함.

○ 기존 지표 분석 및 후보지표 선정

- 국내외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에 제시된 기존 성과지표 82개와 사회정책협력망 검토 시 제안된 일부 지표를 추가하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할 후보지표를 선정함.
- 국내외 기존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인 5개 삶의 영역과 4개 생활기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지표가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 분류에서 투입, 산출, 성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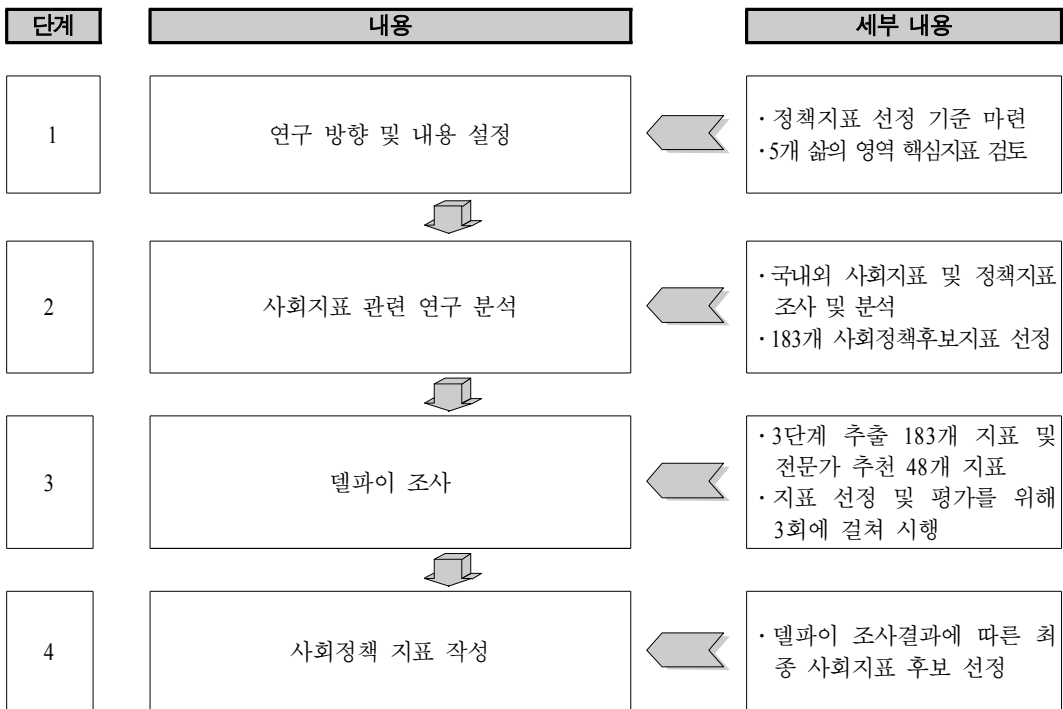
○ 델파이 조사

- 관계 부처와 연구진 및 전문가 간 협의를 거쳐,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사회정책 협력망 참여 전문가, 기타 지표 및 영역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총 20명의 델파이 조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선정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

○ 사회정책지표 선정

- 델파이 조사 결과, 정책목표별 지표의 균형, 선정된 지표의 활용상의 용이성, 후보 지표 간의 중복이나 포함관계, 정책지표로서의 활용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그림 4-1] 사회정책 지표작성 과정



자료: 연구진이 직접작성

2. 후보지표 선정과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한 후보지표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국내의 정책지표와 주요 사회 관련 지표들이었음.
 - 이는 이 지표체계들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혁신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가 및 사회발전이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검토한 주요 지표체계들은 다음과 같음.
 - ① 한국의 사회지표: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결정 및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② 국민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지표로 측정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③ 국가발전지표(국가주요지표): 경제, 사회, 환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가발전 상황 점검 및 방향 설정하여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progress)의 측면에서 살펴봄.
 - ④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기준으로 14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보장의 주요현황을 269개 지표로 제공하는 정책지표로, 사회정책 중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
 - 여기에 더하여 2019년 현재 진행 중이었던 사회지표 개편 과정에서 추가 지표로 논의되고 있었던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추가하였음.
- 다음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와 선정된 지표의 국제비교를 염두에 두고 OECD와 EU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를 후보지표로 검토하였음.
 - ① OECD BLI(Better Life Index):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교육,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주요지표를 비교 분석함.
 - ② Quality of Life: EU회원국(28개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된 GDP지표를 보완하여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안전 등을 포함해 물질적 측면을 넘어서는 가치를 측정함.

- 국내외 지표체계의 검토는 각각의 지표를 국민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에 따라 구분하고, 동시에 정책주기단계(투입, 산출, 결과)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지표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지표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면서 국민 삶의 질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적합성이 떨어지는 지표, 혹은 지표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기타의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정책지표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일부 제외하였음.
 - 또한 사회정책지표 작성의 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주기상 ‘투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중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후보지표에서 제외함.
- 2019년 발표된 『추진계획』에 포함된 81개 지표들과 사회정책협력망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비록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이 지표들이 결과(outcome) 측면에서 사회정책 성과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진계획』의 평가를 위해 도출된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들로, 다른 지표체계를 통해 도출된 지표들과 함께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또한 사회정책협력망을 통한 지표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지표들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이를 통해 선정된 183개 지표로 이를 기반으로 1차 델파이조사 수행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

영역	지표
돌봄 (15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나홀로 아동 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장애인의 (I)ADL 제한율

영역	지표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유아교육 취원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배움 (26개)	교육비 부담도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기초학력 미달률
	학업성취도(PISA) 수준
	성인역량(PIAAC) 수준
	장애인 교육수준
	학업성취도(TIMSS) 수준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학교교육 효과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성과인식
	고졸이하 청년 업훈련 참여율
	성인 문해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대학졸업자 취업률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학생역량지수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학교폭력 피해율
일 (30개)	저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격차(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영역	지표
	임금 5분위 배율
	남성육아휴직 비율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직무 스트레스
	일자리 만족도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조직률(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여성국회의원 비율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평균근속년수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쉽 (19개)	총 근로시간
	여가시간
	휴가활용
	여가시간 충분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생활체육 참여율
	여가시간 만족도

영역	지표
	공공도서관 이용률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여가 지출률
	양육여성 여가시간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인당 여행일수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노후 (12개)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환자 관리율
	사회적 고립도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 직접일자리 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은퇴연령
소득 (15개)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영역	지표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소득 만족도
환경·안전 (33개)	산업재해를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범죄피해율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대기질 만족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국민안전 체감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질 만족도
	범죄피해 두려움
	환경성 질환자 수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야간보행 안전도
	녹지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토양환경 만족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화재 사망자 수
	환경향상 체감도

영역	지표
	기후변화 불안도
	자살 사망자 수
건강 (19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식생활 실천율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건강수명
	의료미충족률
	노인진료비
	흡연율
	월간 폭음률
	기대수명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영아사망률
주거·환경 (14개)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통근시간(5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1인당 주거면적
	주택만족 가구 비율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 1차 델파이 조사 시 전문가들에게 기존 후보 지표에는 없지만 각 영역별 사회정책 평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표의 추천을 주관식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48개 지표를 추가 추출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시 후보 지표에 포함하였음.
- 각 영역별 전문가들은 주관식 설문을 통해 58개의 지표를 추천하였음.
 - 추천된 지표 중 1회성 조사로 그쳤거나 부정기 조사로 사회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 개념적 정의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조사되고 있지 않은 지표들은 후보지표에서 제외하였음.
 - 그 결과 48개의 지표를 후보지표에 포함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표 4-2>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가된 후보지표

영역	지표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돌봄서비스 만족도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인원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배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성인 독서량
일	여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대비 남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장애편의시설 개수
	장애인 장기(3년 이상) 고용률
	여성 경력단절 기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쉼	유연근무제 적용비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영화관 이용률
	문화바우처 이용률
노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치매발견율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소득	빈곤갭
환경·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소방시설 설치율
	도로포장률
건강	어린이 예방접종률
주거·지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1km ² 당학교수(초/중/고)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노후주택/건물 비율

3. 델파이 조사²¹⁾

가. 델파이 조사 방법의 적용

○ 델파이 조사 방법론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수행했던 신전의 이름인 델파이(Delphi)에서 유래함.
- 양적 연구조사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반복적으로 취합한 후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질적 연구조사 기법임.
- 델파이 조사의 논리적 근거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다”

21) 1~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부록2]에 제시되어 있음.

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타당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있으며(이종성, 1989: 34에서 재인용), ①반복과 환류, ②익명성, ③합의, ④통계적 표현 등의 특성을 지님.

- 델파이 기법은 특히 ①조사장소의 물리적 제한성 극복, ②특정 분야 전문가의 정보를 통한 응답 결과의 신뢰성 제고, ③익명성 보장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제시, ④ 반복적인 응답 과정 중 전문가 집단의 응답 결과 확인 및 판단 등의 장점을 지님.
- 델파이 조사의 참여하는 전문가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학술적 업적 및 활동에 따라 연구진의 직접 선정 또는 추천에 의해 선발할 수 있으며,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인 설문조사의 실시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의 주제, 시간,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차례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횟수별 설문지는 참여 전문가의 응답을 통해 매회 새로운 설문지로 재구성되며, 설문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응답의 동질성이 제고되며 최종적으로 일정한 합의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방법 적용

- 본 연구의 경우 수많은 사회 영역 관련 지표 중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를 선별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영역 간 내용의 차이가 커 델파이조사를 통해 단순 지표 선정 시 한계가 발생할 위험
- 예컨대 소득 영역의 전문가가 환경·안전 영역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문제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였거나, 사회정책 협력망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추진계획』의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하였음.
- 또한 전문가 선정 시 9개 영역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최종 평가 시 해당 영역 전문가 의견을 전체 평점과 별도로 고려함으로써 일정의 가중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조사의 엄밀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나. 델파이 조사 진행과정

- 본 연구의 사회정책 지표 선정과 관련한 델파이 조사는 상기한 이론적 근거와 내용에 기초하여 선별된 영역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됨.
- 조사 참여 전문가들은 <표 4-3>과 같으며, 진행과정은 <표 4-4>에 정리하였음.

<표 4-3> 델파이 전문가 최종 명단

연번	영역 구분	선정 구분	소속	직위
1	돌봄	연구진 추천	○○○○연구소	연구위원
2		연구진 추천	○○○○연구원	부연구위원
3	배움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대학교	교수
4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개발원	연구위원
5	일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연구원	연구위원
6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쉼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원
8	노후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9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0	소득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1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2	환경·안전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	건강	연구진 추천	○○○○○○○연구원	부연구위원
14	주거·지역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위원
15	지표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개발원	서기관
16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위원
17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정보원	연구위원
18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9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연구원	연구위원
20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표 4-4> 델파이 조사 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준비	2019.6.17.~ 2019.12.22.	· 연구진 및 부처 협의를 통한 사회정책 후보지표 선정 · 연구진 및 부처 협의를 통한 델파이 20명의 전문가 선정 ·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지 작성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설문지의 수정 보완 및 확정
델파이 설문조사 실시	2019.12.23.~ 2020.1.20.	· 1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2차 설문조사지 개발
	2020.1.21.~ 2020.2.9.	· 2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3차 설문조사지 개발
	2020.2.10.~ 2020.2.17.	· 3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평가 및 정리	2020.2.17.~	·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정리 및 평가 · 사회정책지표 추출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 1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19년 12월 23일 ~ 2020년 1월 3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조사목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제시된 사회정책후보 지표²²⁾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 평가기준: 참여 전문가들에게 지표의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기준은 ①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②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1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③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임.
- 조사의 주요 내용:
 - ① 9개 영역별(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환경) 183개의 사회정책후보지표에 대해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
 - ② 사회정책후보지표에 대해 제시되지 않았으나 영역별 정책평가를 위해 제안할

22)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기준은 ①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②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1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③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임.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및 기타 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게 함.

- ③ 응답 편의를 위해 사회정책후보지표의 영역, 정책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수행기관, 조사주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표정의를 참고자료로 제공함.

[참조]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

I. 「돌봄」에 대한 설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좌측에 제시된 돌봄 영역 정책목표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나홀로 아동수	①	②	③	④	⑤
------------	---	---	---	---	---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돌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 2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20년 1월 21일 ~ 2020년 1월 28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1차 델파이조사와 동일한 대상)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전문가 개인별 발송 및 회수
- 조사목적: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정책후보지표별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표별 점수 확정
- 조사의 주요 내용:
 - ① 1차 조사 결과를 개인별로 제시하고 본인의 1차 점수와 전체 전문가 평균 점수를 참조하여 최종 조정점수 기입 및 추가의견 주관식 제시
 - ② 1차 조사의 주관식 설명에 제시된 내용 중 추가적 후보지표, 기존지표 통합, 지표의 분류 변경 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지 보완하여 제시함.

[참조]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

I. 「돌봄」에 대한 설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보편적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 나홀로 아동 수	3.79	4	3	4	(4)
추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					()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 3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20년 2월 10일 ~ 2020년 2월 17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1·2차 델파이조사와 동일한 대상)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전문가 개인별 발송 및 회수
- 조사목적: 1~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가선평정된 사회정책지표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최종 평가하여 사회정책지표의 우선순위 점검
- 조사의 주요 내용:
 - ①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선정된 9개 영역의 성과지표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재평가함.
 - ② 9개 영역별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게 함.

[참조] 3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I. 「돌봄」 영역의 성과지표**

다음은 『돌봄』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돌봄』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돌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수혜율	()	()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	()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4.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를 5점 척도로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하였음.
- ① 전문가들의 평점이 4점(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인 지표를 우선 선정
- ② 『추진계획』 상의 22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후보지표를 분류했을 때, 정책목표 내에 4점 이상인 지표가 없을 경우 해당 정책목표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를 추가 선정
- ③ 전체 조사 대상자들이 부여한 점수가 100점 환산 시 75점 이상이면서, 해당 영역 전문가가 부여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추가 선정(단, 해당 정책목표 내에 ①의 기준에 부합하여 선정된 지표가 충분한 경우 선정하지 않음.)
- ④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관식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
- ⑤ 선정된 지표들의 유사성 및 조사주기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표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통합
- 이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의 시계열을 추출하며, 시계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하였음.

제2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결과

1. 사회정책지표 작성 결과 설명

- 델파이 조사와 연구진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4개의 지표를 선정했으며, 이를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된 『추진계획』 상의 삶의 영역(9개)과 생활기반(4개)에 따라 배치하면 <표 4-5>와 같음.²³⁾

23) 지표의 선정에 활용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부록3]에 제시하였음.

<표 4-5> 선정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64개)

구분		지표명
삶의 영역	1.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2. 배움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 일	3-1. 고용률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4. 쉼	4-1. 총 근로시간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5. 노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구분		지표명
생활 기반	6. 소득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3. 실업급여 수급률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7. 환경/안전	7-1. 환경(대기, 하천, 토양, 소음, 녹지환경) 만족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8.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사·도 격차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 주거/지역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주. 각 지표에 대한 상세한 조작적 정의는 [부록1]을 참조할 것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의 핵심 목적은 결과(outcome) 수준 성과지표를 발굴에 있었으며, 실제 도출된 지표의 약 63%인 40개 지표는 결과 수준으로

분류가 가능

- 그러나 결과수준 지표를 영역별로 보면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선정된 지표 전체가 산출(output)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돌봄의 성과를 주관적 만족도 외의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영역 특성 과도 관련되며, 향후 돌봄 영역의 성과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줌.

<표 4-6>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정책주기 분류(투입, 산출, 결과)

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일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 고용률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쉼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4-1. 총 근로시간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노후	5-5. 설립 구분별 장기요양보호시설 비중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등록율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소득		6-3. 실업급여 수급률 6-6. 공적연금 수급률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1. 환경 만족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3. 비급여 본인부담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사도 격차 8-6.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산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선정된 64개 지표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이는 사회정책과 사회지표에 대한 강조가 GDP로 대표되는 ‘평균적인’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²⁴⁾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결과 수준

의 성과지표가 선정되지 못했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지표가 결과수준일 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은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당초 후보지표로는 20개의 주관적 지표가 있었으나, 이 중 선정된 지표는 5개에 불과했음(5개 지표 중 전문가 설문에서 80점 기준을 만족한 지표는 3개).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표 4-7 참조)

<표 4-7> 후보지표 중 주관적 지표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선정여부

지표	점수(100점 환산)	영역 내 순위	선정여부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58.9	18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72.6	8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78.9	4	
교육비 부담도	88.4	1	선정
학교생활 만족도	64.2	21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59.0	35	
일자리 만족도	75.0	20	
직무 스트레스	76.0	15	선정
여가시간 충분도	78.0	6	선정
여가시간 만족도	74.0	9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84.2	3	선정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71.6	9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2.6	8	
소득 만족도	62.0	16	
대기질 만족도 외 4개*	78.9	8	선정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71.6	26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69.5	29	
주관적 건강상태	66.0	19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67.4	18	
주거환경 만족도	77.9	7	

24) 물론 델파이 조사 결과로부터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별 지표수의 균형보다는, 각 지표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도 함.

- 넷째, 일부 지표들은 조사 과정에서 분류상의 이슈가 제시되었음. 대표적으로 실업률의 경우 초기에 소득 영역의 지표로 분류되었으나 일 영역에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각각의 지표가 특정 영역 혹은 특정 정책목표에 배타적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아래 지표와 『추진계획』상의 22개 정책목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시하겠음.
 - 선정된 지표들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 사회정책지표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음.
- 사회정책 지표체계 도출 시 1차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한 것은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으로 분류된 9개 영역이었지만,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22개 정책목표 역시 고려하여 후보지표를 제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지표선정과정에서도 22개 정책목표를 고려하였음.
- 선정된 64개 지표를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에 따라 배치하면, <표 4-8>과 같음.
 -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일부 지표들은 서로 다른 영역의, 혹은 같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책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이는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가 여러 정책 및 정책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음.
 - 일부 정책목표의 경우 선정된 지표가 1개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 단위의 관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배움 영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의 경우 선정된 지표 역시 이 정책목표의 개념을 ‘교육성과 개선’으로 확대했을 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PISA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 외에도 돌봄 영역의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와 쉼 영역의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의 경우도 지표의 수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음.

<표 4-8> 사회정책지표(64개)의 『추진계획』 상 정책목표에 따른 분류

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 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교육성과> 개념으로 확대 시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일	일과 육아를 남남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비율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중복해당(배움/일) 중복해당(배움/일)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중복해당(일 영역 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 경력단절 여성비율(자녀연령별)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중복해당(일 영역 내) 중복해당(일 영역 내)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3-1. 고용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중복해당(일/취업)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6-1. 실업률	중복해당(일/소득)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4-1. 총 근로시간	

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노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1. 실업률	
		6-3. 실업급여 수급률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6-2. 연령대별 빈곤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 환경 만족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중북해당 건강주거지역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중북해당(주거지역 내)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중북해당(주거지역 내)
주거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지역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중복해당(건강/주거지역)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 내)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 내)

2. 사회정책 지표체계와 『추진계획』의 기존 지표체계 비교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에 포함될 지표 선정 과정에서 기존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82개 성과지표를 후보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부 지표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와 중복됨.
- 다만 종전과 달리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산출(output) 지표 중 ‘이용자 수’ 혹은 ‘수혜자 수’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가능한 비율화하였으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집단의 중요성이 높은 지표의 경우 해당 집단의 통계를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포괄적인 통계를 지표로 선정하고 후술할 통합영역쟁점(cross-cutting issues)을 지렛대 작성 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기존 지표와 차이가 있음.
-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64개 지표 중 20개의 지표가 이전의 82개 지표와 중복되는데, 이 중 8개 지표는 지표의 형태와 범위 등의 차이가 있어 완전히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12개 지표임.
- 중복지표 발생에 있어서도 영역별 차이가 있는데, 일 영역이 4개로 가장 많고, 돌봄·환경·안전·건강 영역이 각각 3개씩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사회정책지표체계에서 도출된 지표의 숫자나 결과 수준의 지표가 부족한 영역이 돌봄이었음을 고려하면, 돌봄 영역의 경우 향후 보완의 과제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음.

<표 4-9> 사회정책지표 중 기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지표

영역	기존 지표와 중복	기존지표와 차이
돌봄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기존 지표를 비율화 기존 지표를 비율화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수혜금액 외에 수혜율 추가 참여율 외 참여시간 추가
일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3-5. 저임금 근로자 비율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 고용률	남성육아휴직 외 전체 육아휴직 추가 30대 여성 고용률 외 집단 추가
쉼	4-1. 총근로시간 4-5. 인구 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기존 지표를 비율화
노후	5-4. 치매환자 등록율	
소득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기존 지표를 비율화
건강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기존 『추진계획』의 81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기존 지표를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작성된 사회정책지표를 보완적인 지표로 볼 경우 기존 지표와 새로운 지표를 결합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표 4-10>에 제시한 것과 같이 12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결합된 지표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체계에 제시된 투입-산출-성과 지표 간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기반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표 4-10> 『추진계획』 상 기존지표와 작성된 사회정책지표의 통합 성과지표 체계

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돌봄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지수 다문화 이해교육	
배움	고교무상교육 시행 대학 입학금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청소년 컴퓨터 등 복지시설 고교학점제 확대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ICT 인재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용	교육비 부담도 기초학력 미달률 학업성취도(PISA) 수준
일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고용률 경력단절 여성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임금 5분위 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성과공유기업 수 경찰 현장 출동시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취업자 비율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쉽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총 근로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휴가활용 문화예술 관람률
노후	설립 구분별 장기요양보호시설 비중 공익활동 수당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실 운영 방문건강관리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환자등록율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 직접일자리 수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소득	기초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아동수당 수혜자 수	실업률 연령대별 빈곤율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변화 소득5분위배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노후경유차 수	환경 만족도 산업재해율

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친환경차 보급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산재사망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범죄피해율 자살 사망자 수 국민안전 체감도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아동학대 발견율
건강		의료비 지출 비중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식생활 실천율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신혼부부 주거지원(가구) 도시재생뉴딜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 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주민건강센터 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주. 음영 표시한 지표들은 기존 81개 지표에서 추출한 지표임. 두 지표체계에 중복되는 지표는 음영표시 하지 않음.

3. 추가 검토 사항

가. 중요도와 시급성

- 선정된 64개 지표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이 지표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음. <표 4-11>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표 4-11> 선정된 사회정책지표들의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구분	지표	중요도	시급성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42	4.16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63	4.47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4.47	4.21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4.21	4.11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4.21	4.21
배움	2-1. 교육비 부담도	4.26	4.26
	2-2. 기초학력 미달률	3.84	3.79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3.84	3.84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3.74	3.16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3.47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4.00	3.74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68	3.47
일	3-1. 고용률	4.60	4.25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15	4.00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25	4.00
	3-4. 경력단절여성 비율	4.30	4.35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4.60	4.25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55	4.25
	3-7. 임금 5분위 배율	4.40	4.15
	3-8. 노동소득 분배율	4.40	4.20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20	3.80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65	3.45
	3-11. 직무 스트레스	3.90	3.70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3.80	3.85
쉼	4-1. 총 근로시간	4.60	4.40
	4-2. 여가시간	4.35	3.90
	4-4. 휴가활용	4.05	3.75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3.55	3.25

구분	지표	중요도	시급성
노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53	4.42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3.79	3.53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47	4.37
	5-4. 치매환자 등록율	4.26	4.16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16	3.89
소득	6-1. 실업률	4.45	4.30
	6-2. 연령대별 빈곤율	4.65	4.55
	6-3. 실업급여 수급률	4.15	3.85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4.40	4.05
	6-5. 소득5분위배율	4.35	3.85
	6-6. 공적연금 수급률	4.15	3.90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45	4.50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4.65	4.60
환경/안전	7-1. 환경 만족도	4.00	3.95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32	4.32
	7-3. 산업재해율	4.68	4.53
	7-4. 산재사망률	4.53	4.42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3.95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58	4.47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4.58	4.42
	7-8. 범죄피해율	4.21	4.21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4.25	4.00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65	4.65
	8-3. 비급여 본인부담	4.25	3.90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50	4.35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20	3.90
	8-6. 비만유병률	3.60	3.40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3.65	3.10
주거/지역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74	4.42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4.16	4.11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2	4.32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95	3.79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00	3.84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4.05	3.74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4.16	4.00

주. 지표 "4-3.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3차 델파이 조사가 발송 이후 추가 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지표로,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은 유사하거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전문가들이 사회정책 성과지표가 단기간의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세 가지 지표에서는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경력단절 여성비율, 장시간 취업자 비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의 세 가지였음. 이 중 장시간 취업자 비율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각각 3.80, 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두 가지는 각각 4.30, 3.35와 4.45, 4.50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보여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시급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한국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불충분성, 맞벌이 여성의 일·가사 이중부담 등과 관련되며, 낮은 출산율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짐.
- 매우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은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문제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성 각각의 점수가 4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지표들을 4가지 유형(중요하고 시급한, 중요하지만 시급성은 낮은,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음.

- 분류결과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급성이 중요도보다 높은 지표들이 모두 두 가지 다 상대적으로 높거나(경력단절 여성비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상대적으로 낮은(장시간 취업자 비율)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사회정책 지표의 경우 대체로 시급한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임.
-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그룹의 지표들에 ‘중요하고 시급한’ > ‘중요하지만 시급성은 낮은’ >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표 4-12>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63개(추가 선정되어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4-3. 여가시간 충분도” 제외)를 A, B, C 그룹으로 분류한 것임.

<표 4-12>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분류

A. 중요하고 시급한 (36)	B. 중요하지만 덜 시급한 (15)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2-1. 교육비 부담도 3-1. 고용률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4-1. 총 근로시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3. 산업재해를 7-4. 산재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2. 여가시간 4-4. 휴가활용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6-3. 실업급여 수급률 6-5. 소득5분위배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7-1. 환경 만족도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8-3. 비급여 본인부담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C.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12)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주. 지표 "4-3.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3차 델파이 조사지 발송 이후 추가 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지표로,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요도·시급성 그룹분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돌봄 영역의 경우 모든 지표가 A그룹으로 분류되어, 비록 선정된 지표의 숫자가 적고 모두 산출(output) 차원의 지표라는 특성을 보이지만 선정된 지표가 비교적 우선순위 높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사함.

- 배움 영역의 경우 교육비 부담도가 A에, 평생학습 관련 지표는 B에 기초학력 관련 지표가 C에 분류되었음. 이는 한국에서 학령기 교육의 성과는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성인학습이나 교육비 부담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즉, 지표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한국사회라는 맥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일 관련 지표 중 분배나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는 대부분 A로 평가된 반면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여성할당제,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취업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이 낮다고 평가
- 쉼 관련 지표는 총 근로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B나 C로 평가되어 특히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
- 노후 관련 지표에서는 주로 노인의 돌봄과 직접 관련된 지표에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은 시급성이 덜하고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음.
- 소득관련 지표는 대부분 A로 분류된 가운데 산출(output) 지표인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는 평가임. 대체로 빈곤과 직접 관련된 지표에 높은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부여됨.
- 환경·안전 지표 역시 대체로 A로 분류됐으며, 만족도 지표인 환경만족도와 교통사고 사망률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는 평가
- 건강 영역에서는 의료비 관련 지표가 주로 A로 분류된 가운데, 예방의료 관련 지표(비만유병률, 건강식생활 실천율)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아는 평가
- 주거·지역 관련 지표들 역시 대부분 A로 분류됐는데,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표와 미충족 의료율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고 평가됨.

나. 통합영역쟁점(cross-cutting issues)으로서의 불평등

- 통합영역쟁점은 지표체계가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영역들에서 함께 등장하는 관심사”로,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근본적 가치들을 반영”한 것임(이재열 외, 2014: 87).
-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고

려가 필요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는데, 연구진 내부에서뿐 아니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주관식 답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였음.

- 특히 사회정책의 특성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지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제시됨.

○ 이와 같은 불평등 요인들 중 일부는 지표 자체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불평등’ 자체를 하나의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이를 지표 작성에 반영할 필요

- 예컨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나 ‘6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 ‘노인빈곤율’과 같은 지표는 특정 대상집단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고용률, 빈곤율은 상기 집단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표 자체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음.
- 대신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이를 지표작성 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본 지표체계에서는 ‘불평등’을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각각의 지표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소득수준의 다섯 가지 집단구분에 다른 차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만 이를 모든 지표에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며, ① 해당 지표에서 위 집단구분의 유의성, ② 자료 확보 용이성을 기준으로 지표별로 위 네 가지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음.

제3절 향후과제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의 성과를 정책의 결과(outcome) 수준에서 측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본 장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연구진의 집중검토를 통해 영역별 5~12개, 총

64개의 지표를 포함하는 지표체계를 작성하였음.

- 새롭게 작성된 지표체계는 결과(outcome) 수준 지표가 40개, 산출(output) 수준이 23개, 투입(input) 수준이 1개로 결과 수준 지표의 보완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였으며, 기존 지표와 20개 지표가 중복되었으나 그 중 8개는 기존 지표를 확대하거나 비율화하여 개선하였음.
- 새롭게 작성된 지표체계와 기존 81개 성과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투입 수준 25개, 산출 수준 52개, 성과 수준 46개로 총 123개의 성과지표에 기반한 추진계획 관리가 가능함.
- 따라서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시 기존의 81개 지표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64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도출된 지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영역별 지표 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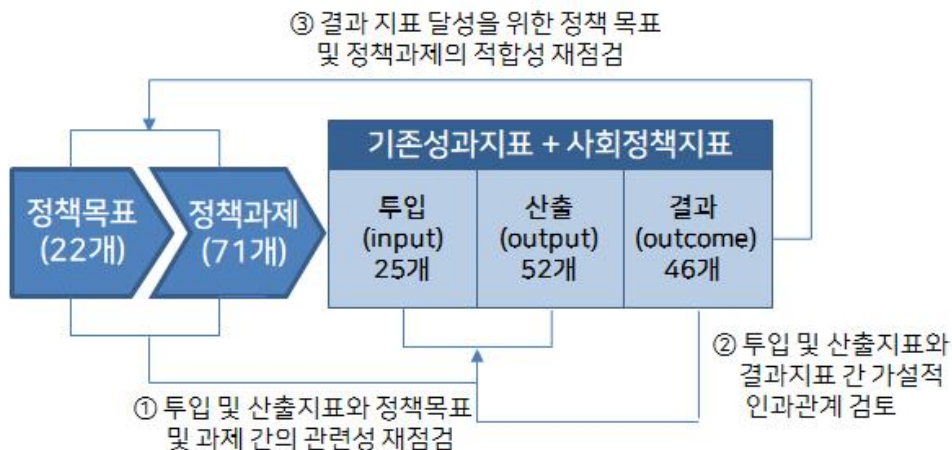
- 영역별 선정 지표수는 현재 5~12개까지로 차이가 크며,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지표수가 적은 반면, 일(12)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지표가 제시됨.
-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결과(Outcome) 수준 지표가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노후(2)와 배움(3) 영역도 Outcome 지표의 추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선정된 지표의 분류를 22개 정책목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봤을 때, 일부 정책목표는 단 1개의 지표가 선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의 경우 선정된 지표가 이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시됨.
- 이와 같은 영역별 지표 불균형은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활용 가능한 좋은 지표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향후 2019년 연구에서 충분히 필요지표를 개발하지 못한 영역들의 사회정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포괄적 성과지표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존 지표와 새로운 지표의 연계 및 보완

- 『추진계획』 당시 제시된 81개 성과지표의 경우 결과 수준의 지표가 적다는 한계

- 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계획에 제시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활용의 필요가 있음.
- 81개 기존 성과지표 활용 시 앞서 제시한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별 불균형 문제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입-산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그러나 기존 81개 지표에 제시된 투입-산출과 새로운 지표체계에 제시된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가설적 수준에서라도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완결적인 지표체계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 81개 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입 및 산출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가 단순 이용자 수와 같이 투입량 증가로 달성이 용이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81개 지표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64개 지표를 투입, 산출, 결과로 나누어 ① 현재의 투입 및 산출 지표가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와 과제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② 기존 투입 및 산출지표의 개선을 통해 결과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설적 인과관계) 분석하며, ③ 결과지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정책목표·과제·투입 및 성과지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함.

[그림 4-2]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이를 통해 결과 중심의 새로운 지표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보완하며, 성과관리가 투입, 산출, 결과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투입단계와 산출단계, 그리고 결과단계의 지표들 간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성과지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주관적 지표 개발 문제

- 주관적 지표는 전통적으로 정책평가에서 중요시되어온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스털린의 역설 등이 제시되며, 특히 사회 영역의 중요지표로 부상하여, UN이나 OECD 등에서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박주언 외, 2012).
- 2019년 지표연구에서 주관적 지표(만족도, 부담도 등)는 20개가 후보지표에 포함되어 9개 영역 모두에 주관적 지표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선정된 지표는 교육비부담도(배움), 직무 스트레스(일), 여가충분도(쉼),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노후), 환경만족도(환경·안전)의 5개뿐이었으며, 이 중 환경만족도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만족도 지표라고 보기도 어려움.
- 주관적 지표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지표들이 ‘정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서 통계청 사회조사와 관련되어 파악 중인 주관적 지표는 대체로 「주관적 웰빙」의 측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관적 웰빙」은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 측면에서 정책지표 활용에는 주의가 필요함.
- 반면, 정부부처가 별도의 조사를 통해 활용중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책 성과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사회정책을 점검대상 정책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계청 사회조사 관련 지표와 반대로 사회정책 주요 영역에서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2019년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적 지표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점검

제1절 시계열검토

제2절 국제비교

제3절 소결

제5장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점검

제1절 시계열검토²⁵⁾

-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한 점검의 기준을 세 가지가 있음.
 - 첫 번째는 성과지표 도출 시 사전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준을 달성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고,
 - 두 번째는 해당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거 대비 현재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다른 단위(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 등)와의 횡단면적 비교를 통해 현재의 성과수준을 파악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도출한 64개 지표의 경우 사전적으로 목표수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 본 절에서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할 것임.

25) 본 절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한기명 박사와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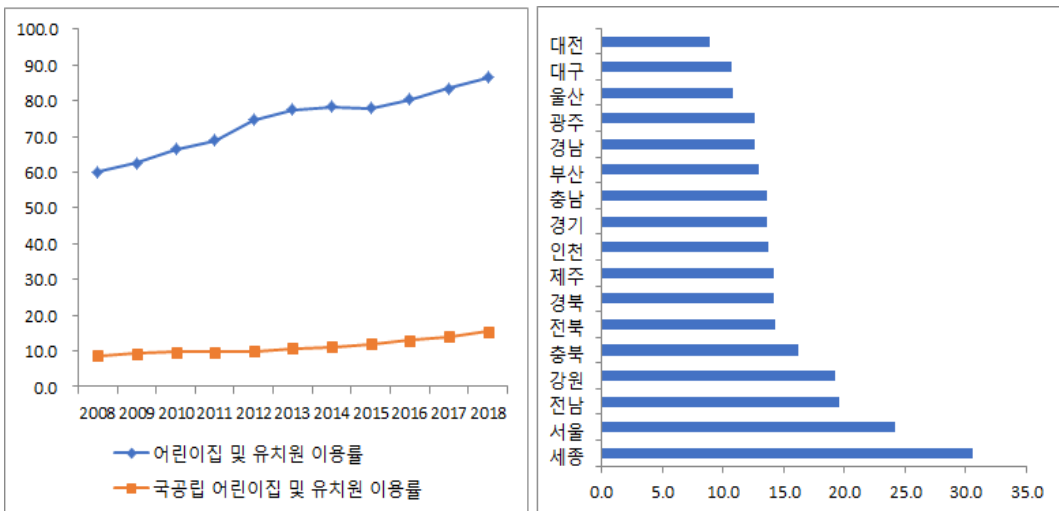
1. 삶의 영역

가. 돌봄

- [그림 5-1]은 돌봄 영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표인 6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나타낸 것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모두 상향하고 있는 지표이지만, 높아지는 폭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 돌봄의 공적 공급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는 격차가 큰데, 가장 높은 세종의 경우 30%가 넘고 서울 역시 24%에 이르는 반면 가장 낮은 대전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그림 5-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좌)과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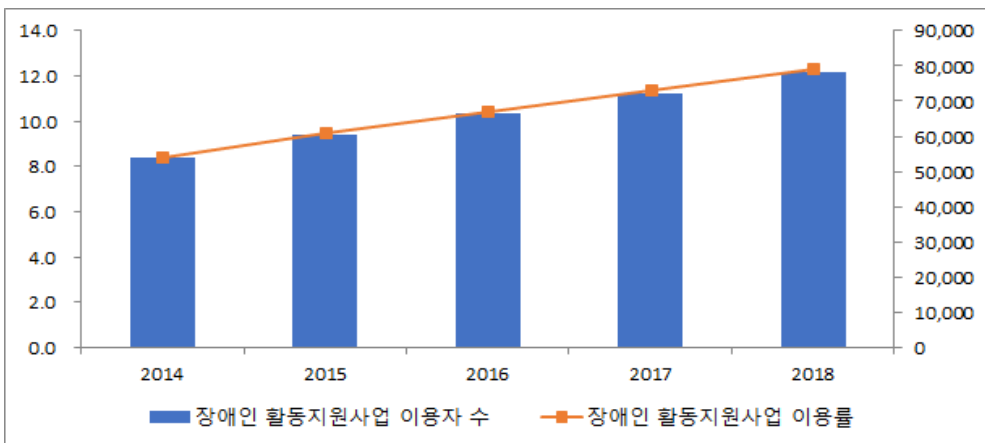
주. 0~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며, 3~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수와 원아 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년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년도).

- [그림 5-2]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14년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9년 이용자수는 99,643명으로 2018년 (78,202)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증가폭은 2014년 대비 5년만에 85%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그림 5-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 2014~2018

(단위: %, 명)



주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중증 장애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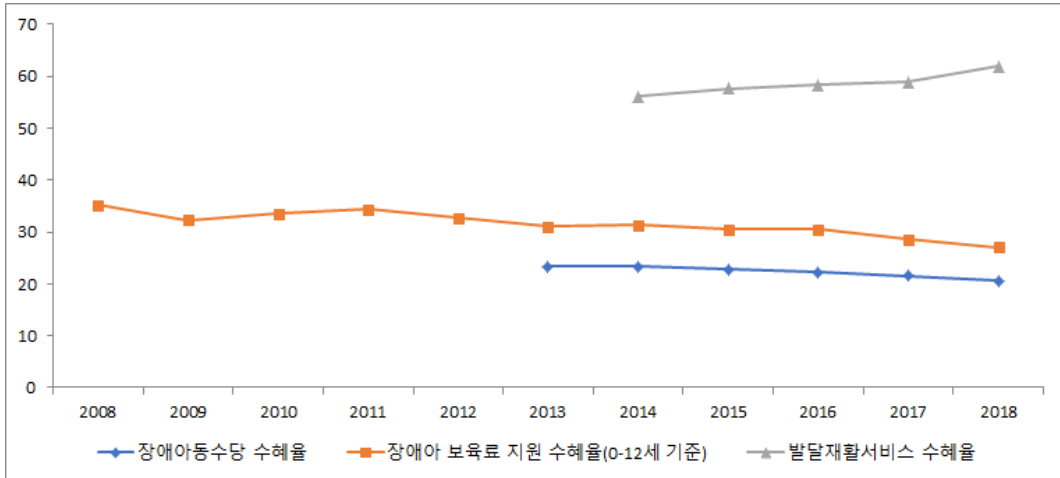
주2. 2014년 12월은 1~2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1~3급까지 확대 시행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 [그림 5-3]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5-3]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단위: %)



주1. 장애아동수당 수혜율 = 장애아동수당 수혜자 수/18세 미만 장애아동 수*100

주2. 장애아 보육료 지원률 = 장애아 보육료 수혜자 수/0~12세 장애아동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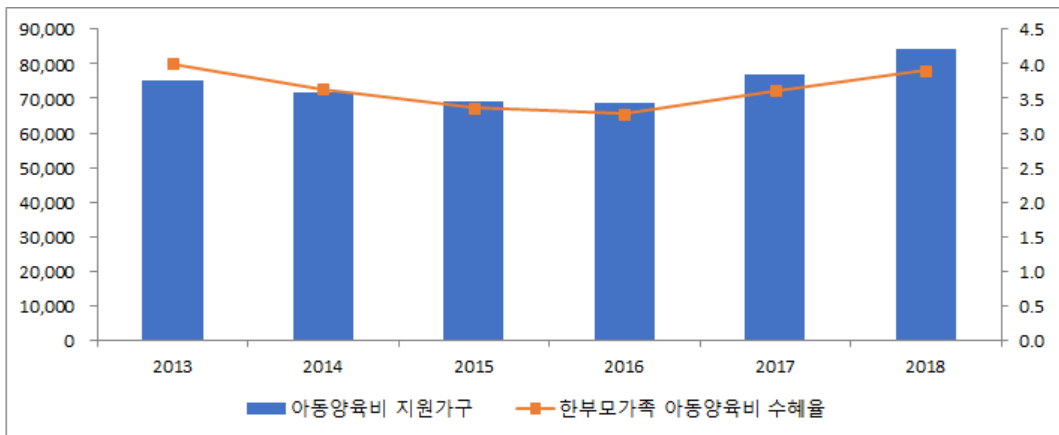
주3.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 수/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 [그림 5-4]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및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음.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율은 2013~2016년 사이 감소하다가 2016~2018년 사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5-4]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및 수혜율

(단위: 명, %)



주.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율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 건수/한부모가정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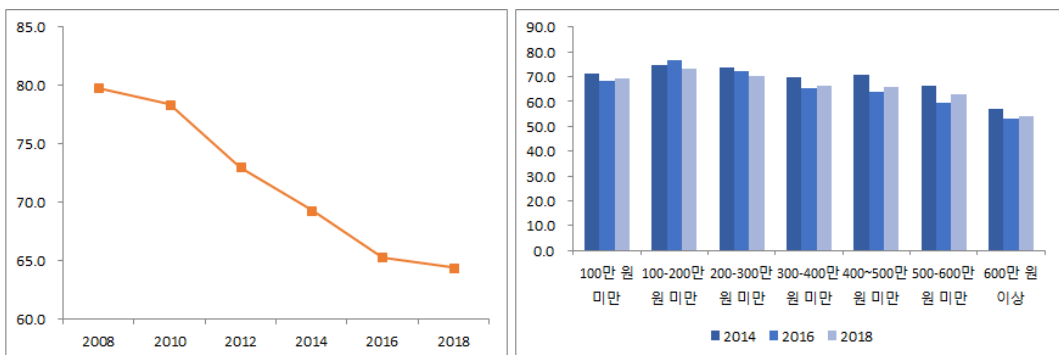
나. 배움

○ [그림 5-5]는 ‘배움’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교육비 부담도를 나타낸 것임.

- 교육비 부담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6~2018년 사이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다만 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임에 주의할 필요
-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담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오히려 100~200만원이나 200~300만원 가구보다 부담이 낫다고 응답함. 다만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18년 기준 3.8%에 불과해 100~200만원 가구 15.3%, 200~300만원 가구 24.8%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부담도는 감소했지만, 월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음. 같은 기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다른 조사²⁶⁾의 결과를 참조하며, 교육비 부담 감소 정책이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교육을 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그림 5-5] 교육비 부담도 추이(2008~2018): 전체(좌), 소득수준별(우)

(단위: %)



주1. 교육비 부담도는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주2.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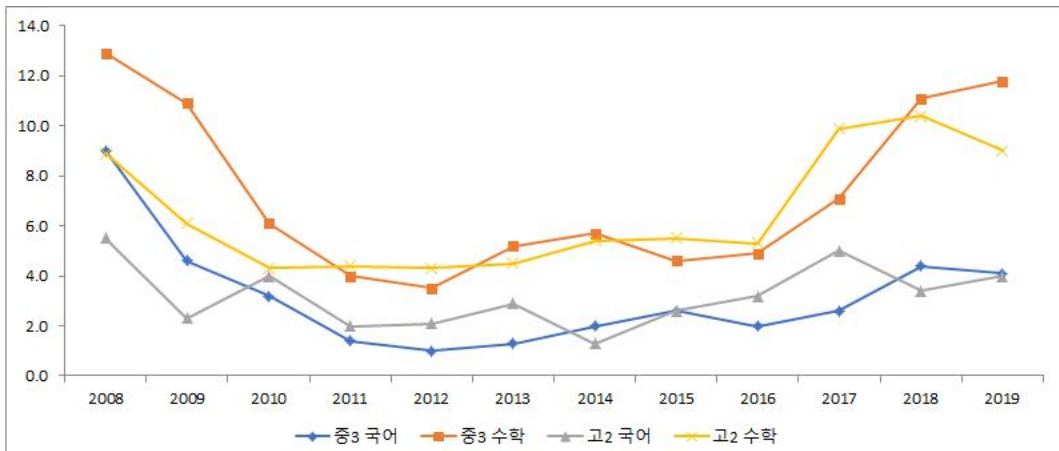
26)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그림 5-6]은 ‘배움’ 영역의 두 번째 지표인 기초학력 미달률을 나타냄.

-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 10여년 간 U자 형태를 그리며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향후 정책적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년도 기준으로 중3은 수학, 고2는 국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짐.

[그림 5-6]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 (2008~2019)

(단위: %)



주1.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각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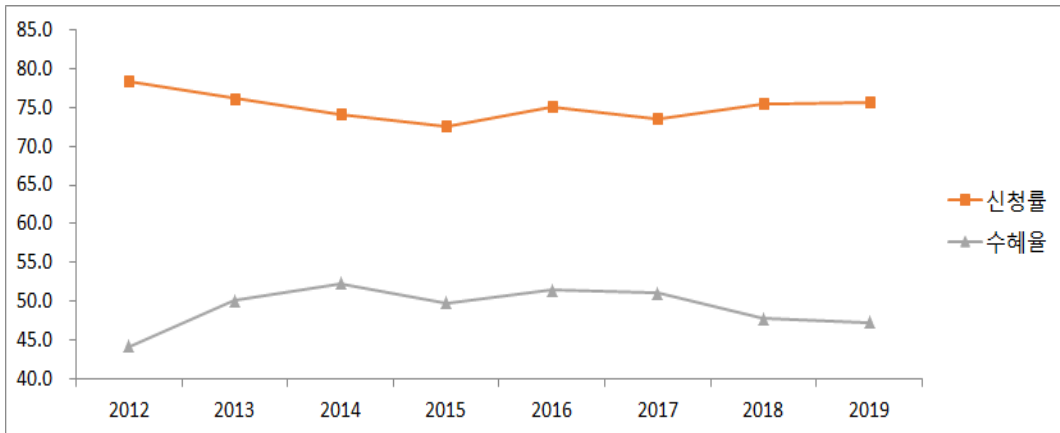
주2. 단, 201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평가틀을 변경함에 따라 교과별 성취수준을 재설정함으로 전년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자료: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각 연도).

- [그림 5-7]은 배움 영역 세 번째 지표로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지난 5년간 2012년 이후 50%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47.3% 수준임.

[그림 5-7] 국가장학금 신청률 및 수혜율 (2012~2017)

(단위: %)



자료: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각 연도).

-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은 2018년 기준 183만원 수준으로, 2022년까지 205만원 내외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 중임.
- 2018~2019년도의 국가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금액을 파악하여 현황을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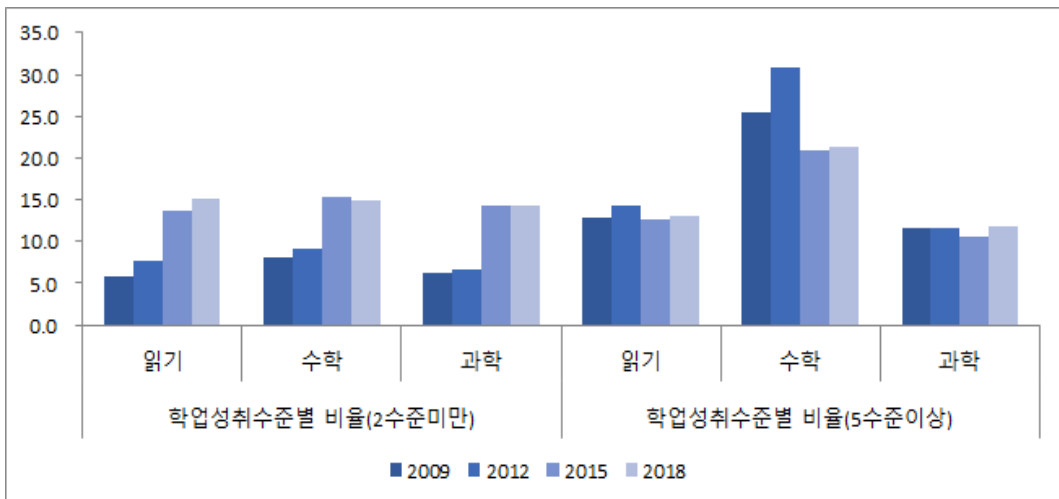
- <표 5-1>과 [그림 5-8]은 ‘배움’ 영역 네 번째 지표인 PISA 학업성취도 수준임.
- <표 5-1>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지난 20년 가까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5~2018년 사이에도 읽기와 과학은 소폭 상승, 수학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5-1> 한국 학생들의 PISA 학업성취도 순위

구분	영역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OECD 내 한국 국가순위	읽기	6	2	1	1~2	1~2	3~8	2~7
	수학	2	2	1~2	1~2	1	1~4	1~4
	과학	1	3	5~9	2~4	2~4	5~8	3~5

자료: OECD 「PISA 2018」 Results

[그림 5-8] PISA 성취도가 2수준 미만 및 5수준 이상 학생 비율(2009~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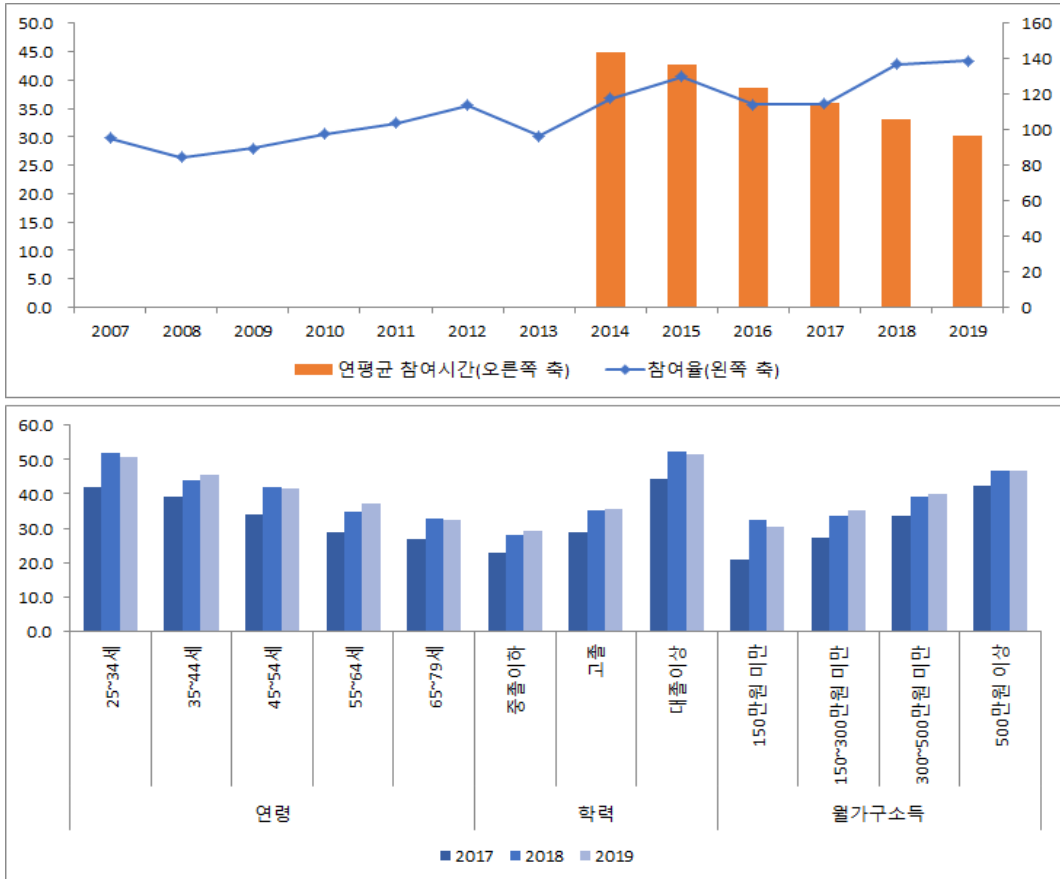
자료: OECD 「PISA 2018」 Results

- 그러나 [그림 5-8]에 나타난 것처럼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5수준 이상)과 낮은 학생(2수준 이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낮은 학생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앞서 기초학력 미달률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년도로 들어오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됨.

○ [그림 5-9]는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평균(위), 집단별(아래)

(단위: %)



주1. 참여율은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주2. 만 25~64세(2017년부터 65~79세 조사 시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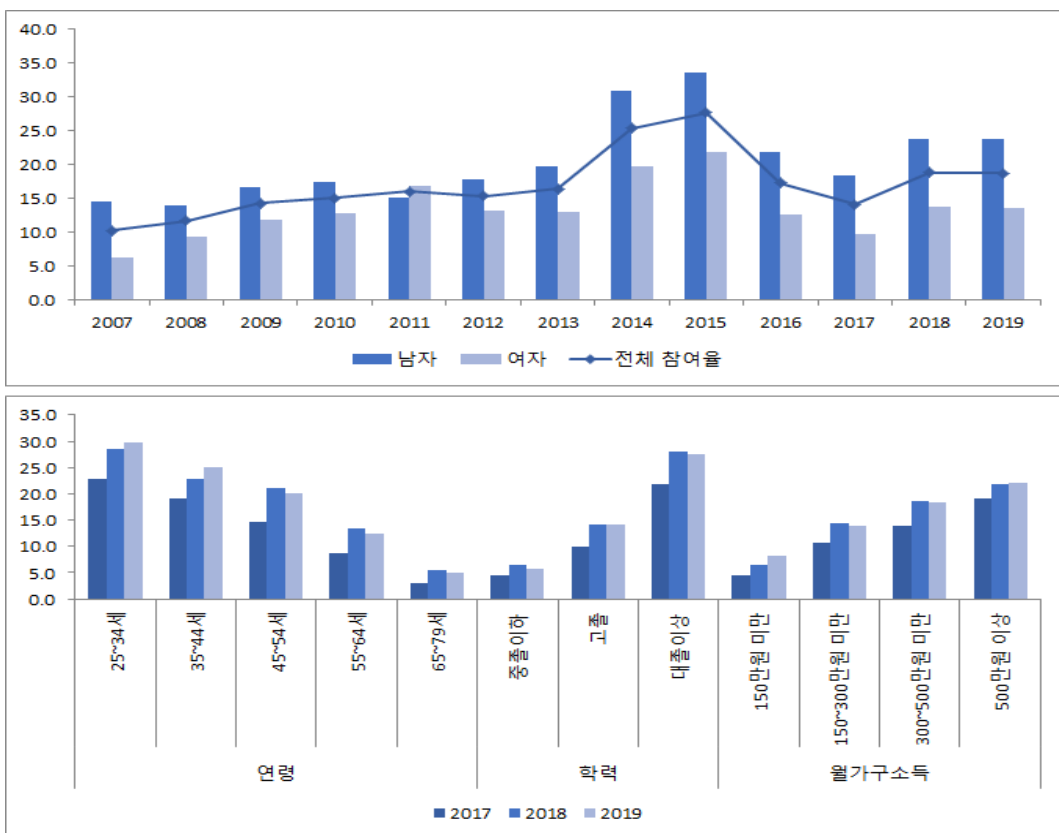
- 평생교육 참여율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7~2018년 사이에 7%p 증가한 이후, 2018~2019년 사이에도 소폭(0.6%p) 증가했으나, 개인의 연평균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2014년 144시간에서 2019년 97시간까지 오히려 감소
- 집단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아, 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고령·저학력·저소득층의 참여가 저조
- 따라서 이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그림 5-10]은 배움 영역의 6번째 지표로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을 나타냄.

- 전체 평생교육 참여율과 달리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4~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6년 이후 조금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2007년부터의 장기추세로 보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과 달리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는 성차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월등하게 높음.
- 연령, 학력, 소득 집단별로는 청년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 평생교육 참여율과 유사

[그림 5-10]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위), 집단별(아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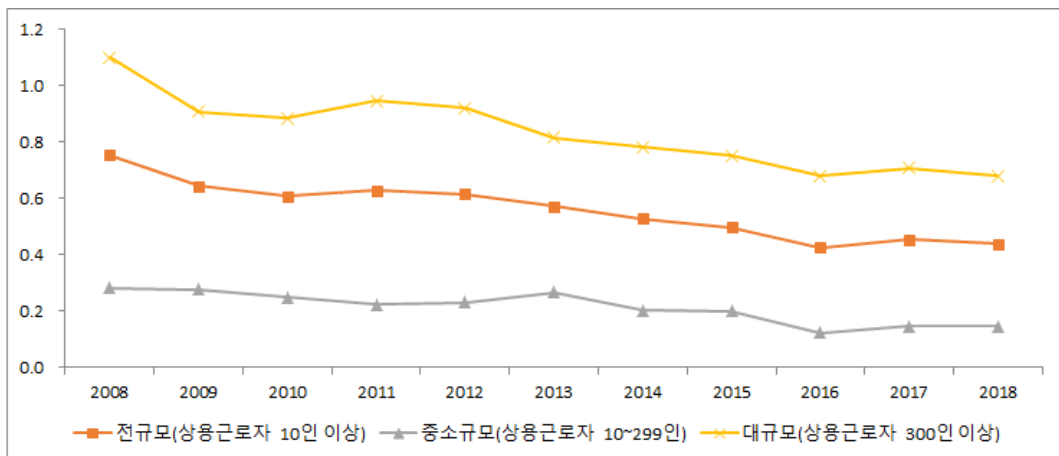


주. 참여율은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각 년도).

- [그림 5-11]은 ‘배움’ 영역의 마지막 지표로 기업체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임.
- 표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체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향하다가 2016~2018년 사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은 추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교육훈련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중소기업일수록 직원의 인적자본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 가능
 - 따라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한 편으로 기업이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훈련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1] 기업체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의 비중 (2008~2018)

(단위: %)



주. 기업의 노동비용 총액에서 교육훈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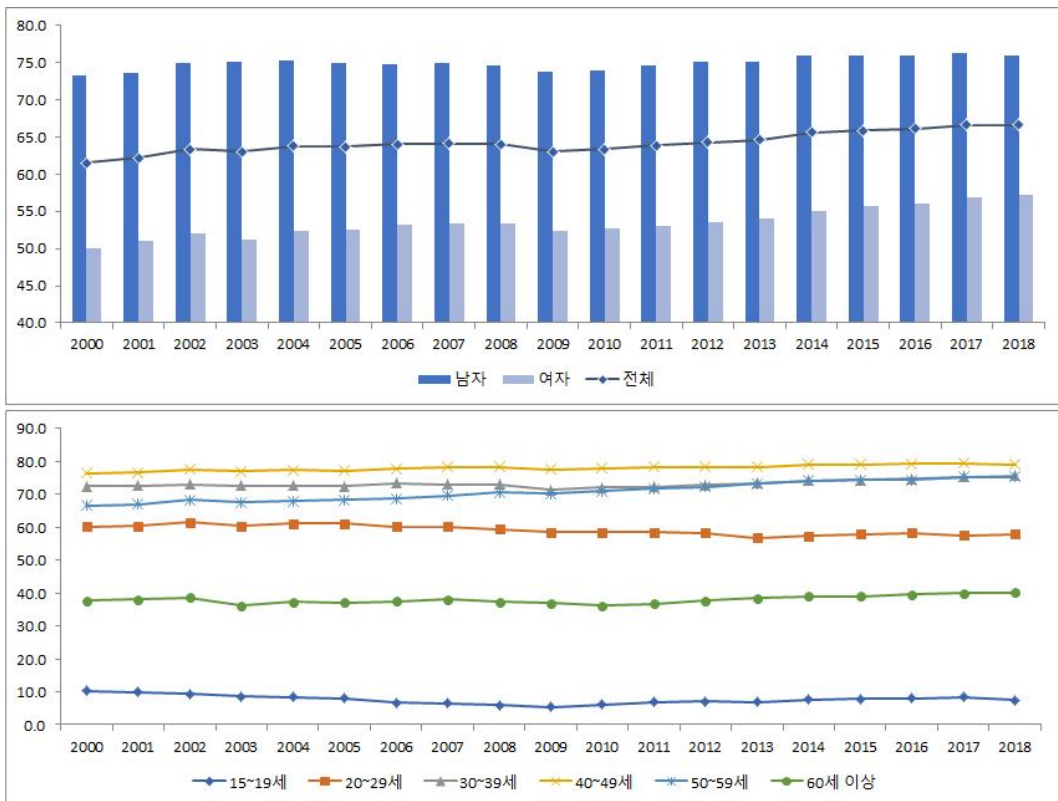
다. 일

○ [그림 5-12]는 ‘일’ 영역의 첫 번째 지표로 고용률을 제시한 것임.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14년 이후 60.5~60.8%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남성 고용률이 2014년 71.7%를 정점으로 소폭 하향하여 2018년에는 70.8%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매년 상향중임. 그러나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여전히 19.9%p로 크게 나타남.

[그림 5-12] 성·연령별 고용률(2000~2018)

(단위: %)



주.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 30대 > 50대 > 20대 > 60대 > 10대 순으로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50대의 경우 과거에 비해 50대 고용률이 높아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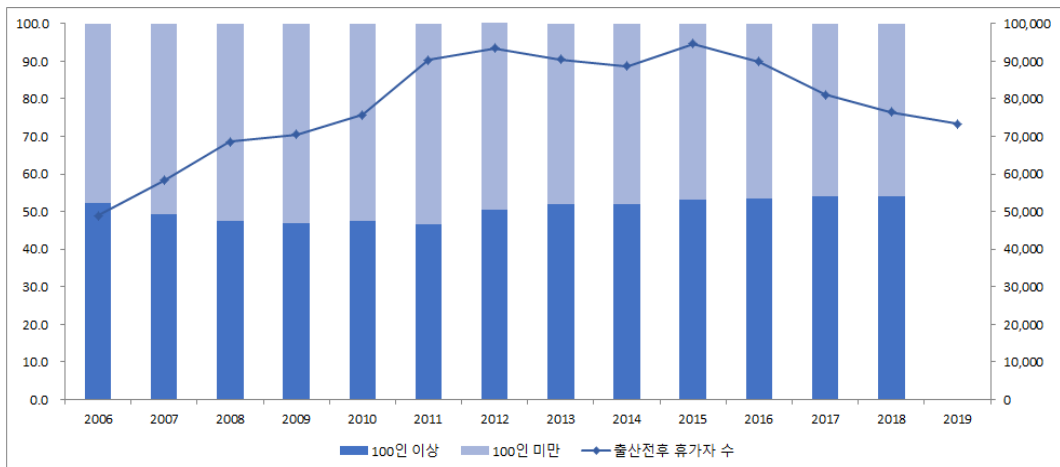
- 2000년도와 최근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높아졌으나, 20대만 고용률이 낮아진 부분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음. 물론 대학진학률 변화의 영향이 있겠으나,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올랐던 2000년대 중후반과 비교해도 현재의 고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고용 정책의 성과제고가 요구됨.

○ [그림 5-13]은 ‘일’ 영역 두 번째 지표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를 제시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출생아동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영향임.²⁷⁾
- 막대그래프는 1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2012년 이후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2019년 기준 65%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와 기업규모별 비중

(단위: %,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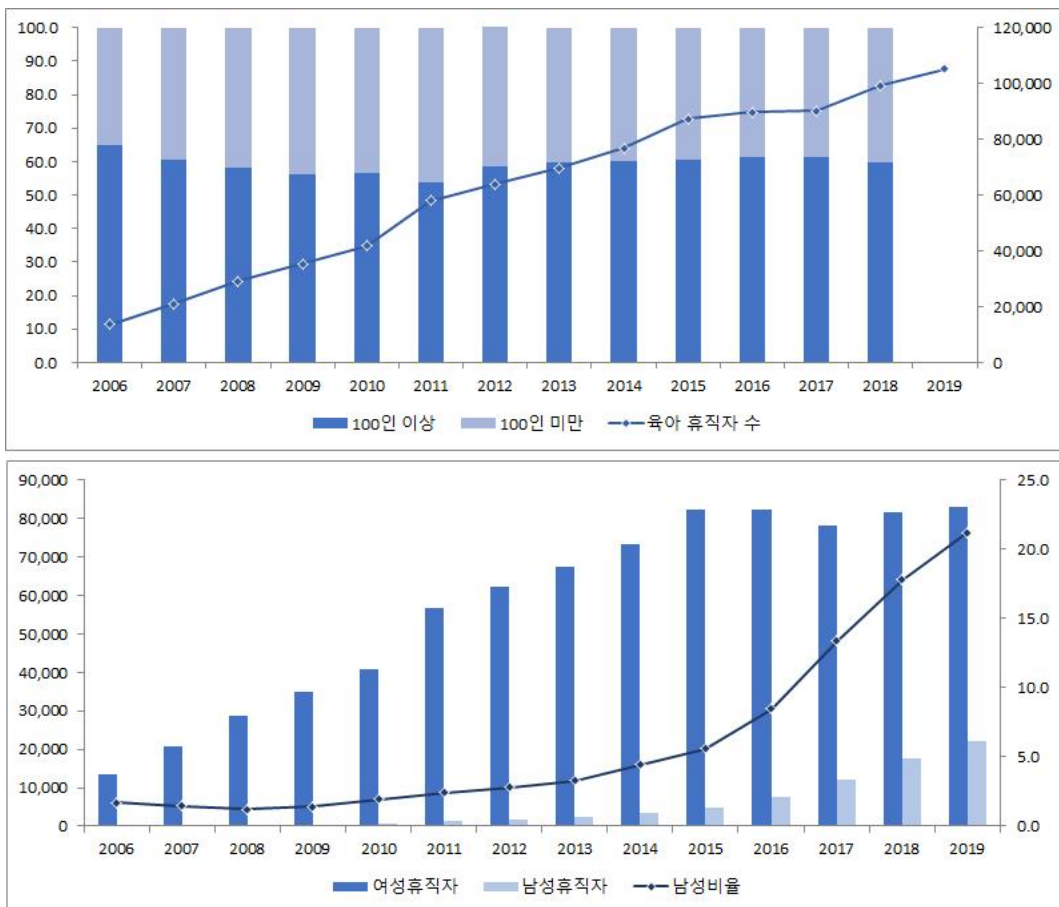
27) 연도별 출생아수는 2012년 484,550명, 2014년 435,435명, 2016년 406,243명, 2018년 326,82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이를 위 지표와 연계하여 출생아동수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를 상정하면, 2012년에는 19.3%, 2014년에는 20.4%, 2016년에는 22.1%, 2018년에는 23.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는 통계청 e-나라지표 ‘출생사망주이’(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에서 확인하였음(최종접속: 2020-03-20).

○ [그림 5-14]는 ‘일’ 영역 세 번째 지표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를 제시함.

- 지난 10여년 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 폭이 더 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비중으로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전체의 20%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40%에 비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즉, 출산전후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의 중간 이상 규모 사업장 쏠림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5-1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성별·기업규모별 비중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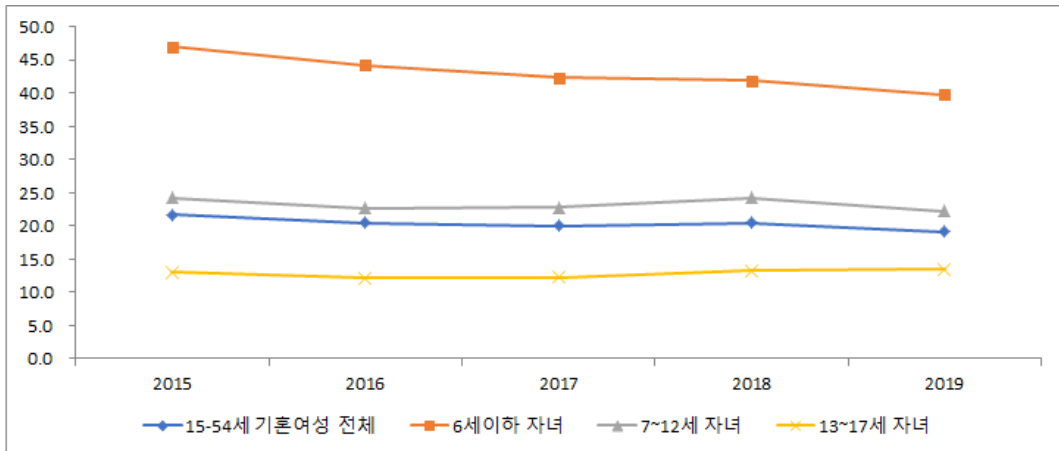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 [그림 5-15]는 ‘일’ 영역 네 번째 지표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고 있음.
- 15~54세 기혼여성 전체의 경력단절률은 2015년 21.7%에서 2019년 19.2%로 소폭 하락하여 이전의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의 경력단절률이 5년간 7.2%p 하락한 반면, 자녀 연령이 6세를 넘는 경우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여성의 재취업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자녀가 일정 연령이 지난 후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

[그림 5-15] 자녀 연령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2015~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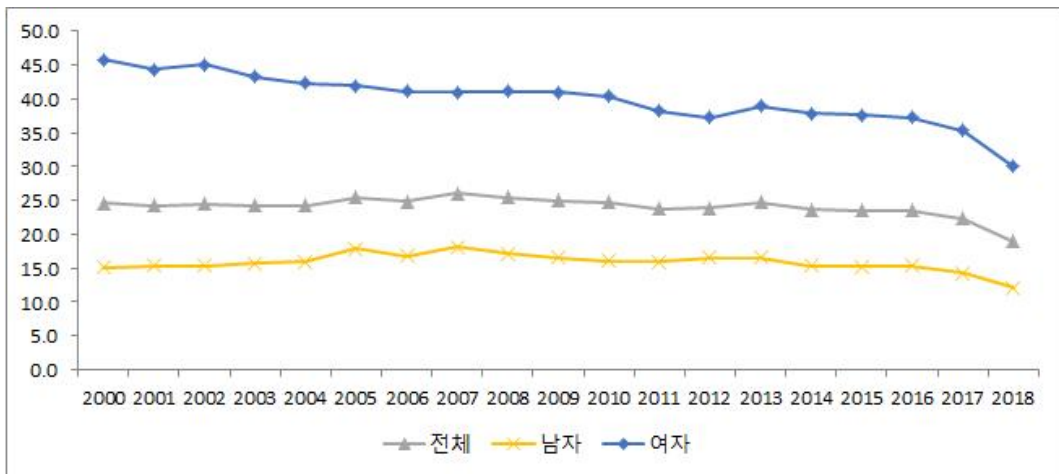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 [그림 5-16]은 ‘일’ 영역 다섯 번째 지표인 중위임금 2/3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여준.
- 전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7년 26%를 정점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9.0%로 나타남.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2018년 감소폭이 이전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6]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0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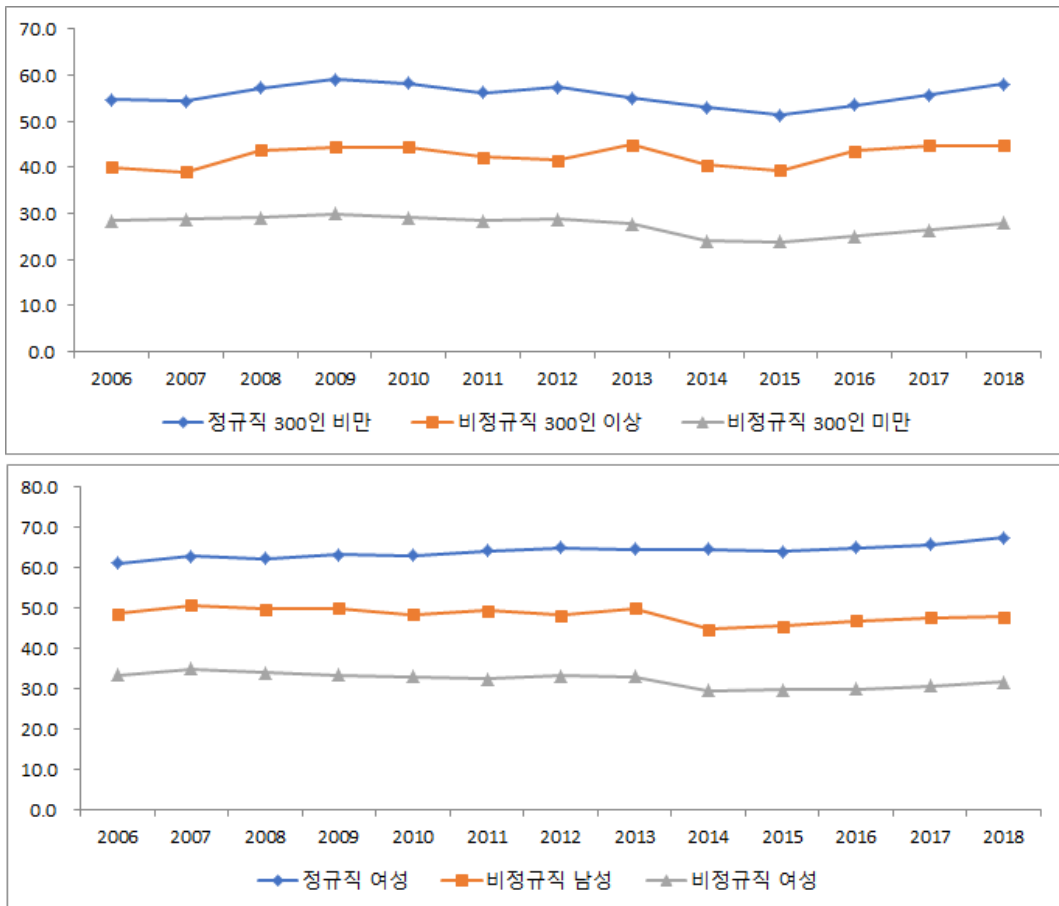
자료 : OECD, Labor Force Statics(<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2020. 03-20

○ [그림 5-17]은 ‘일’ 영역 여섯 번째 지표인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여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좁혀지지 않았음.
- 단순히 성별임금격차로 봤을 때 2006년 대비 2018년의 성별 임금격차(남성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는 57.6%에서 63.3%까지 좁혀졌으나, 남성정규직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33.5%에서 31.6%로 오히려 확대됐음.

[그림 5-17] 사업장규모-고용형태별(상), 성별-고용형태별(하) 임금격차

(단위: %)



주. 위는 정규직 300인 이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사업장규모-고용형태의 비율

아래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성별-고용형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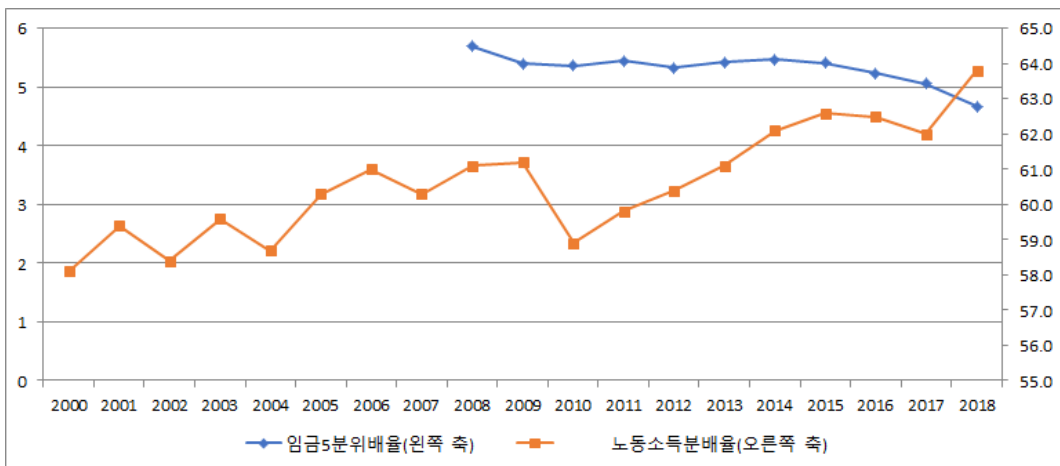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년도).

○ [그림 5-18]은 ‘일’ 영역의 임금 번째와 여덟 번째 지표인 임금 5분위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나타냄.

- 임금 5분위 분배율은 2008년 5.69배에서 2018년 4.67배까지 낮아졌으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0년 58.1%였던 것이 2018년 63.8%까지 높아짐.
- 비록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지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그림 5-18] 임금 5분위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단위: 배, %)



주1. 임금5분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분위로 나눌 때 1분위 평균임금 대비 5분위 평균임금의 배율

주2.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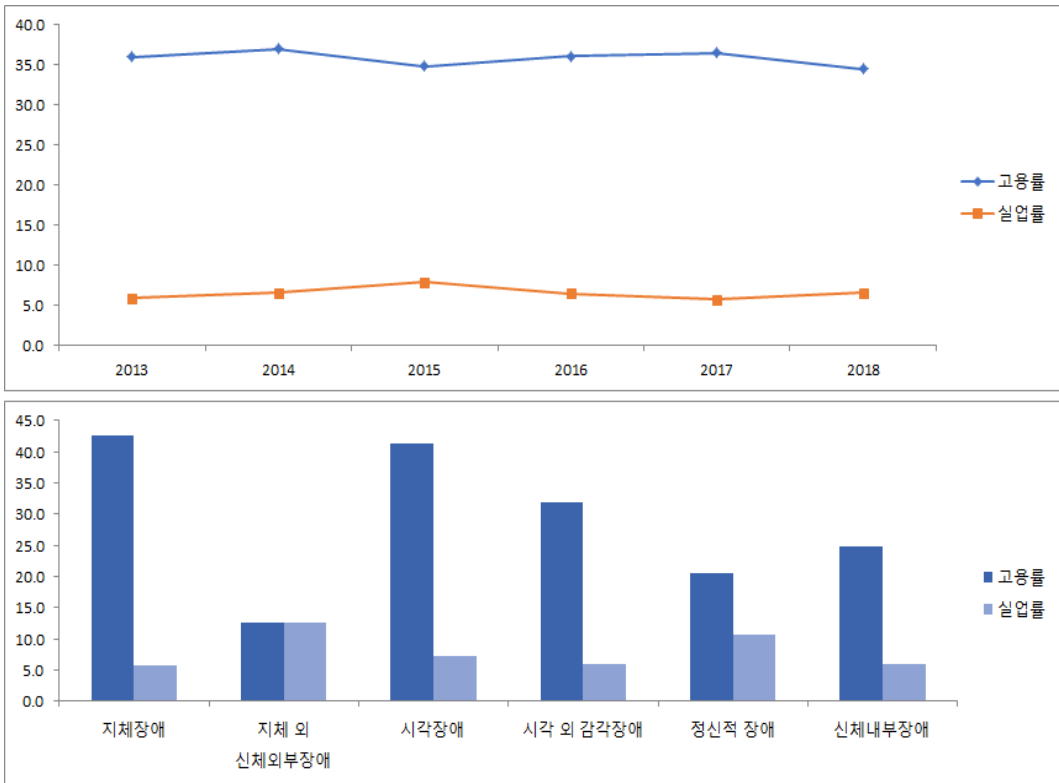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년도).

○ [그림 5-19]는 ‘일’ 영역의 아홉 번째 지표로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냄.

- 장애인 고용률은 35% 전후에서 머물러 있는데, 2014년(37%) 대비 2018년(34.5%) 오히려 낮아졌음. 장애인 실업률 역시 6%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8년은 6.6%로 지난 6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유형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42.5%)와 시각장애(41.4%)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는 반면,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12.7%)와 정신장애(20.6%)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음.

[그림 5-1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추이(2013~2018)와
장애형태별 고용률·실업률(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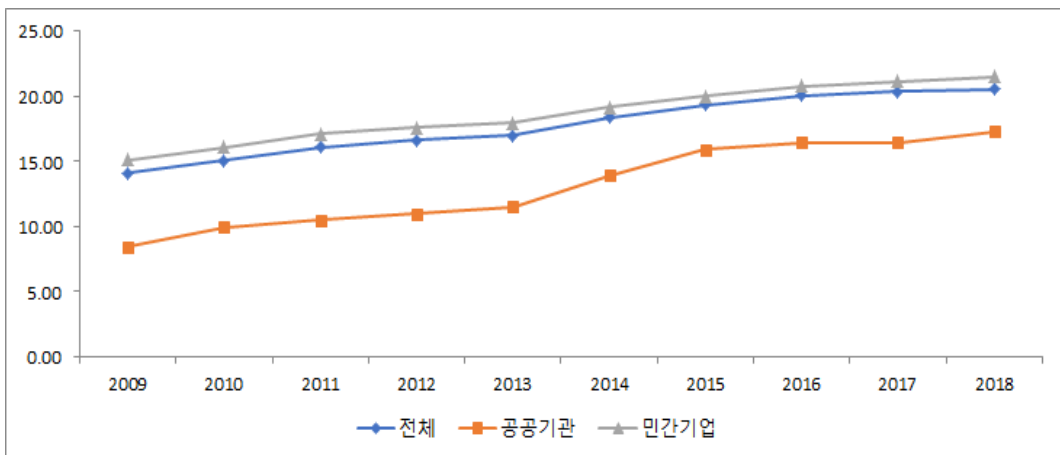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각 년도).

○ [그림 5-20]은 ‘일’ 영역 열 번째 지표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보여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3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어 왔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10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어 옴.
- 그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2018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8.2%로 나타남.

[그림 5-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2009~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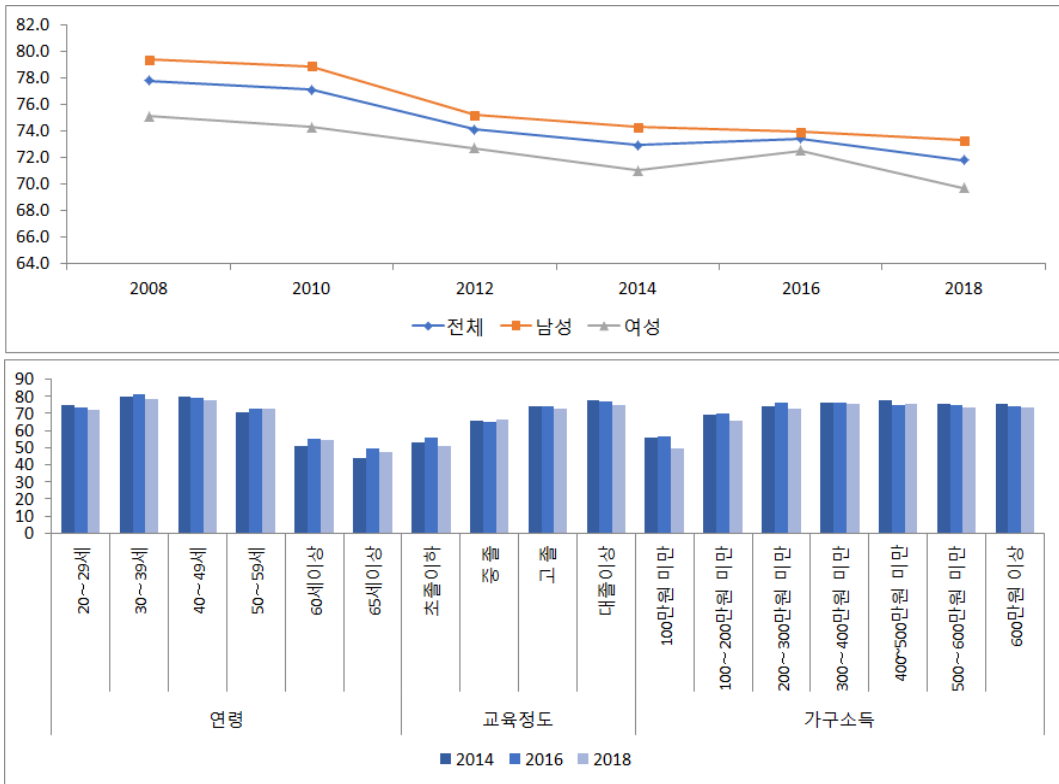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각 년도).

- [그림 5-21]은 ‘일’ 영역의 열한 번째 지표인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냄.
 - 직무스트레스는 지난 2주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우 느낀’ 사람과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로 2008년 77.8%에서 2018년 71.8%까지 낮아짐

[그림 5-21] 직무스트레스 정도: 2008~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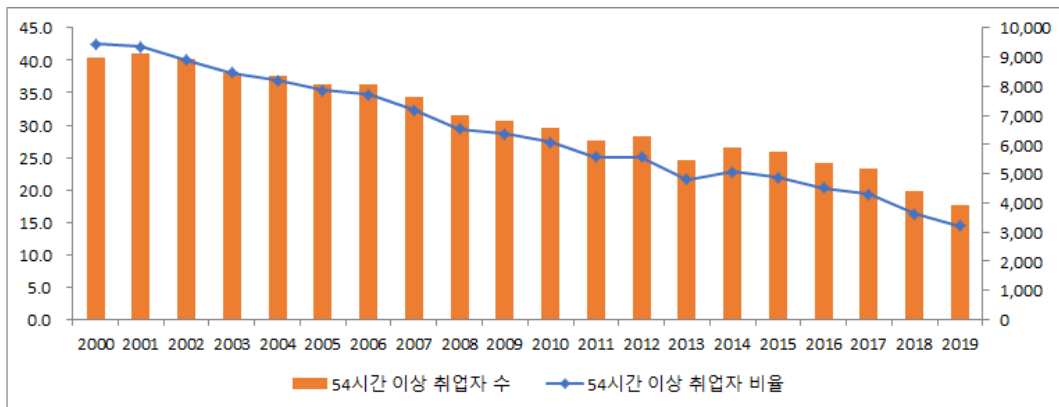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집단별로 직무스트레스는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30~40대가, 학력은 높을수록, 소득은 300~500만원 사이 구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낮지 않음을 시사함.
- 고연령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점, 저학력·저소득층의 직무스트레스도 낮은 점 등은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기대치 대비 현재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함.

- [그림 5-22]는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의 숫자와 비율을 나타냄.
- 장시간 취업자 수는 2000년 900만명에서 2019년 392만명까지 감소했으며,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역시 42.5%에서 14.5%로 크게 감소함.
 - 장시간 취업자 감소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나 취업인구의 의식 변화 등의 장기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7~2019년 2년 사이에 5%p 가까이 급감한 것은 주당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22] 주당 54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비율

(단위: %, 천명)



주. 장시간 취업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주당 54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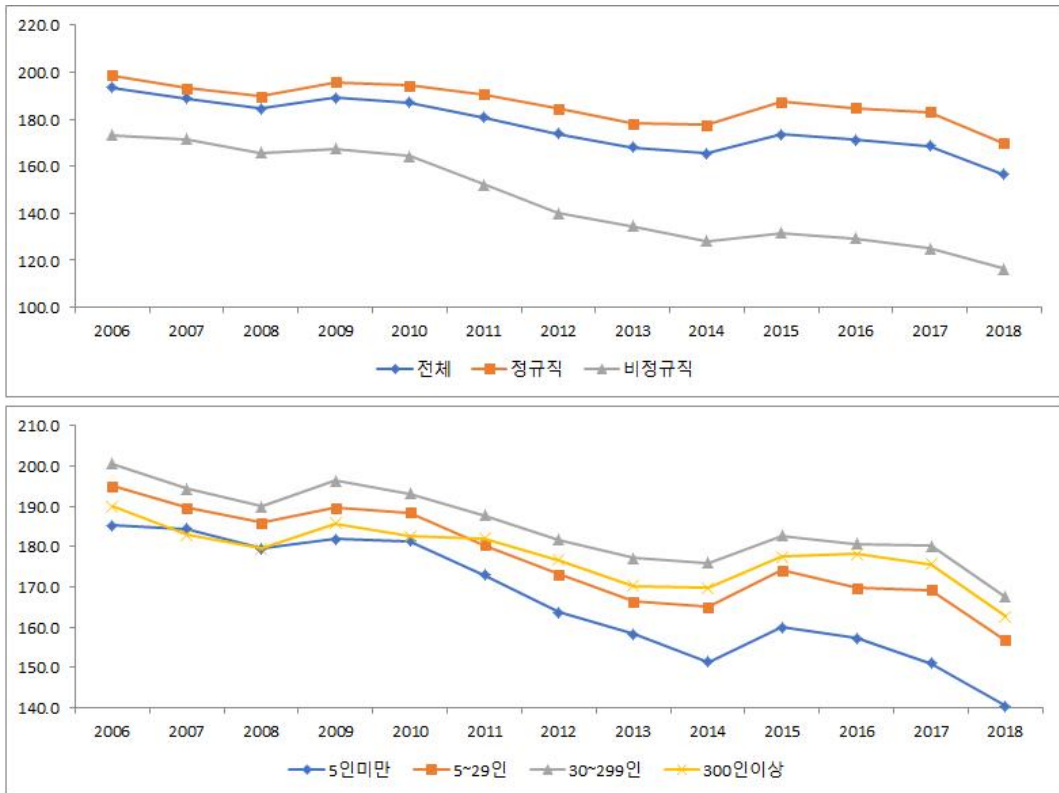
라. 쉼

○ [그림 5-23]은 ‘쉼’ 영역의 첫 번째 지표로 총근로시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2018년 156.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더 커서 근로시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 비중이 줄어들고, 시간제 비중이 증가한 비정규 노동시장의 상황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23] 총 근로시간 추이: 2006~2018

(단위: 시간/월)



주.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 연도).

-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30~299인 집단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300인 이상, 5~29인, 5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 대기업 > 소기업 > 영세기업의 순으로 길게

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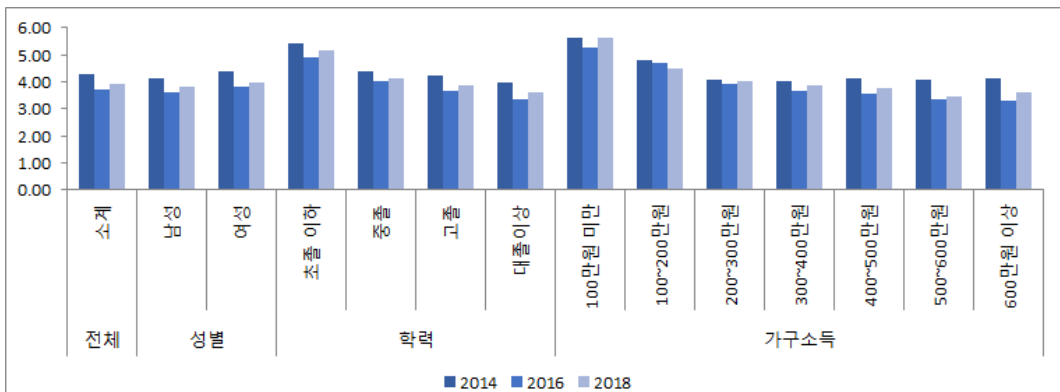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

○ [그림 5-24]는 연간 일평균 여가시간을 나타낸 것임.

- 전체 국민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2014년 4.26시간에서 2016년 3.70시간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3.93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집단별로 봐도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집단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긴 여가시간을 보이고 있어, 추정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여가시간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노동시간의 집단별 차이나, 직무 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음.

[그림 5-24] 여가시간 추이: 2014~2016

(단위: 시간/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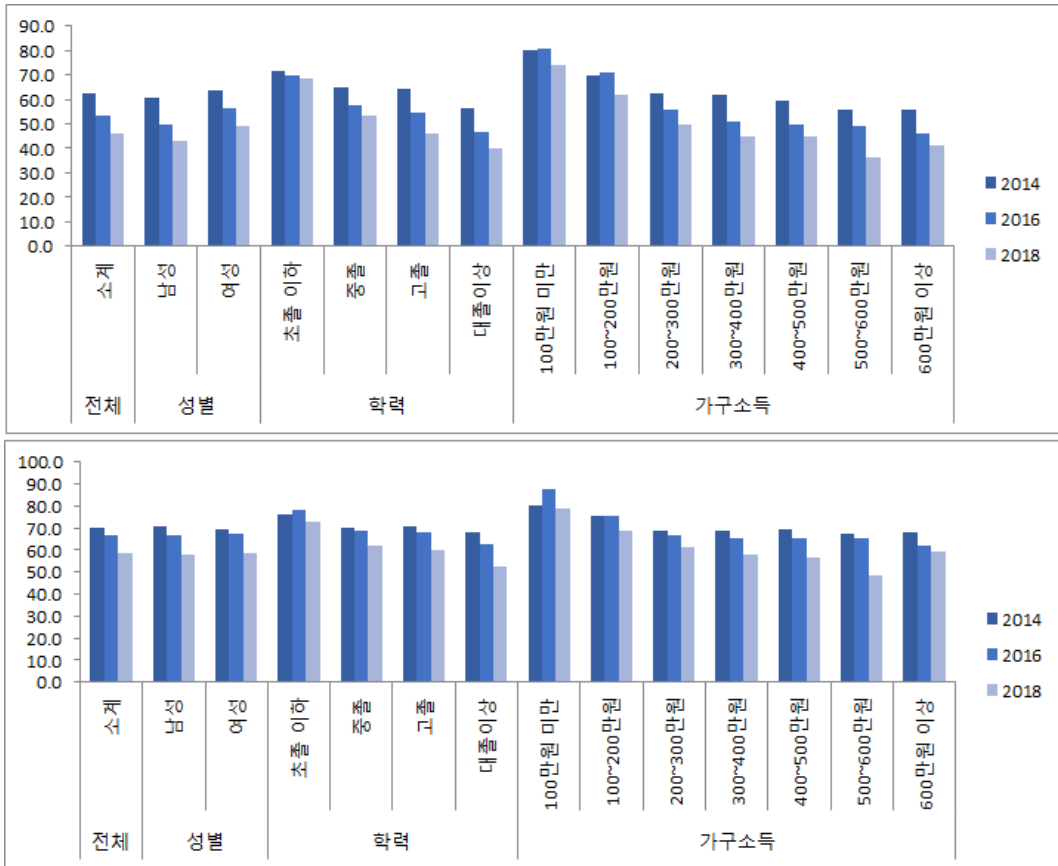
주: 최근 1년간의 평일 일평균 여가시간과 휴일 일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답변을 평일과 휴일의 연평균 비율(약 68:32)을 적용하여 평균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 [그림 5-25]는 여가시간 충분도, 즉 개인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을 각각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음.

[그림 5-25] 여가시간 충분도 추이: 평일(위), 휴일(아래)

(단위: %)



주. 지난 1년 동안 휴일 여가시간에 대한 평가에 대한 7점 척도 중 '매우 충분', '충분', '약간 충분'에 대한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 실제 여가시간 추이와는 달리 ‘여가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여가에 대한 기대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집단별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실제 여가시간 분포와 마찬가지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음. 단, 휴일의 여가시간 충분도 인식은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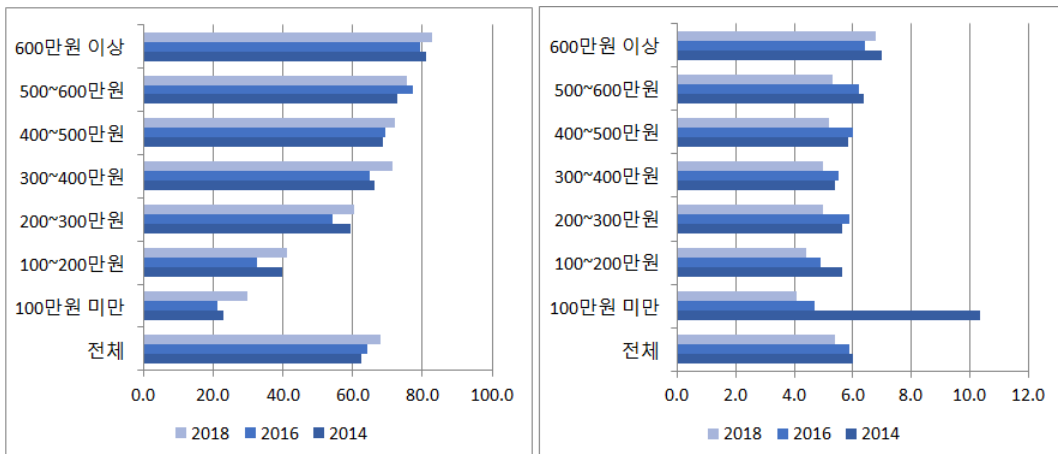
소득층에서 중간 및 중상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보다는 높게 나타남.

○ [그림 5-26]은 휴가경험률과 연간 휴가일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국민의 휴가경험률은 점차 높아져 2018년 68.1%가 휴가를 경험했으나, 연간 휴가사용일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2018년 5.4일임.
- 집단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휴가경험률과 휴가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휴가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휴가일수도 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5-26] 휴가경험률(좌) 및 연간사용휴가일수(우): 2014~2018년

(단위: %)



주1. 휴가경험률: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주2. 휴가일수: 연간 총 휴가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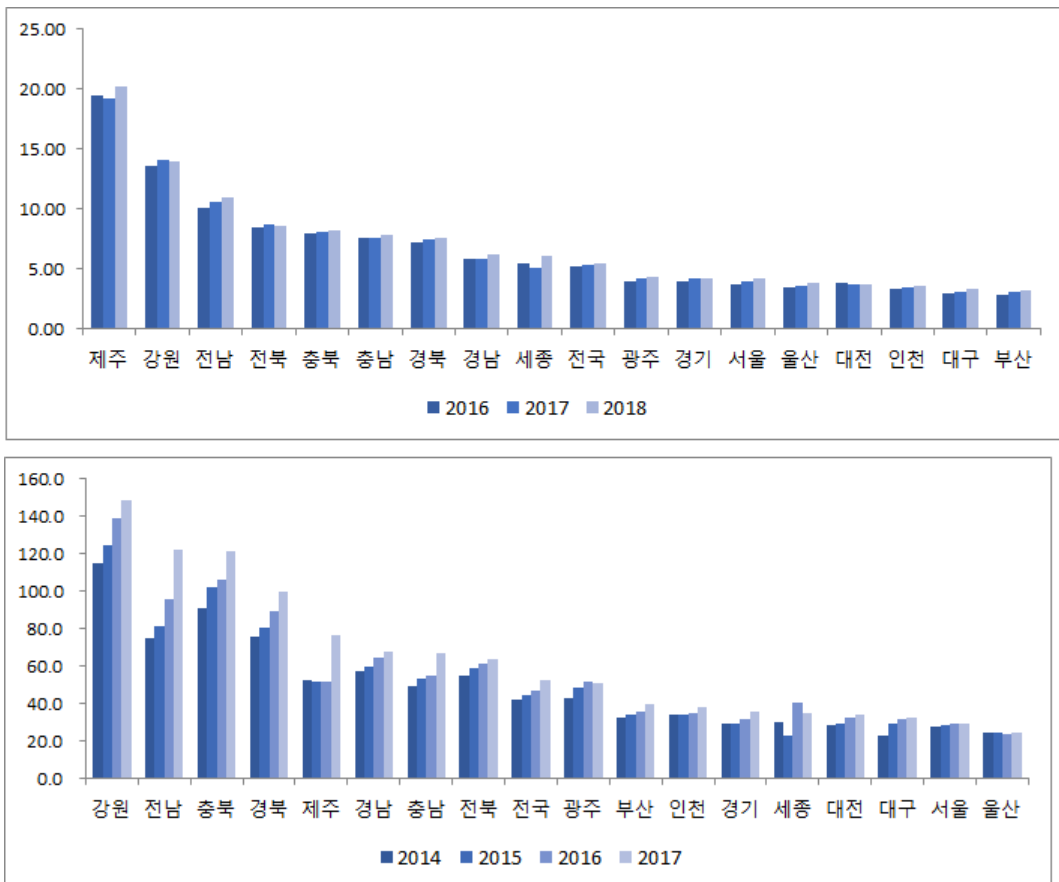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 [그림 5-27]은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상) 및 공공체육시설(하) 인프라 수를 보여 줌.

-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인데, 문화시설 인프라는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순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는 강원, 전남, 충북,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은 2016년 5.14개에서 5.45개로 소폭 증가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41.5개에서 2017년 52개로 크게 증가했음.

[그림 5-27]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위) 및 공공체육시설(아래) 현황

(단위: 개/십만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량(각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각 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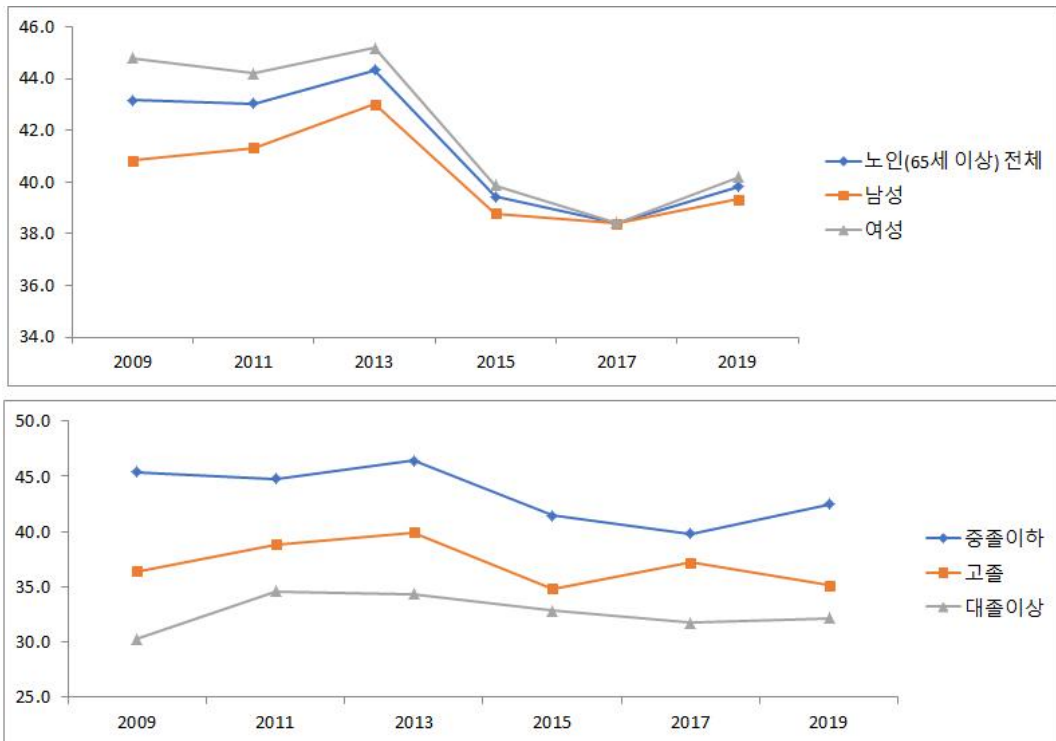
마. 노후

○ [그림 5-28]은 ‘노후’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를 나타냄.

-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노인 비율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하향하는 추세지만, 가장 최근인 2017~2019년 사이에는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집단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학력 노인보다는 저학력 노인이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여성노인의 높은 고립도는 상대적으로 후기 노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5-28]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2009~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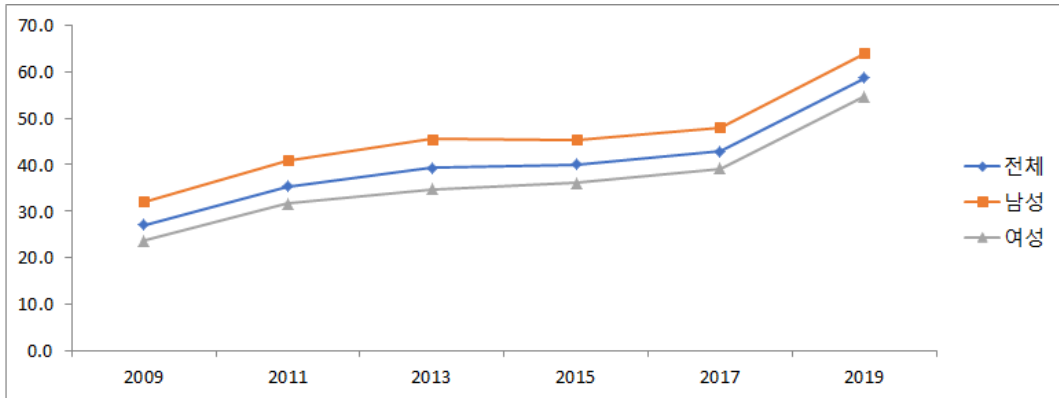
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노인 비율의 평균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그림 5-29]는 ‘노후’ 영역 두 번째 지표인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참여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볼 때는 남성의 참여율이 일관되게 여성보다 높은 추이를 보임.

[그림 5-29]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2009~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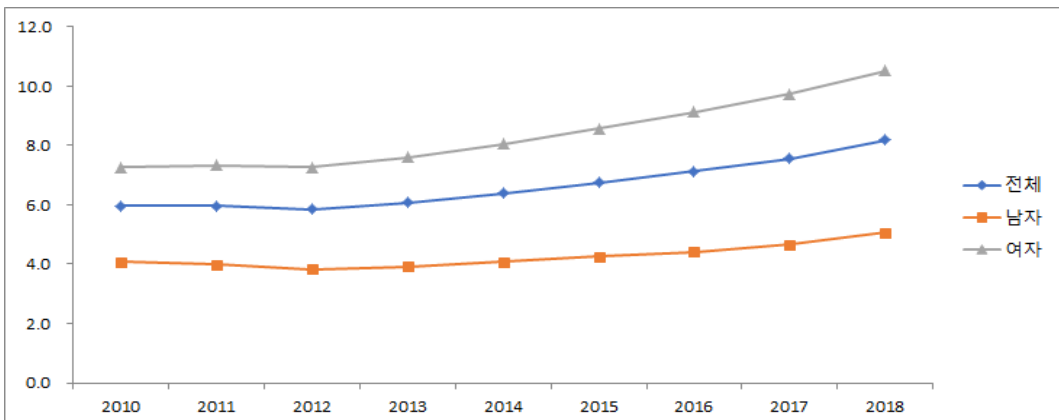


주.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65세 이상 인구의 단체 참여 경험에 있는 이들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그림 5-30]은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30]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

(단위: %)



주. 수급률: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인구*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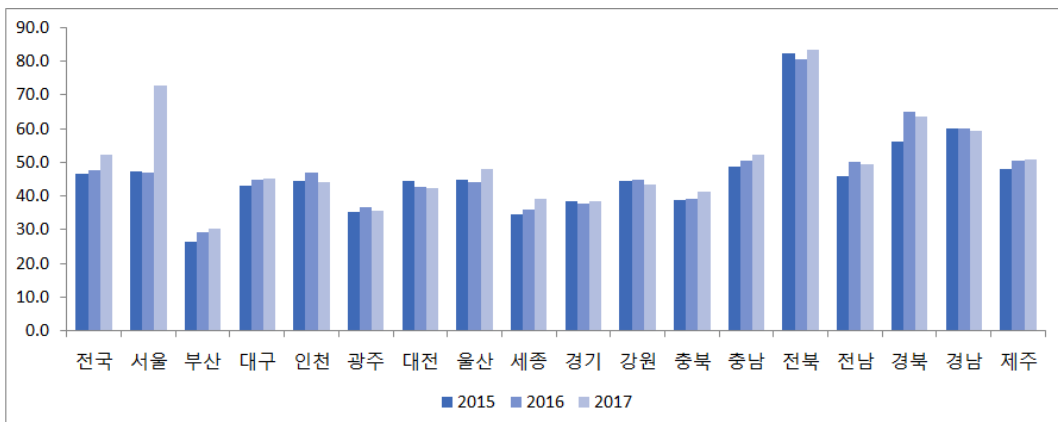
-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은 2010년 6%에서 2018년 8.2%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연령구조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림 5-31]은 치매환자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음.

-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46.7%에서 2017년 52.1%로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가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으로 전북, 서울, 경북, 경남 순으로 등록률이 높으며, 2015~2017년 사이의 등록률 상승은 서울 지역의 등록률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그림 5-31] 치매환자 등록률: 2015~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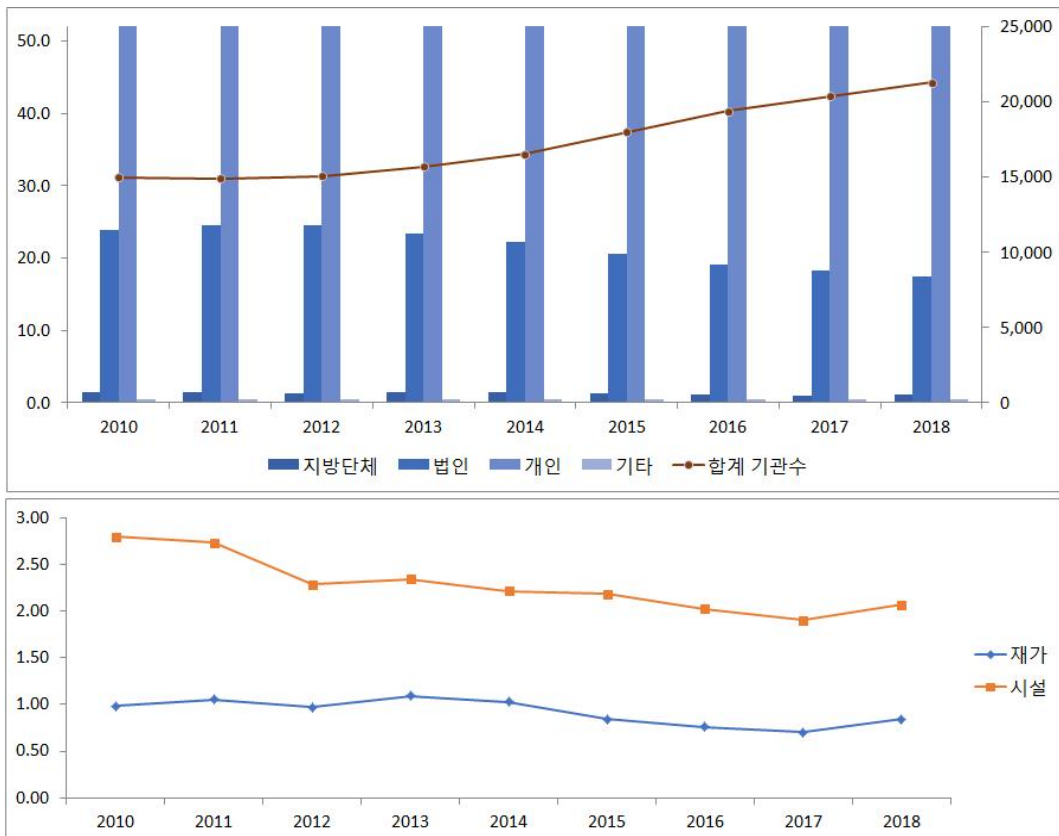
주. 치매등록률: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대비 60세 이상 치매상담센터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수
 자료: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각 연도)

○ [그림 5-32]는 노인의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 기관 수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는 2010년의 14,979개소에서 2018년 21,290개로 증가했으나, 국공립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단체’의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7년 1.0%까지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2%로 소폭 반등하였음.
- 지방단체 비중을 시설과 재가로 나누어 보면 시설급여 제공 기관의 2.1%, 재가급여 제공 급여의 0.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가 가능한 재가급여에서 개인 비중(83.8%)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32]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비중: 2010~2018

(단위: %, 개소)



주. 위는 시설과 재가를 합산한 것이며, 아래는 시설과 재가를 각각 구분한 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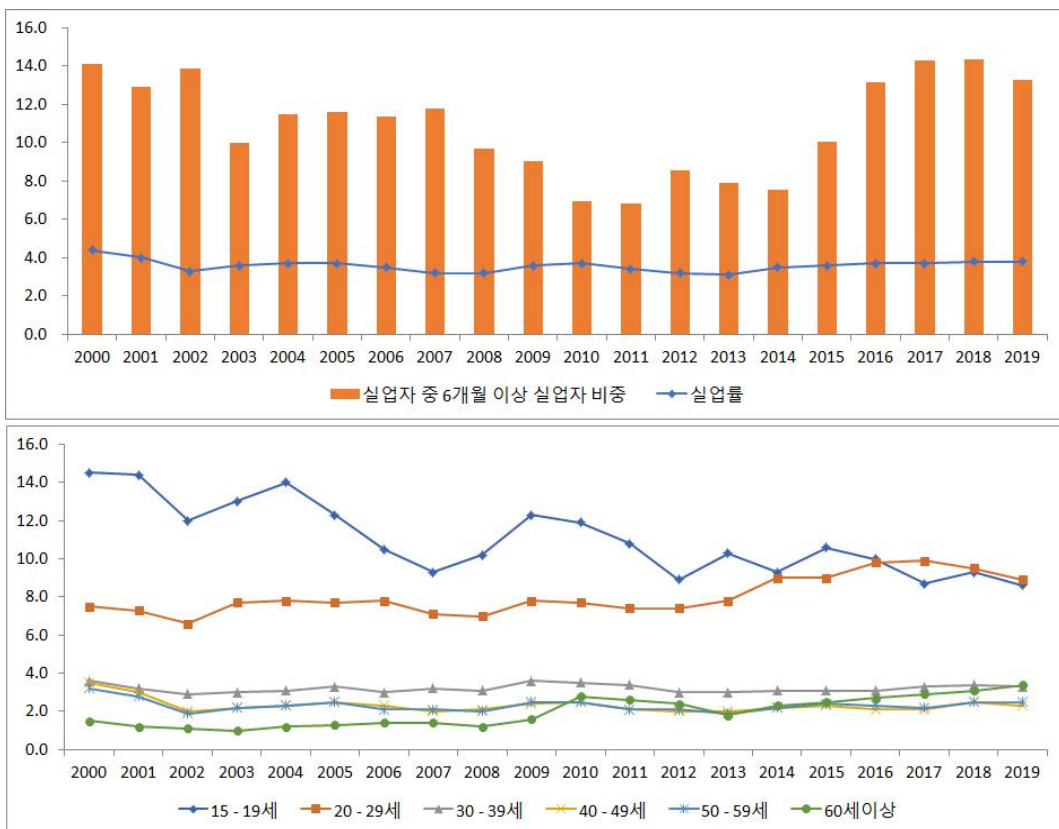
2. 생활기반

가. 소득

○ [그림 5-33]은 ‘소득’ 영역 첫 번째 지표로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²⁸⁾

[그림 5-33] 실업률, 장기실업률, 연령대별 실업률: 200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 실업률은 지난 20년간 3~4%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3.5~3.8% 사이에 머무르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비경활인구로 전환된

28) 실업률은 지표 작성 과정에서 소득이 아닌 일 영역과 더 맞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2개 정책목표 차원에서 보면 고용서비스를 포함하는 고용안전망이 소득 영역의 첫 번째 정책목표였기에 소득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지표가 결과(outcome) 차원 지표임을 고려하면, 일 영역과 소득 영역 양쪽 모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실업자가 많아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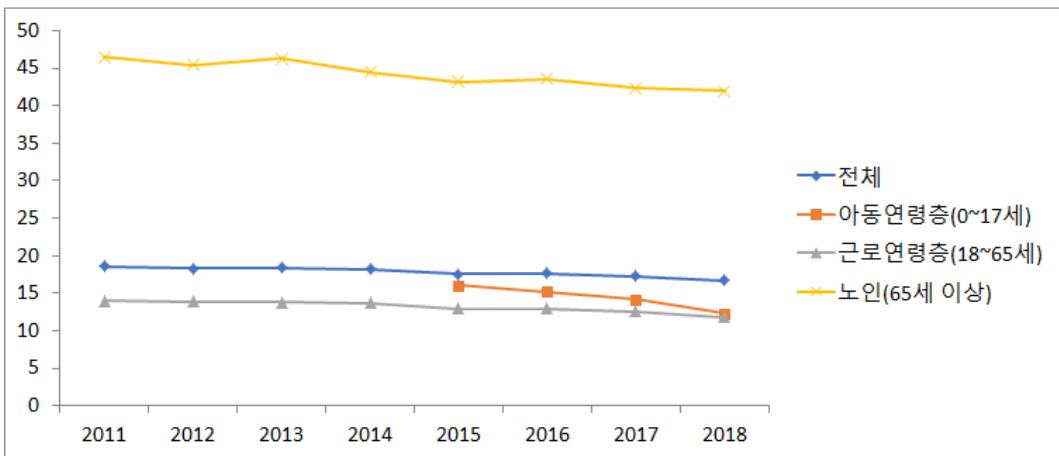
- 2014년 이후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정책적 주의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볼 때는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2014년 이후 현저히 높아지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실업률도 높아지는 추세임.

○ [그림 5-34]는 연령집단별 빈곤율을 나타냄.

- 전체인구 빈곤율(2018년 16.7%)과 연령집단별 빈곤율이 모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로연령층보다는 아동과 노인의 감소세가 더 뚜렷함.
- 노인인구 빈곤율은 하향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42%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그림 5-34] 연령집단별 빈곤율: 2011~2018

(단위: %)



주.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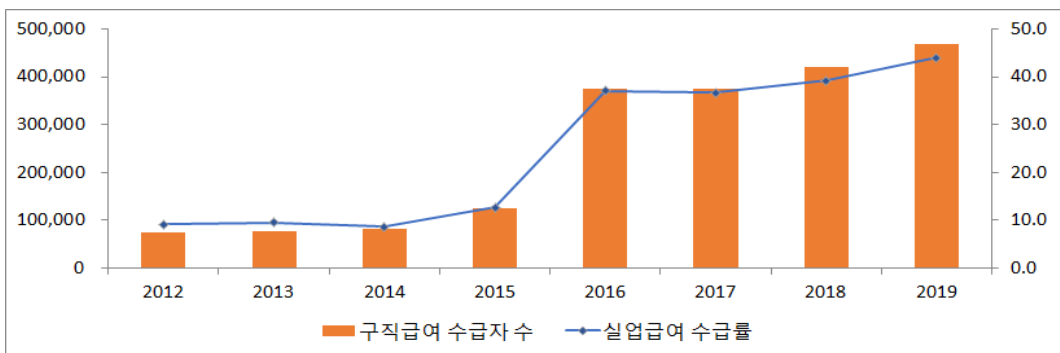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 [그림 5-35]는 실업 급여 수급률과 수급자 수를 나타냄.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실업자 대비 수급률은 모두 2015년 이후 상당히 증가했으며, 2019년 수급률도 전년 대비 4.5%p 증가한 44%임.
- 2019년 10월부터 확대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최대 270일)은 수급률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그림 5-35]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률: 2012~2019

(단위: 명, %)



주1. 실업급여 수급률: 구직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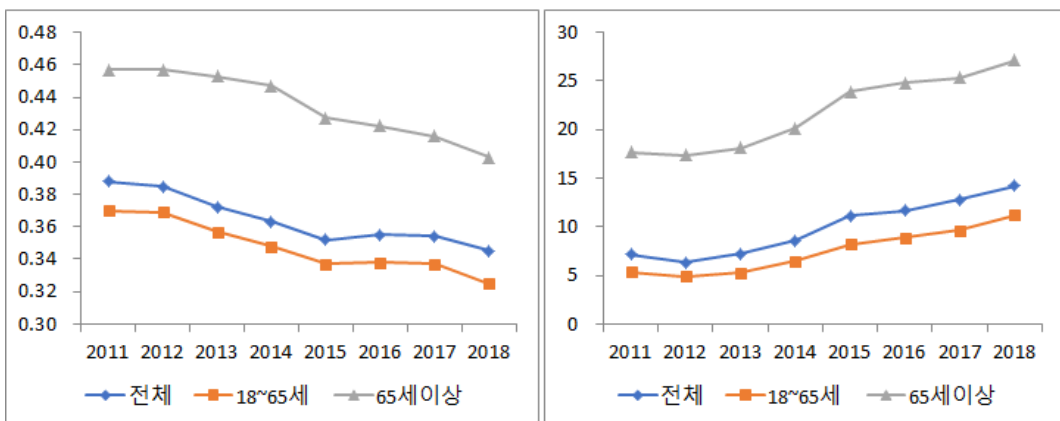
주2.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월별 통계를 평균하여 연간 구직자수를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 [그림 5-36]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세전후 지니계수 감소율을 나타냄.

[그림 5-3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좌)와 세전후 지니계수 감소율(우): 2011~2018

(단위: 지니계수, %)



주: 지니계수 감소율 = (시장소득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 / 시장소득지니계수 × 1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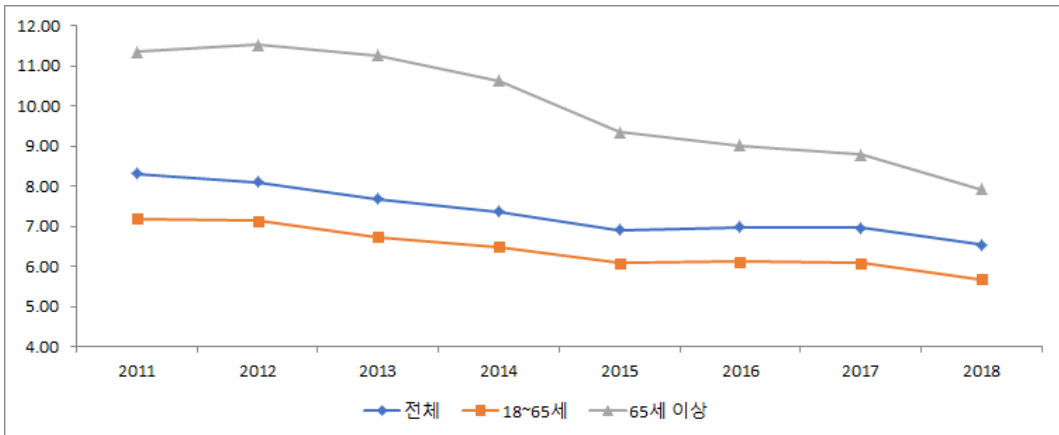
- 전체 인구집단 및 노동연령대 인구 및 노인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모두 비슷한 추이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는 2018년 기준으로도 0.4가 넘어 상당히 높은 상황
- 조세와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세전후 차이)은 반대로 노인인구가 약 27%, 노동연령대 인구가 약 11%로 노인인구에서 재분배 효과가 크며, 모든 집단에서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

○ [그림 5-37]은 소득 5분위 분배율 추이를 보여줌.

- 소득 5분위 분배율 역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정도는 노인인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도 노인인구의 5분위 분배율이 7.9배로 노동연령대 인구의 5.7배보다 상당히 큼.

[그림 5-37] 소득 5분위 분배율: 2011~2018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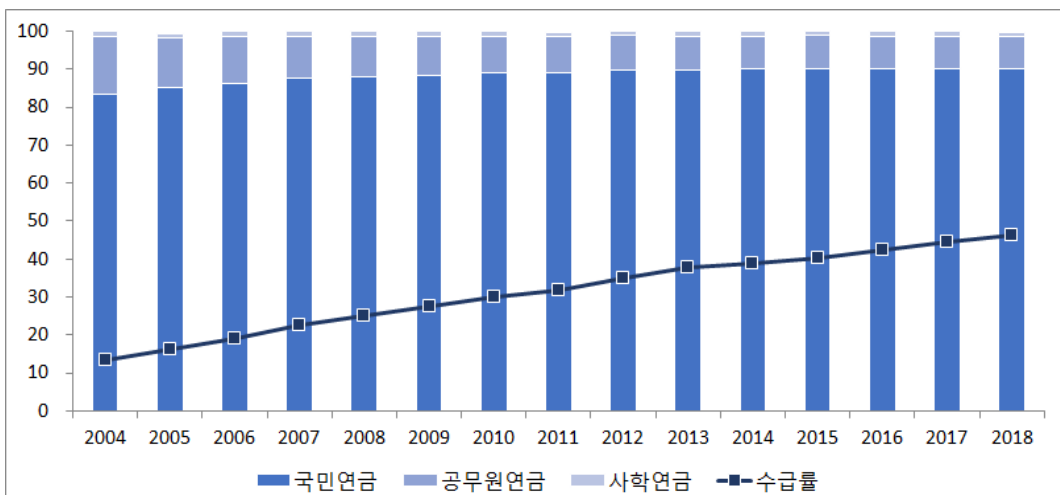
주. 소득 5분위 분배율 = 상위 20%의 소득 / 하위 20%의 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 [그림 5-38]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2018년 기준 46.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시계열적으로는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분(2018년 기준 90%)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가 이를 견인하고 있음.

[그림 5-38]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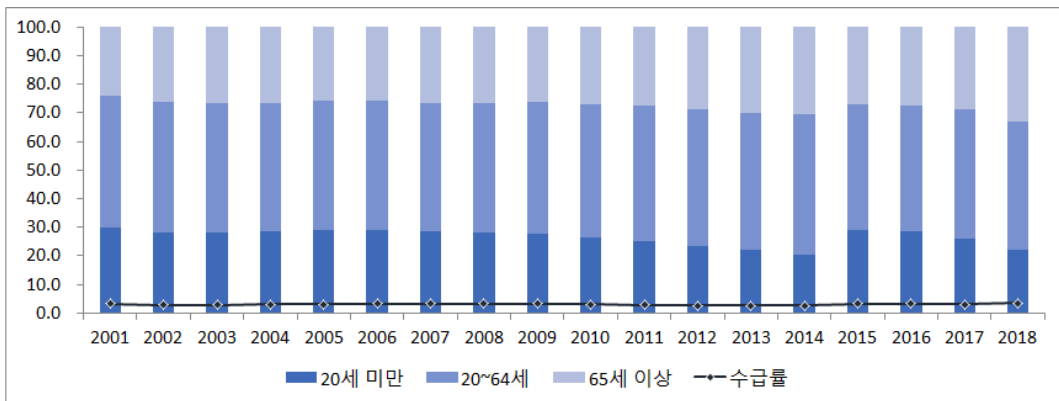
주. 65세 이상 공적연금수급률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사학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인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 [그림 5-39]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수급자의 연령구성을 보여준.

- 본래 소득 영역의 7번째 지표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표로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표지만, 관련 행정자료가 3년 단위로 산출되고 있으며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로 대체하여 설명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6~3.4%를 오가고 있으며, 지난 2014년 2.6%에서 2015년 3.2%로 높아진 이후 2018년에도 3.4%에 머물러 있음.
- 물론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resort)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174만명임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이 90만명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²⁹⁾, ‘소득’ 영역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수급률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그림 5-39]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전국민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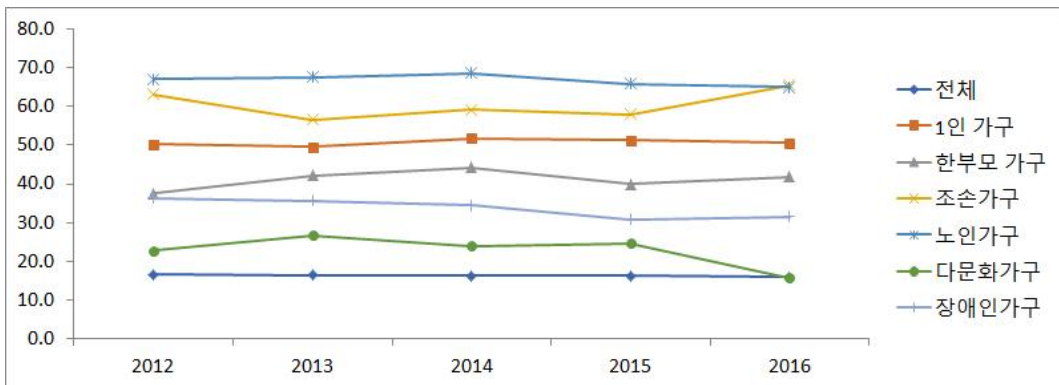
29)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 기준(관계부처합동, 2019: 16)

○ [그림 5-40]은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모든 유형의 취약계층 가구들이 전체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다문화 가구의 경우는 2016년 전체 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임.
- 빈곤율은 노인가구와 조손가구가 비슷한 정도로 높고, 한부모 가구와 1인 가구가 뒤를 잇고 있음. 노인가구와 조손가구, 그리고 노인이 약 1/3을 차지하는 1인 가구³⁰⁾의 빈곤율은 모두 노인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40]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 2012~2016

(단위: %)



주1.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상대빈곤율

주2.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주3. 조손가구: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주4. 노인가구: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주5. 다문화가구: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주6.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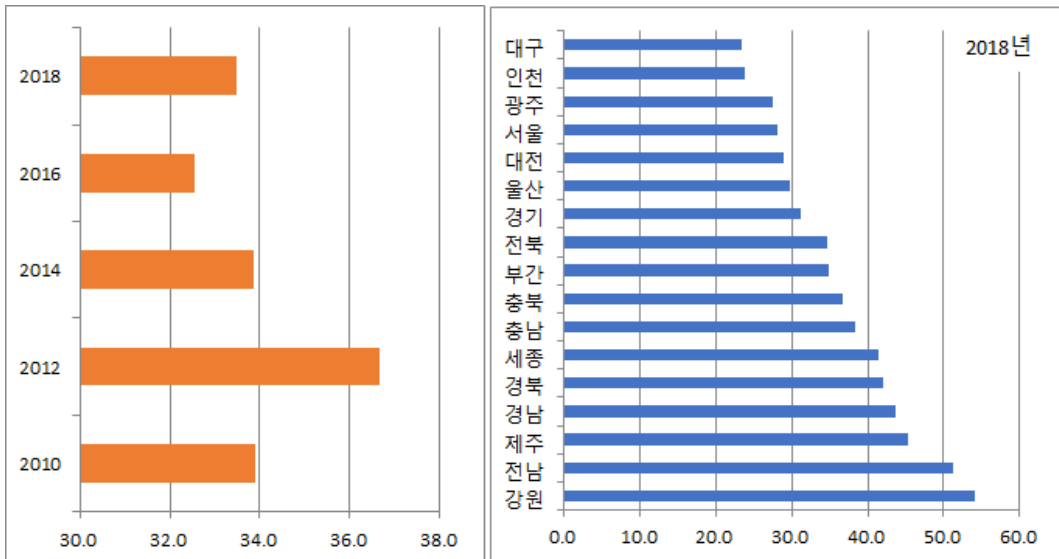
30)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onn_path=I3), 최종접속일: 2020-03-20.

나. 환경·안전

- [그림 5-41]은 ‘환경·안전’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환경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환경만족도는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자 비율)를 단순평균한 것임.
- 환경만족도는 30~35%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33.5%로 2016년에 비해 0.9%p 높아졌음.
-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강원이 54.1%, 대구가 23.5%로 큰 격차를 보임.
-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18년 기준 환경유형별로는 대기질이 28.6%, 수질(하천)이 29.3%, 토양이 29.4%, 소음이 29.9%, 녹지환경이 50.2%로, 가장 높은 녹지환경을 제외하면 만족도 평균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생활환경 개선이 향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5-41] 환경만족도 추이(2010~2018) 및 지역별 격차(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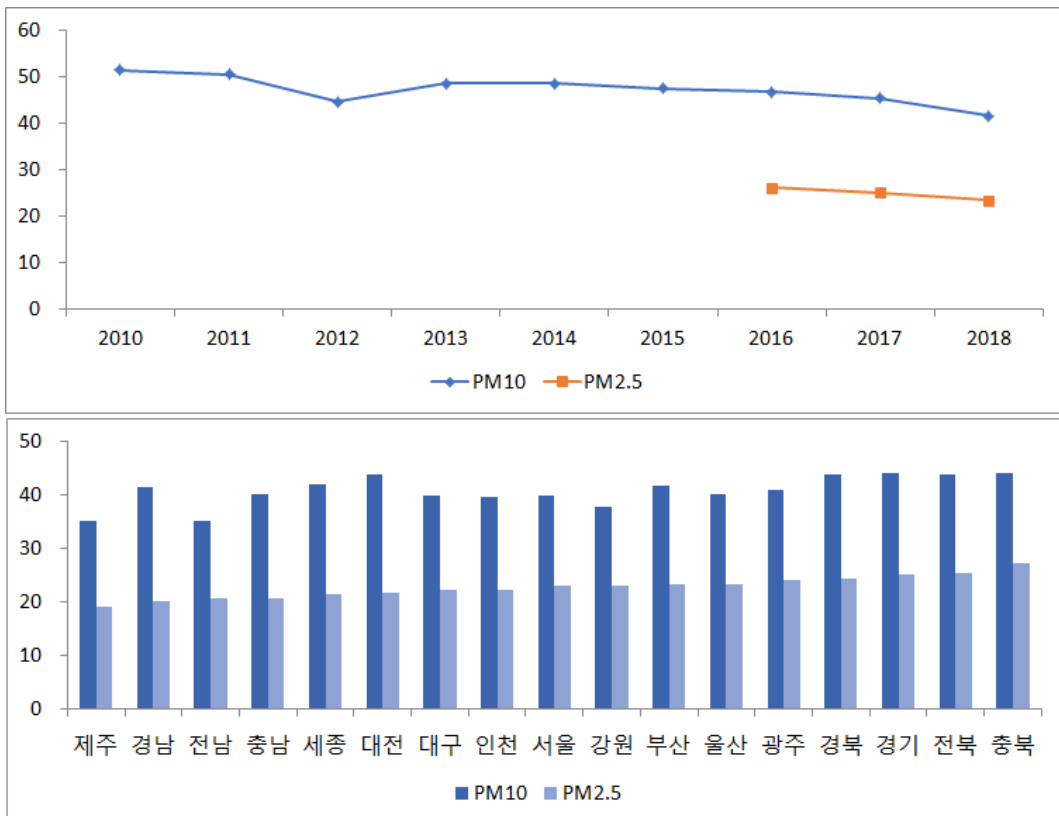


주. 환경만족도는 대기질, 수질(하천), 토양환경, 소음, 녹지환경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약간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그림 5-42]는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와 각각 PM10, PM2.5 기준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연평균으로 나타낸 것임.
- 시계열적으로 볼 때 전체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하여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단, 관측 위치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단순 평균했기 때문이 이를 국가 평균으로 볼 수는 없음).
 - 2018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PM2.5는 제주가 가장 낮고, 경남, 전남이 뒤를 이으며, 전북이 가장 높음. 반면 PM10의 경우는 제주, 전남, 강원 순으로 낮고, 경기와 충북이 공동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5-42]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2010~2018)과 지역별 오염도(2018)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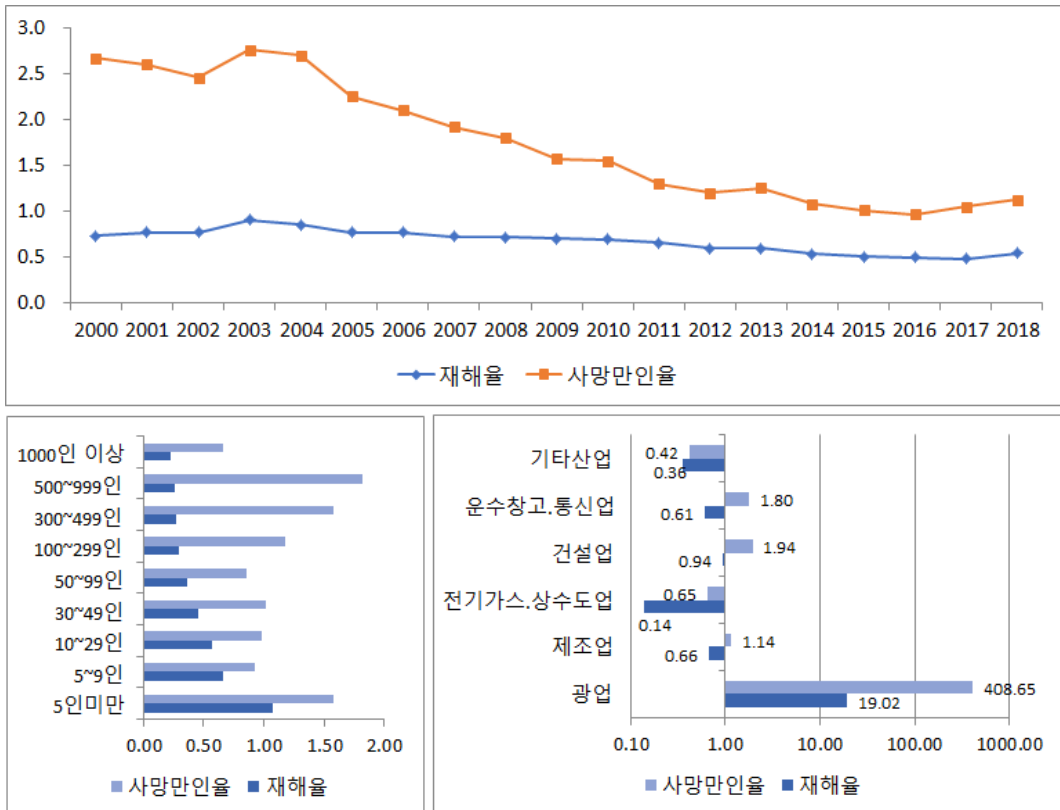
주. 전체 월평균 오염도는 참고사항이며, 국가전체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각 년도).

○ [그림 5-43]은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율(만인율)을 나타낸 것임.

- 산업재해율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18년에는 0.54%로 지난 4년간('14년~'17년)보다 높아진 추이를 보임.
- 이는 산재사망만인율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감소폭은 산재발생률보다 현저히 크지만, 2018년에는 1만명당 1.12명을 기록하여 지난 4년간의 추이보다 높았음.

[그림 5-43] 산재발생율 및 사망률 추이(2000~2018)와
사업장규모·산업에 따른 격차(2018)

(단위: %, ‰)



주. 산업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그래프는 로그스케일임에 주의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각 년도)

-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산업재해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사망만인율은 500~999인이 가장 높고, 5인 미만과 300~499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관성이 낮음. 이는 업종차이의 영향이 크기 때

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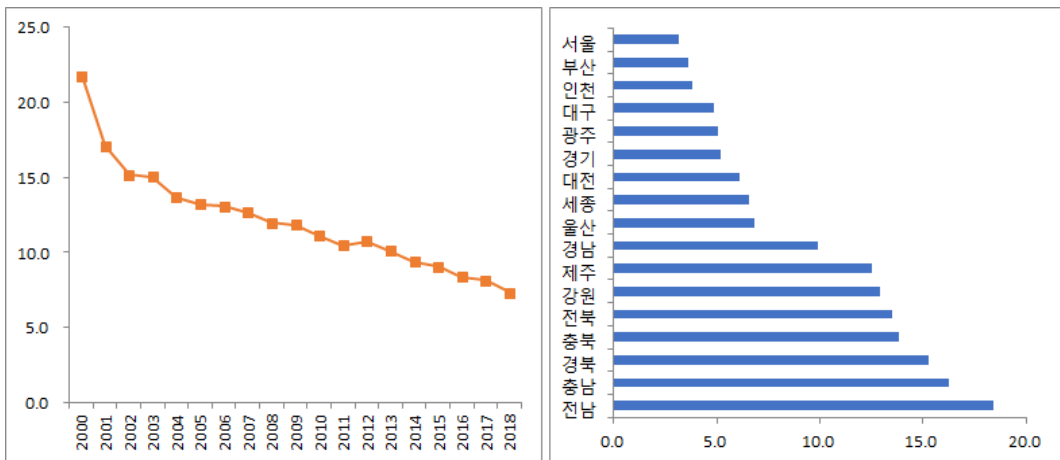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광업의 재해율 및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산재율의 경우 산재은폐의 영향이 있어 산재발생율의 상승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산재은폐현황을 고려할 때, 산재관리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산재발생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그림 5-44]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임.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8년 7.3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 지역별로는 전남(18.4), 충남(16.2), 경북(15.3) 등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서울(3.1), 부산(3.6), 인천(3.8) 등은 낮은 사망률을 보임.

[그림 5-44]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2000~2018)
및 지역별 격차(2018)

(단위: 명/십만명)



주1. 도로교통사고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주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주3. 총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중 중위추계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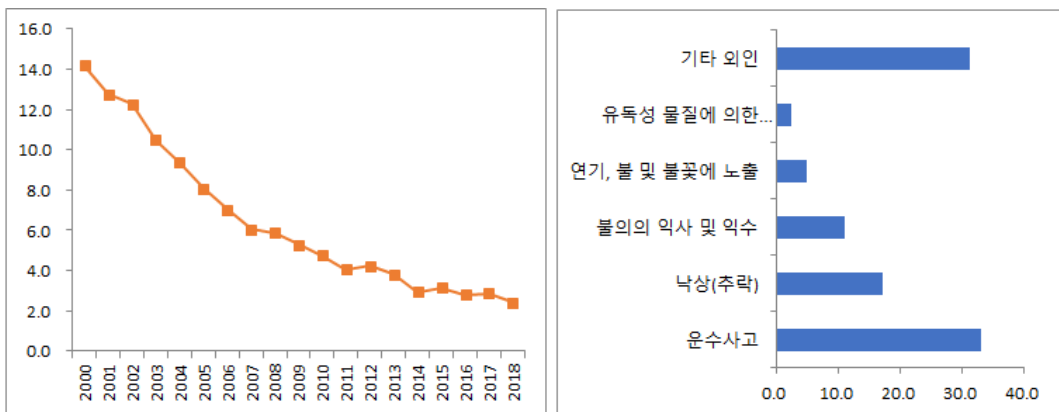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각 년도).

○ [그림 5-45]는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임.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0만명당 14.2명이었던 것이 2018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사이에도 3.8명에서 2.4명으로 상당한 감소폭을 보임.
- 아동 안전사고 원인별로는 운수(교통)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낙상, 익사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5-45]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십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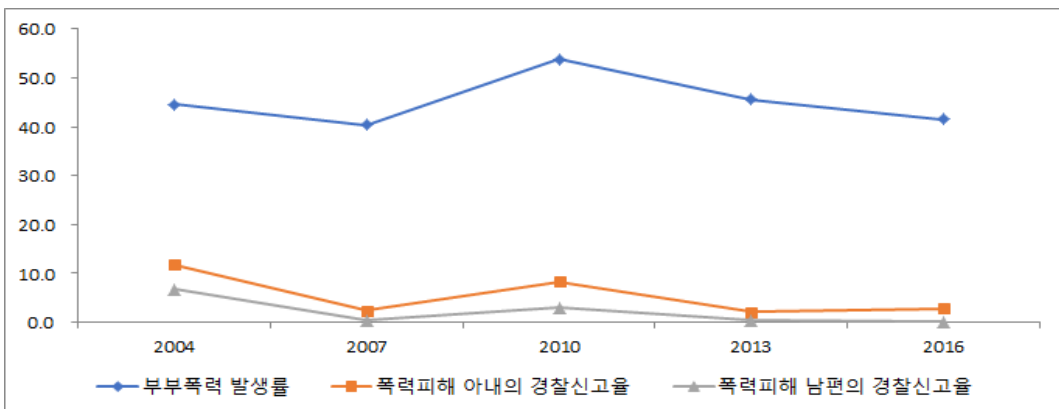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각 년도).

○ [그림 5-46]은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을 및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46]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을 및 신고율 추기(2004~2016)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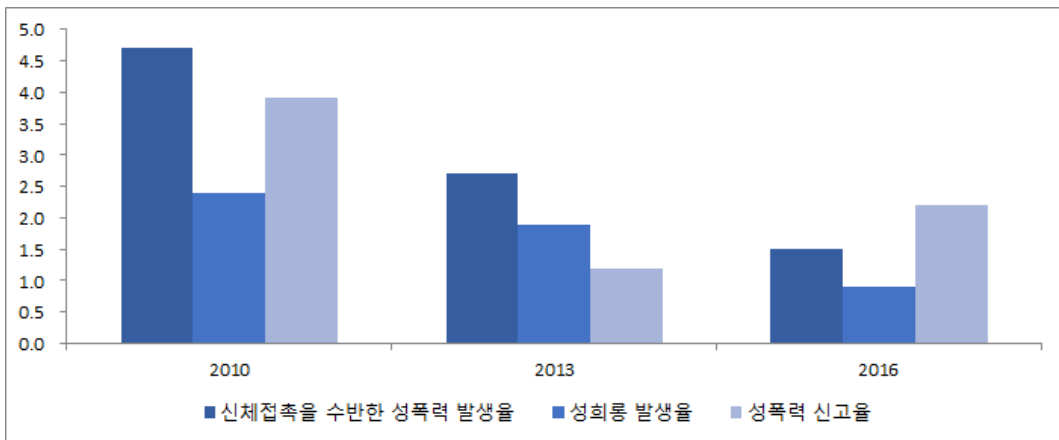
- 부부폭력 발생율은 지난 10여년간 40~45%를 오가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고율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47]은 성폭력·성희롱 발생률 및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률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폭력 신고율은 2014년 감소했다가 2016년 증가함.
- 성폭력 신고율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적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향이 필요하지만, 2016년 기준 2.2%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5-47] 성폭력·성희롱 발생률 및 성폭력 신고율

(단위: %)



주1.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주2. 성폭력 신고율: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각 년도).

○ <표 5-2>는 범죄피해에 대한 추정건수를 나타낸 것임.

- 2012, 2014, 2016년을 비교할 때 추정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율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범죄유형별(폭력범죄, 재산범죄)로 구분해 볼 때도 마찬가지임.

<표 5-2> 범죄피해율: 2012~2016년

구분		2012	2014	2016
전체	추정 피해건수	1,975,155 건	1,648,170 건	1,660,589건
	추정 피해율	4.60%	3.74%	3.56%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4600.2 건/10만명	3742.5 건/10만명	3555.7 건/10만명
폭력범죄	추정 피해건수	329,819 건	163,696 건	181,115 건
	추정 피해율	0.77%	0.37%	0.39%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768.2 건/10만명	371.7 건/10만명	387.8 건/10만명
재산범죄	추정 피해건수	1,645,336 건	1,449,005 건	1,479,474 건
	추정 피해율	3.83%	3.29%	3.17%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3832 건/10만명	3290.2 건/10만명	3167.9 건/10만명

주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주2.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의 합이 전체 피해율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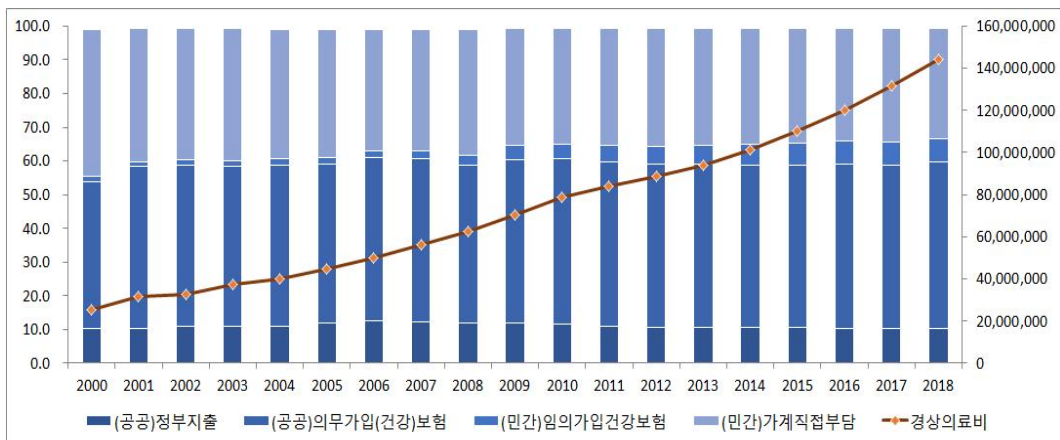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각 년도).

다. 건강³¹⁾

- [그림 5-48]은 ‘건강’ 영역 첫 번째 지표로 국민보건계정의 총경상의료비를 재원 유형별로 구분한 것임.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년간 총 경상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및 의무가입(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3.9%에서 2018년 59.8%까지 오히려 증가하여 보장성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민간재원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의 비중이 1.6%에서 6.7%까지 증가했으며, 가계직접부담(out-of-pocket payment)은 반대로 43.6%에서 32.9%까지 감소함.

[그림 5-48] 의료비 지출 구분: 200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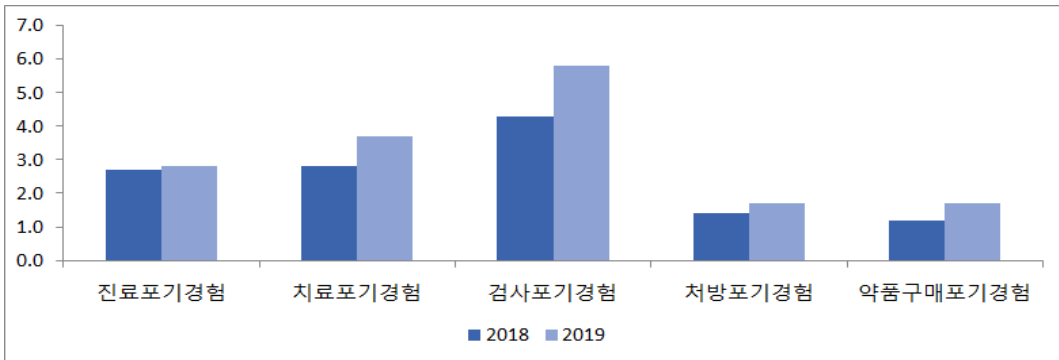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각 년도).

31) 건강 영역에서 선정된 지표 중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은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계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 해당 지표는 『추진계획』 당시 부처로부터 제안된 지표로, 향후 부처를 통해 행정자료를 확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49]는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을 나타낸 것임.
- 의료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포기경험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의료이용 포기가 나타나는 것은 검사 단계이며, 치료와 진료(방문)가 그 뒤를 이었음.
 -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포기가 증가함.

[그림 5-4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단위: %)



주1.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외래 서비스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조사함

주2. 외래 서비스와 입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양쪽에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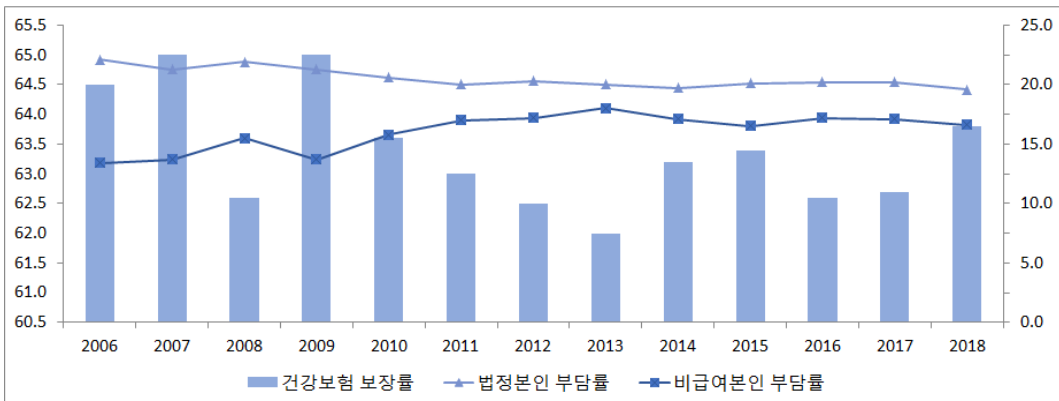
주3. 병원과 의원을 중복 방문했다라도, 최근 시점만 조사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각 년도).

- [그림 5-50]은 ‘건강’ 영역 세 번째 지표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본인부담의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5-50] 건강보험 보장률 및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률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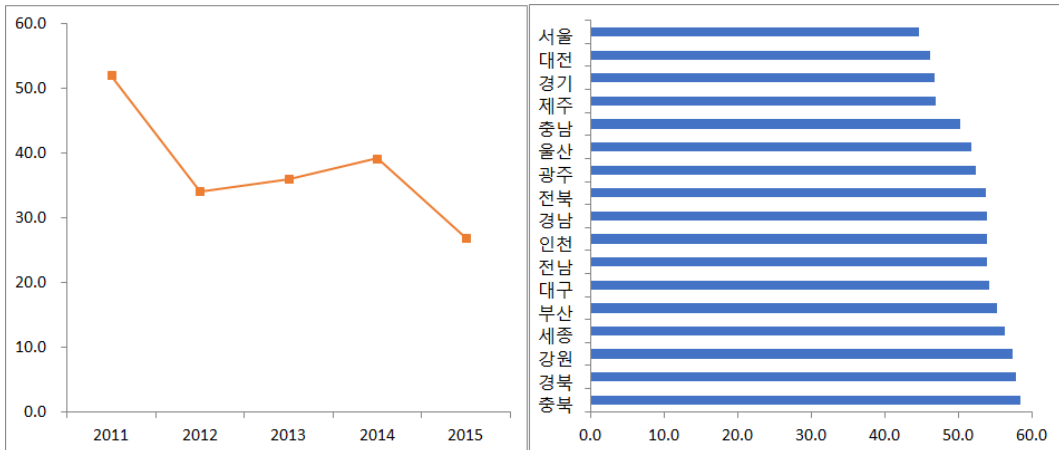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그 반대급부로 본인부담률도 총액은 낮아짐. 2010년부터 전체 본인부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은 '18년 46%로 향후 비급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림 5-51]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도간 격차를 나타냄.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의 시도격차는 2011~2012년 사이 감소했다가 2012~2014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이, 2015년 들어 다시 상당 부분 감소함. 그러나 추이의 진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함.
- 2015년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치료가능 사망률을 비교하면 서울이 10만명당 44.6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 경기도 뒤를 잇고 있으며, 충북은 58.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강원도 그 다음으로 많음.
- 지역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의료인프라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적 고려가 필요

[그림 5-51]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2011~2015) 및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2015)

(단위: 명/십만명)



주1.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 가능한 사망으로 측정

주2. 시도격차 계산식: $\frac{[10\text{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text{최고시도})/10\text{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text{최저시도}) - 1]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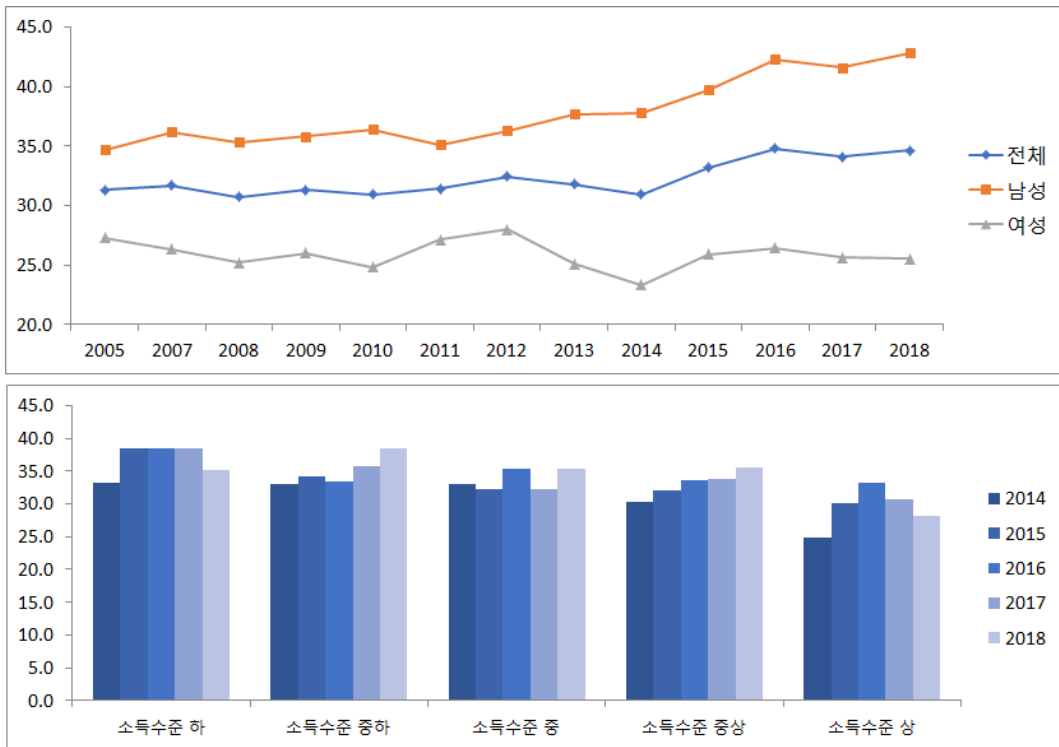
주3. 적용도구는 Nolte and McKee 값을 활용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각 년도).

○ [그림 5-52]는 비만유병률 추이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임.

- BMI 25 기준으로 봤을 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34.6으로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주의를 요함.
- 이를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비만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의 비만유병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보다 높은 비만유병률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의 추이 역시 소득집단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임.

[그림 5-52] 비만유병률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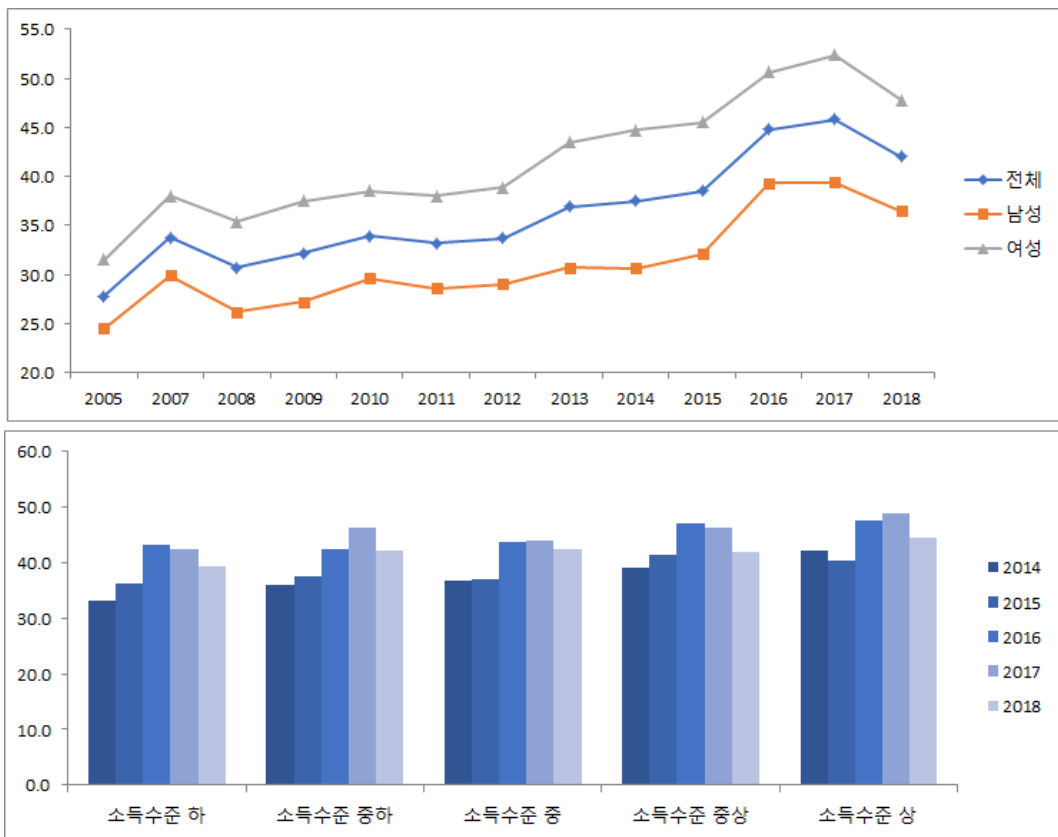
주1. 비만유병률 = (만 19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kg/m²) 25 이상인 응답자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 100.

주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대별(5세 단위) 5분위로 분류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 [그림 5-53]은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임.
- 6세 이상 아동, 청소년, 성인의 건강식생활 실천율의 경우 장기추세는 개선되는 경향이였지만, 2018년에는 2016~2017년에 비해 하락하여 2018년 42%를 나타냄.
 - 집단별 차이는 비만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남성보다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53]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단위: %)



주1. 건강식생활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주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대별(5세단위) 5분위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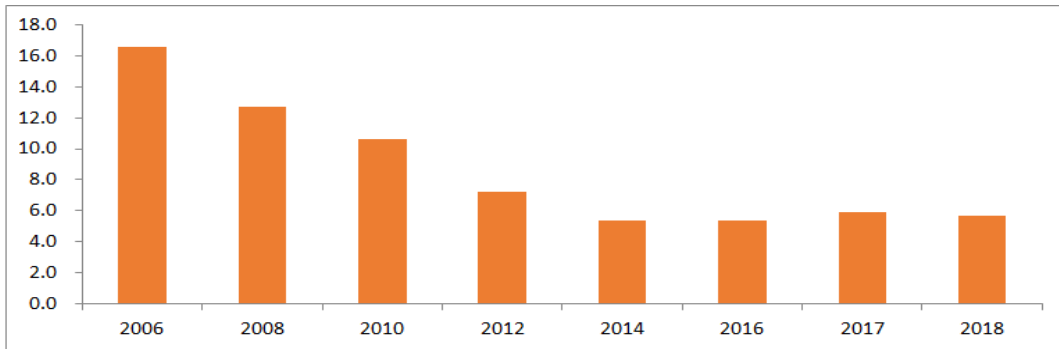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라. 주거·지역

- [그림 5-54]는 주거·지역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2010~2012년 사이 상당 부분 하락한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8년 5.7%로 전년(5.9%) 대비 소폭 하락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로 광역시(4.4%)나 도지역(4.7%)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5-5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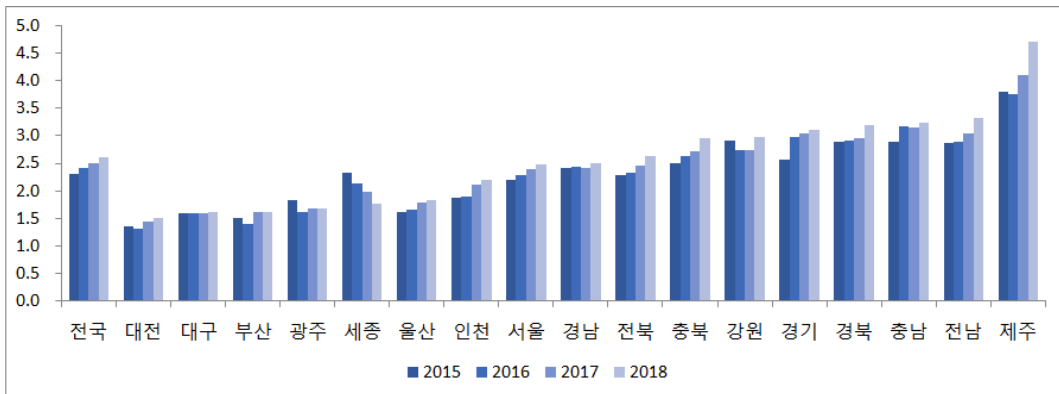
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총가구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년도).

- [그림 5-55]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주거하는 가구의 비율임.

[그림 5-55]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2015~2018)

(단위: %)



주.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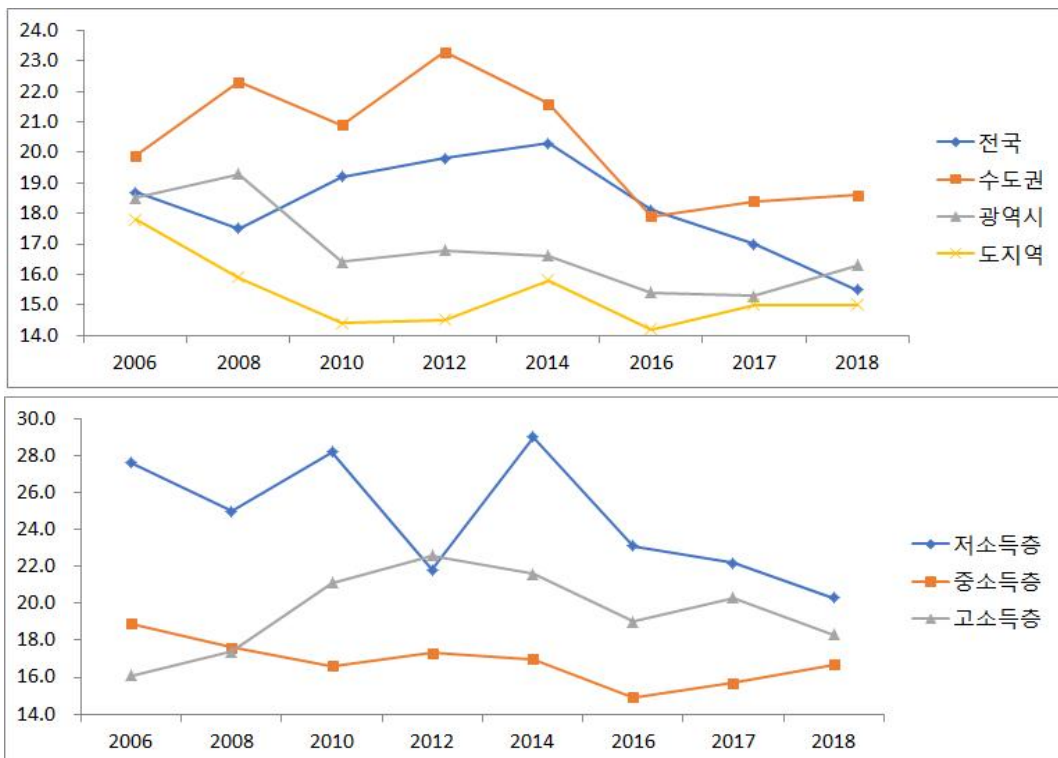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각 년도).

- 지난 4년간 전국 기준의 주택이외 거처 가구 비율은 조금씩이지만 매년 상승하여, 2018년에는 2.6%에 이르렀음.
- 지역별로 보면 제주의 주택 이외 거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높아 대체로 광역시보다는 도지역의 거주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대구, 광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최근 주택이외 거처 가구비율이 상향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그림 5-56]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나타낸 것임.

[그림 5-56]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18

(단위: %)



주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주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주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 지역)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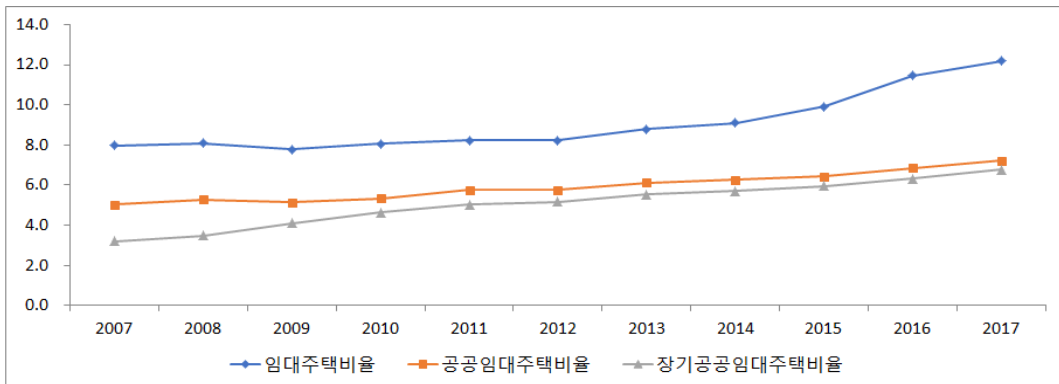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임대료 비율은 일정한 등락을 반복해왔는데, 최근 4년간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RIR은 주택임대료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광역시>도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57]은 전체 가구 대비 임대주택 거주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 공공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은 각각 2007년의 5.0%, 3.2%에서 2018년 7.2%, 6.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다만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주택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014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5-57]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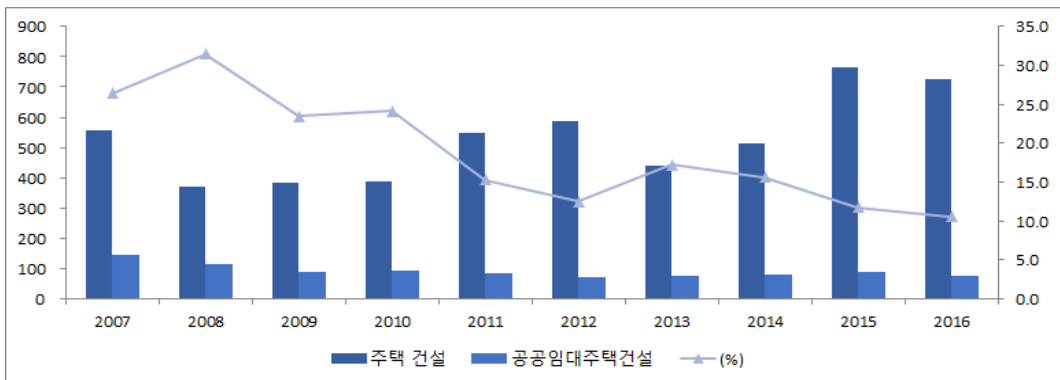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 [그림 5-58]은 신규 주택 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보여줌.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전체 주택 건설 호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0.6% 수준임.

[그림 5-58] 신규주택 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

(단위: 천 호, %)



주. 주택건설은 인허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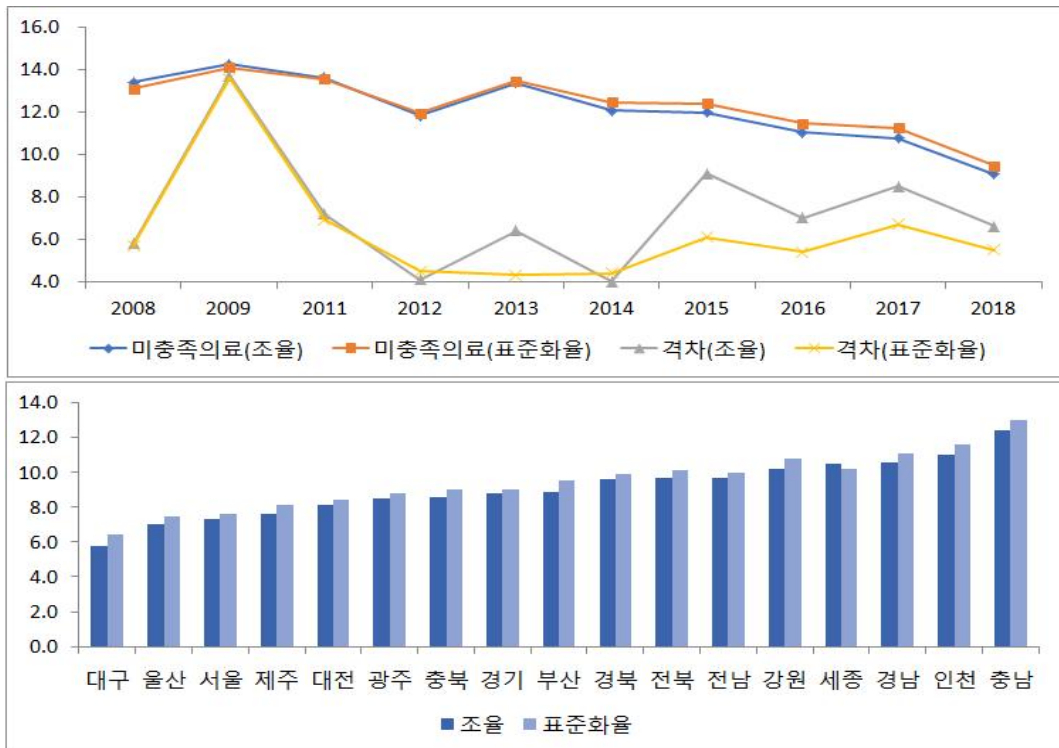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 [그림 5-59]는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 및 미충족 의료율 격차와 2018년 기준의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국단위 미충족 의료율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격차(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 차이)는 시기별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년도(2017~2018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

[그림 5-59] 미충족 의료율 추이 및 지역별 격차: 2008~2018

(단위: %)



주1. 격차: 해당 년도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차이

주2. 조율: 총 발생 건수를 전체 모집단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역 모집단의 성/연령별 등의 인구 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보정한 통계치(조사연도 7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주3. 표준화율: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 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2005년 추계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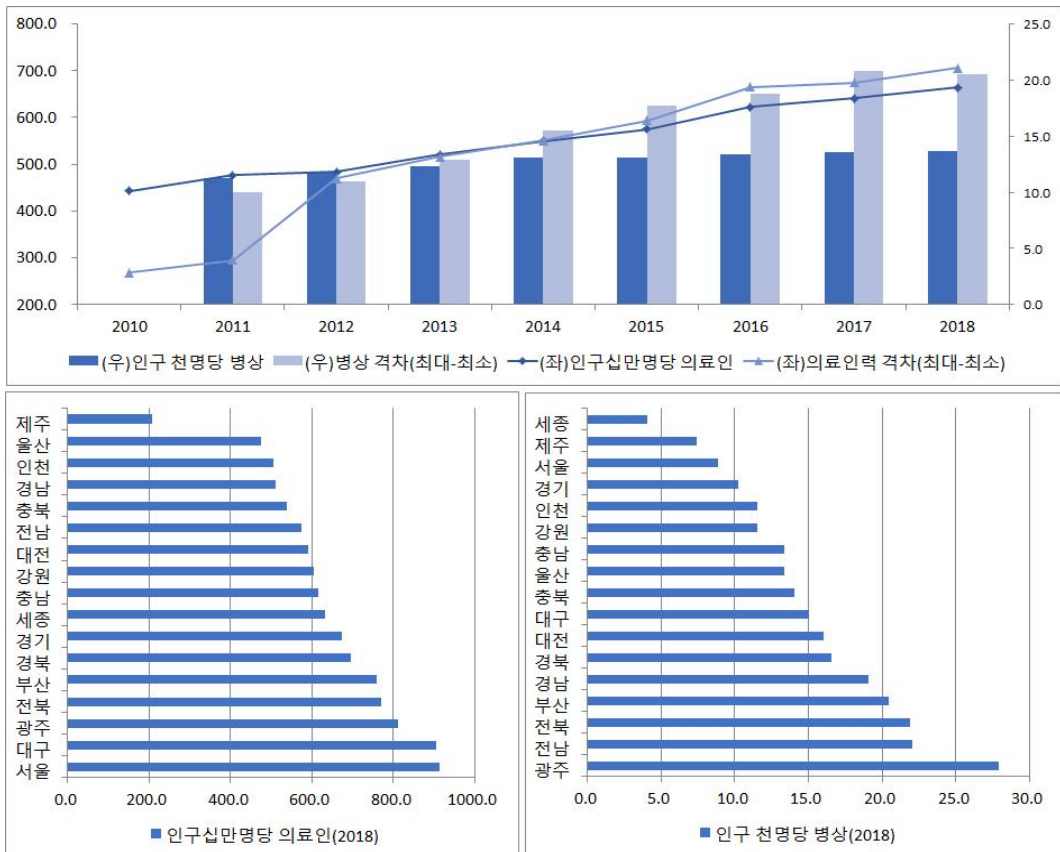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각 연도).

- 2018년 기준 미충족 의료율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구가 가장 낮고, 울산, 서울이 뒤를 잇고 있으며, 반대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고, 인천, 경남이 그 뒤를 이음.

- [그림 5-60]은 의료시설 접근성을 인구십만명당 의료인과 요양기관의 수로 나타내어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본 것임.

[그림 5-60] 의료접근성 지역별 격차: 2010~2018

(단위: 십만명당 명, 천명당 수)



주1. 격차: 해당년도 의료시설 숫자가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차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각년도).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시계열적으로 증가추세는 아니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대-최소 격차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최대인 광주와 최소인 세종이 모두 이상치에 가까운 증가와 감소(세종의 경우는 병상의 감소보다는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의료인력의 경우 인력도 증가하지만, 격차도 증가하고 있음.
- 횡단면적으로 볼 때도 지역간 격차가 큰데, 의료인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가, 병

상은 광주, 전남 등 고령화 정도가 큰 지역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제2절 국제비교³²⁾

-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지표 중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함.
 - 국제비교를 위해 OECD 통계 및 Better Life Index, EUROSTAT 및 Quality of Life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제시한 사회지표들을 비교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64개 지표 모두가 국제비교가 용이한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일부 선정하여 영역별로 비교를 진행함.
 - 국제비교 시 해외 자료와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는 제1절의 시계열 자료와 다른 방식으로 지표를 추출하였음. 다만, 이 경우에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개념 자체는 변화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국제비교분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분석하고자 함
 -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함
 - 국제지표와 국내지표가 상이할 경우 국제지표 값을 기준으로 분석 수행
 - 영역 내 다른 세부분야의 지표를 선정하여 비교 추진

1. 삶의 영역

가. 돌봄

- 본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 지표를 OECD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였음.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표는 OECD의 Enrolment rates in pre-primary education or primary school, children aged 3 to 5 year old로, 이를 통해 만 3세~5세 사이의 유

32) 이 부분의 원고는 연세대학교 윤성열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함께 작성하였음.

아 중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OECD 35개국의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은 아래 표와 같음.
 - OECD 기준으로 2017년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은 94.6%로 OECD 35개국 중 11위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87.2%와 비교하여 7.4%p 높은 수준으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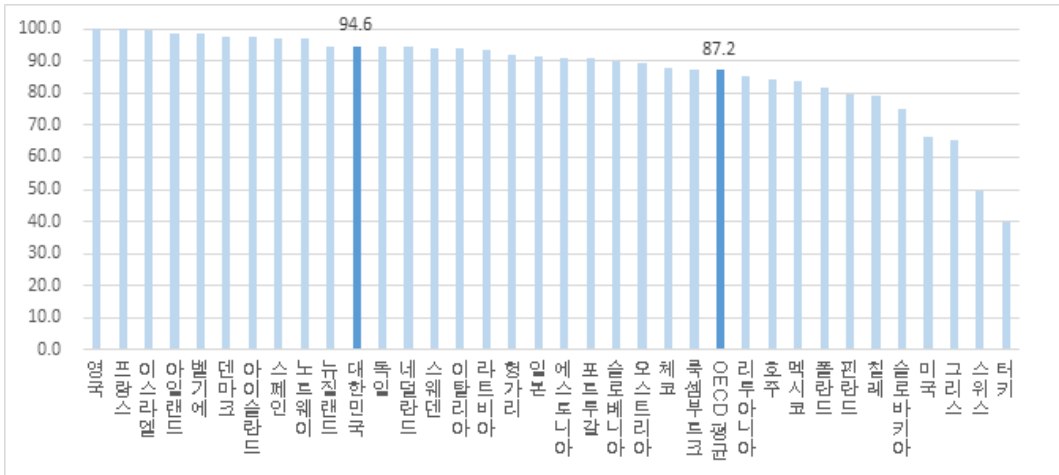
<표 5-3>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국가	이용률(%)	국가	이용률(%)	국가	이용률(%)
영국	100.0	네덜란드	94.5	OECD 평균	87.2
프랑스	100.0	스웨덴	94.1	리투아니아	85.0
이스라엘	99.4	이탈리아	93.9	호주	84.0
아일랜드	98.4	라트비아	93.3	멕시코	83.8
벨기에	98.4	헝가리	92.0	폴란드	81.6
덴마크	97.5	일본	91.4	핀란드	79.5
아이슬란드	97.4	에스토니아	91.1	칠레	79.2
스페인	97.1	포르투갈	90.9	슬로바키아	74.9
노르웨이	96.9	슬로베니아	90.0	미국	66.1
뉴질랜드	94.6	오스트리아	89.3	그리스	65.3
대한민국	94.6	체코	87.7	스위스	49.5
독일	94.6	룩셈부르크	87.5	터키	39.7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3일 자료 인출)

[그림 5-61]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3일 자료 인출)

-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만 3세~5세 아동 전체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 호주, 핀란드,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아동들이 생애 초반기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받고 있음.

- 이는 향후 한국에서 아동보육정책의 초점이 아동보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즉,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이 중요

나. 배움

- 본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PISA) 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력수준과 성인교육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함.
- 청소년의 학력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PISA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성과와 위험성을 진단하고자 함.
- 성인교육 현황은 Education at a glance의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이는 2016년 수행된 Adult Education Survey와 2012년 수행된 PIAAC 데이터 등을 활용하였음.

- 학업성취도(PISA) 수준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여 기존의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
 - 학업성취도 수준은 각 국가의 PISA 평균점수와 분야별 2수준 미만의 비중을 통해 살펴볼 것임.
 - 평균점수는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한다면, 분야별 2수준 미만의 비중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의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PISA)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519.7점이며, 세부 분야로는 읽기 분야 514점, 수학 분야 526점, 과학 분야 519점으로 나타남.

<표 5-4> PISA 국가별 분야별 평균점수(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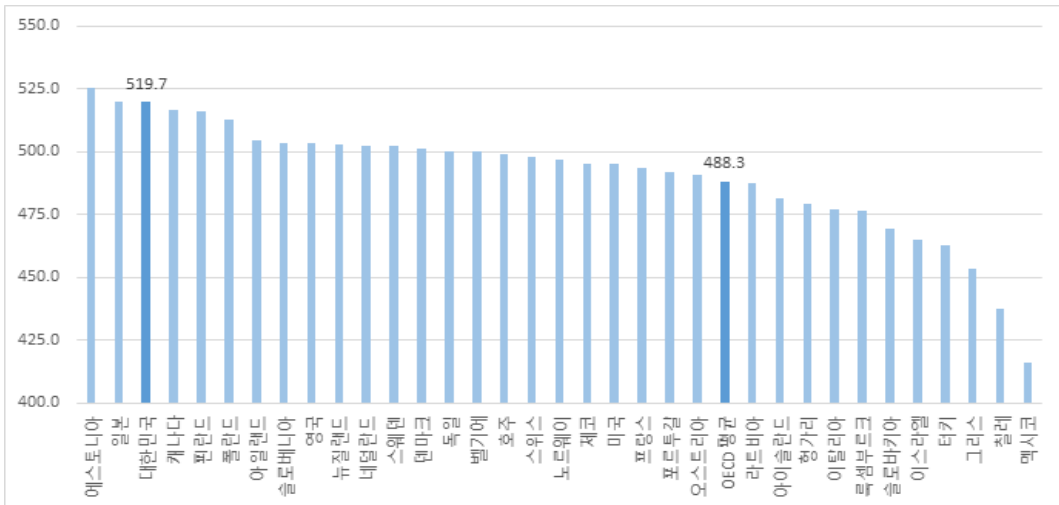
국가	읽기	수학	과학	평균	국가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에스토니아	523	523	530	525.3	체코	490	499	497	495.3
일본	504	527	529	520.0	미국	505	478	502	495.0
대한민국	514	526	519	519.7	프랑스	493	495	493	493.7
캐나다	520	512	518	516.7	포르투갈	492	492	492	492.0
핀란드	520	507	522	516.3	오스트리아	484	499	490	491.0
폴란드	512	516	511	513.0	OECD 평균	487	489	489	488.3
아일랜드	518	500	496	504.7	라트비아	479	496	487	487.3
슬로베니아	495	509	507	503.7	아이슬란드	474	495	475	481.3
영국	504	502	505	503.7	헝가리	476	481	481	479.3
뉴질랜드	506	494	508	502.7	이탈리아	476	487	468	477.0
네덜란드	485	519	503	502.3	룩셈부르크	470	483	477	476.7
스웨덴	506	502	499	502.3	슬로바키아	458	486	464	469.3
덴마크	501	509	493	501.0	이스라엘	470	463	462	465.0
독일	498	500	503	500.3	터키	466	454	468	462.7
벨기에	493	508	499	500.0	그리스	457	451	452	453.3
호주	503	491	503	499.0	칠레	452	417	444	437.7
스위스	484	515	495	498.0	멕시코	420	409	419	416.0
노르웨이	499	501	490	496.7	스페인*	-	481	483	-

주. 스페인의 경우 읽기영역 점수가 없어 평균점수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표준오차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순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수치는 에스토니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OECD 평균이 전체 평균 488.3, 읽기 487, 수학 489, 과학 489이므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30점 내외로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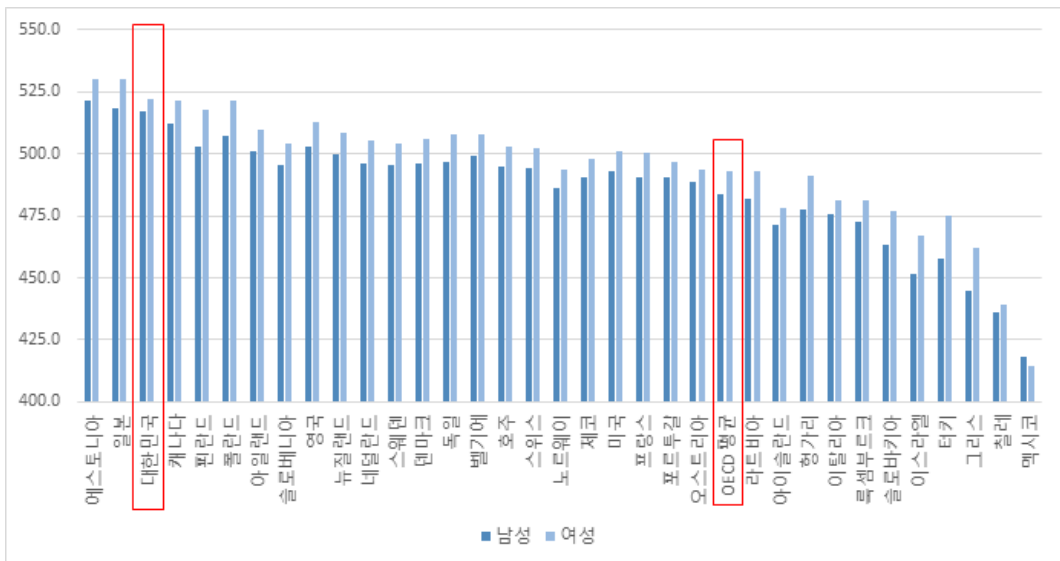
[그림 5-62] PISA 국가별 평균점수(2018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별에 따른 편차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남성의 PISA 평균점수는 517.3점, 여성의 PISA 평균점수는 522.3점으로 여학생이 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에 따르면 남성의 PISA 평균점수는 484.0점, 여성의 PISA 평균점수는 493.0으로 여학생이 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에스토니아 8.7점, 일본 11.3점, 핀란드 15.0점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이 남성보다 PISA 평균 점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별에 관계없이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63] PISA 국가별 성별 평균점수(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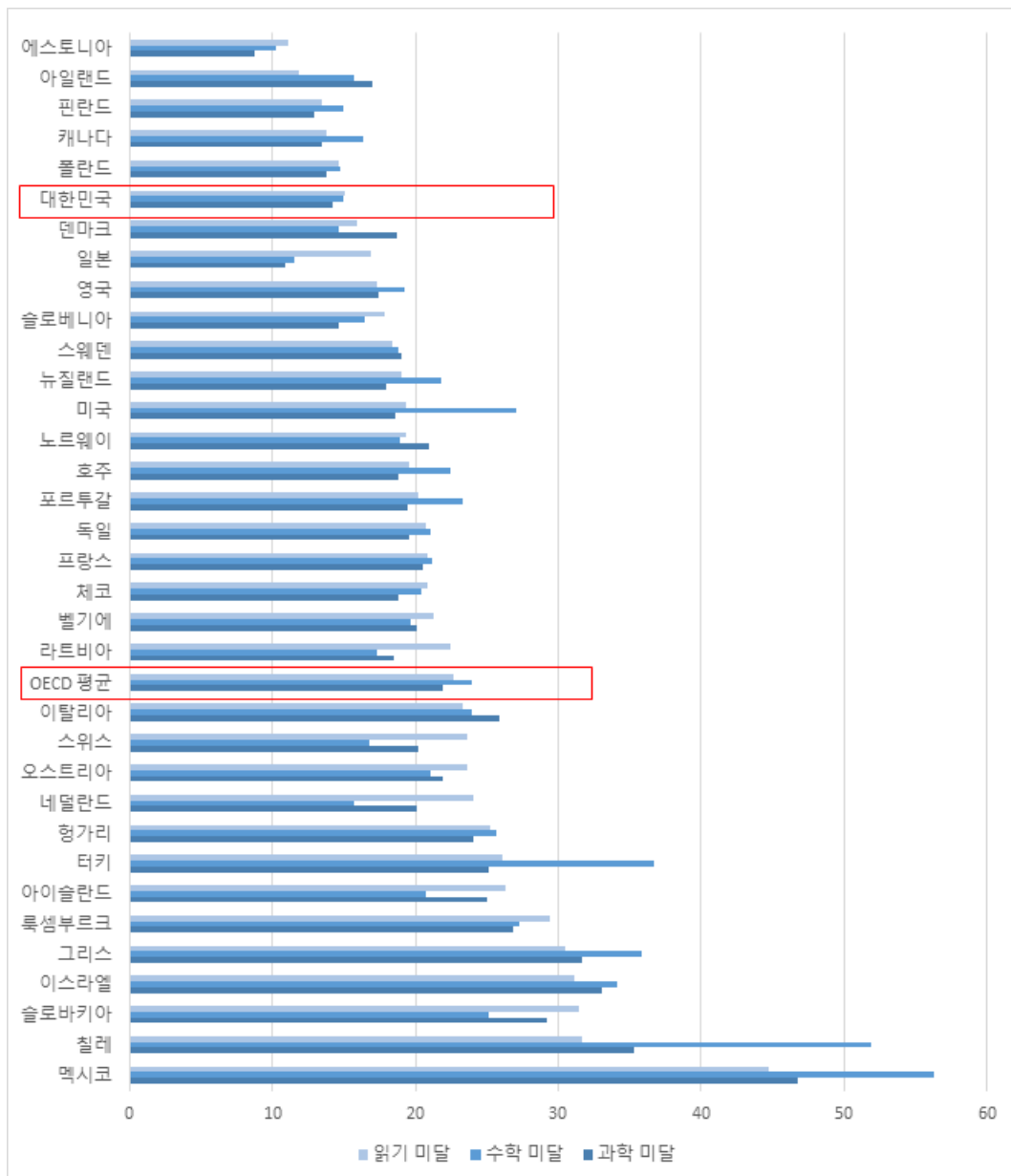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그러나 읽기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살펴볼 경우 다소 우려할 부분이 존재함.

- 전 영역에서 평균점수로는 에스토니아,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각 영역별 2수준 미만인 인구의 비중은 6번째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읽기 영역 15.1%, 수학 영역 15.0%, 과학 영역 14.2%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영역별 학력 수준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자들에게 어떠한 사회정책을 통해 포용하고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림 5-64] PISA 국가별 영역별 학력 미달 비중(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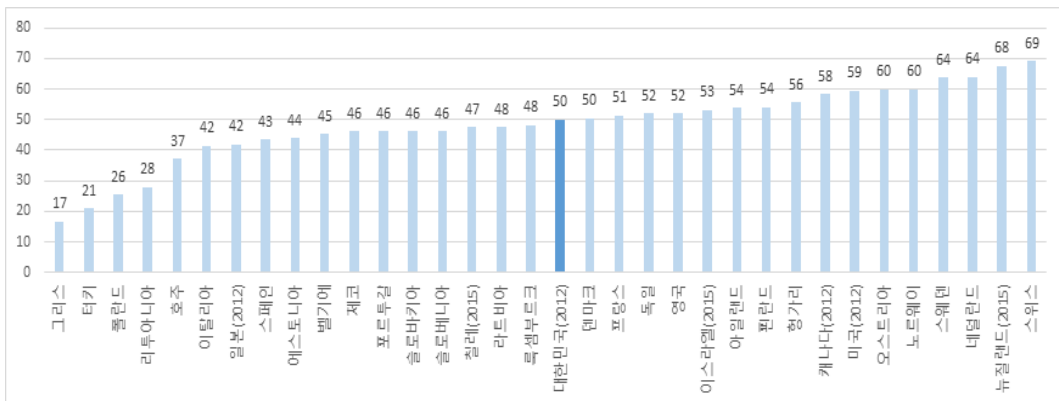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성인들의 인적자본 쇠퇴를 막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성인교육 참여율은 OECD 34개국 중 중위권으로 나타남.

- 2012년 PIAAC 서베이 결과³³⁾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공식 혹은 비공식에 관계없이 성인교육에 참여한 25세~64세 성인은 50% 정도임.
-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직업재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성인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5-65] 국가별 성인교육 참여율(2016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배움 영역의 국제비교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PISA 점수로 나타나는 한국의 학령기 인적자본은 여전히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영역별 2수준 이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수준 미만의 증가는 앞서 시계열 분석에서도 확인된 부분으로 향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참여율을 국제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성인인적자본이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반가운 외, 2018),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보임.

다. 일

○ 본 영역에서는 고용에 관련된 다양한 OECD 통계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33)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오래된 지표임이 사실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2015년, 2016년에 시행된 조사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음

- 우선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 연령대별 고용률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다른 국가의 고용률 차이 및 특이점에 대해 확인할 것임.
 - 이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차별 수준 역시 확인하고자 함.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2018년 기준 66.6%로, OECD 36개국 중 9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인 68.5%에 비해 약 2%p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면 18.2%p 낮게 나타나고 있음(84.8%).
 -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아래 그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성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75.9%인데 반면,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57.2%밖에 미치지 못함.
 - 성별 고용률 격차가 18.7%p로 OECD 평균인 15.1%보다 높음.
 - 터키(38.0%p)나 멕시코(33.5%p)보다는 적으나 그리스(19.5%p), 칠레(18.8%p), 이탈리아(18.1%p)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스웨덴(3.0%p), 핀란드(3.1%p), 노르웨이(4.3%p), 덴마크(5.5%p)등의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매우 큰 편이며, 다시 말해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이며 일·가정양립에 불리함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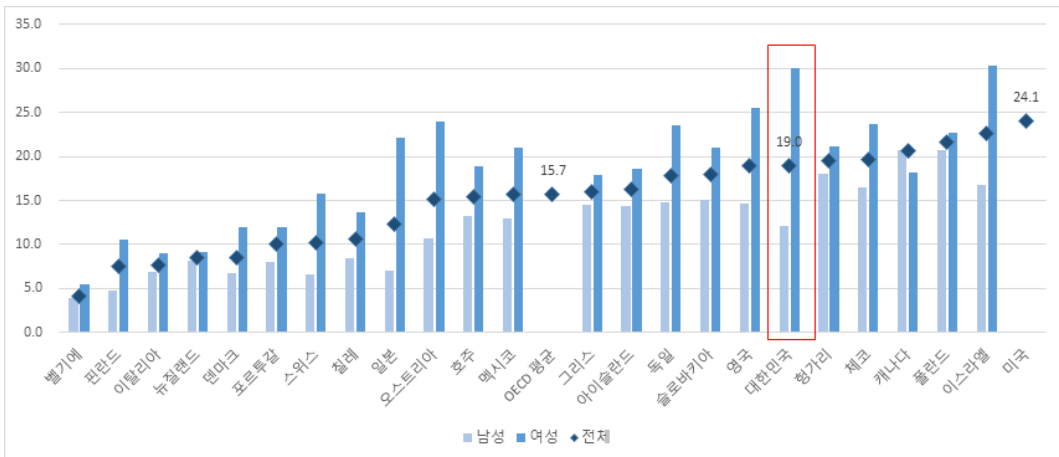
- OECD 평균의 경우 25-54세 고용률 78.4%, 55세-64세 고용률이 61.4%로 17.0%p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위소득의 2/3 이하를 급여로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8년 기준 19.0%로,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OECD 평균인 15.7%에 비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에 이어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23개국 중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0.0%로 OECD 23개국 중 이스라엘(30.4%)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중(12.1%)과의 격차는 17.9%p로 23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5-68] 국가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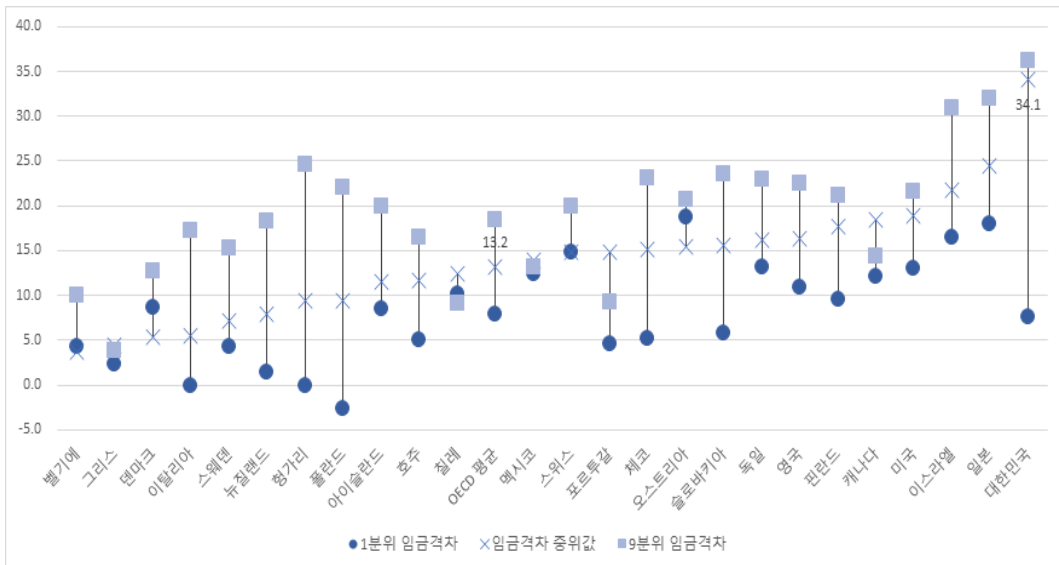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그림 5-69] 국가별 임금분위별 성별임금격차(2018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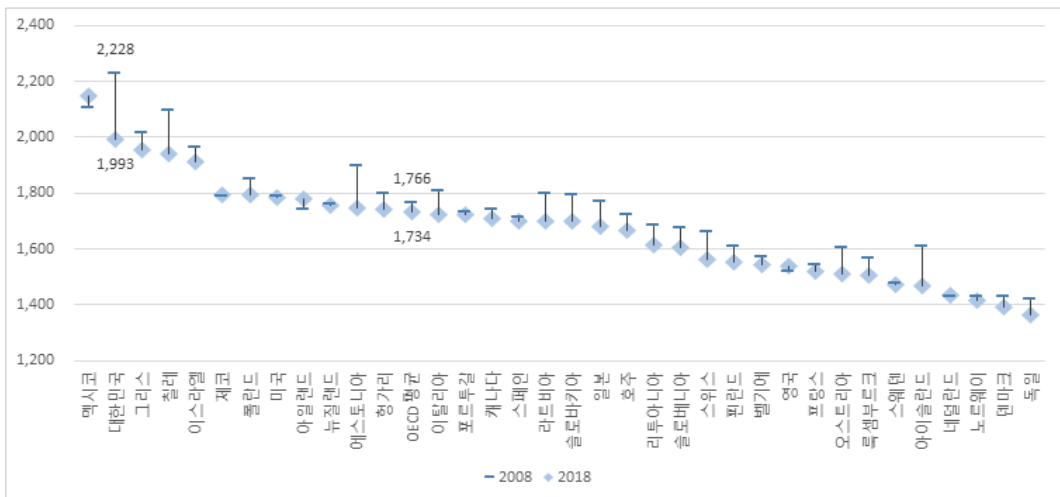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4.1%(임금격차 중위값 기준)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2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3.2%에 비해 20.9%p나 높은 수치임
 - 또한 소득 9분위의 임금격차(36.2%)와 임금격차 중위값을 함께 살펴보면, 고소득 계층과 중간계층의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OECD 25개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두 지표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여성에게 불리하며, 그 불리함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종보다는 고숙련 직종에서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 분석에서 과거에 비해 성별격차나 저임금 노동 문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국제비교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확인된 것임.

라. 쉼

- 본 영역에서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OECD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양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자 함.
 - 2000년대부터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의 여가시간 수준을 확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함.
- 2018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총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과거 2008년 2,228시간에 비해 약 235시간 가량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35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음.
 -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2,148시간인 멕시코에 비해 155시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 평균에 비해 약 259시간 높고,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1,363시간)과 비교할 경우 아직 630시간 가량 더 근무하는 상황임.
 - 물론 지난 10년간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감소시켰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하나,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5-70] 2018년 국가별 총 근로시간 변화(2008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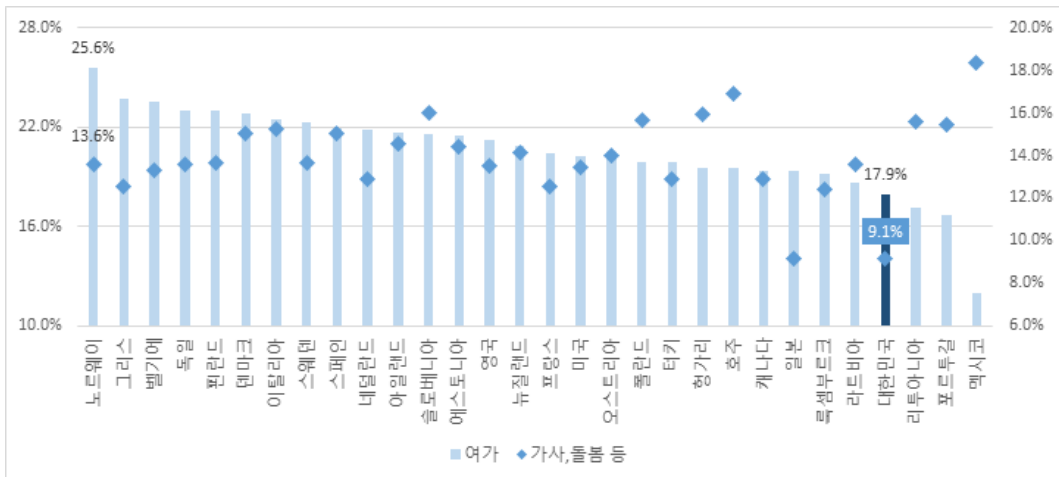
(단위: 시간/연)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그림 5-71] 국가별 여가시간(좌), 가사·돌봄시간(우) 비교(2014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OECD Time use survey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258분으로, 하루의 약 17.9%를 여가에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멕시코, 포르투갈, 리투아니아에 이어 OECD 30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치로 하루 중 368분(25.6%)을 여가에 사용하는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약 2시간 가량(7.7%p) 여가시간이 부족함.
- 또한 가사·돌봄시간은 일 평균 132분(9.1%)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여가 및 가사·돌봄 노동 시간이 적은 삶을 살고 있음.

마. 노후

- 최근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건강한 노인에 대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와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돌봄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과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지표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비교하여 정책성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그러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과 유사한 국제지표를 확인할 수 없어, 사회단체활동

참여 대신 활동적 노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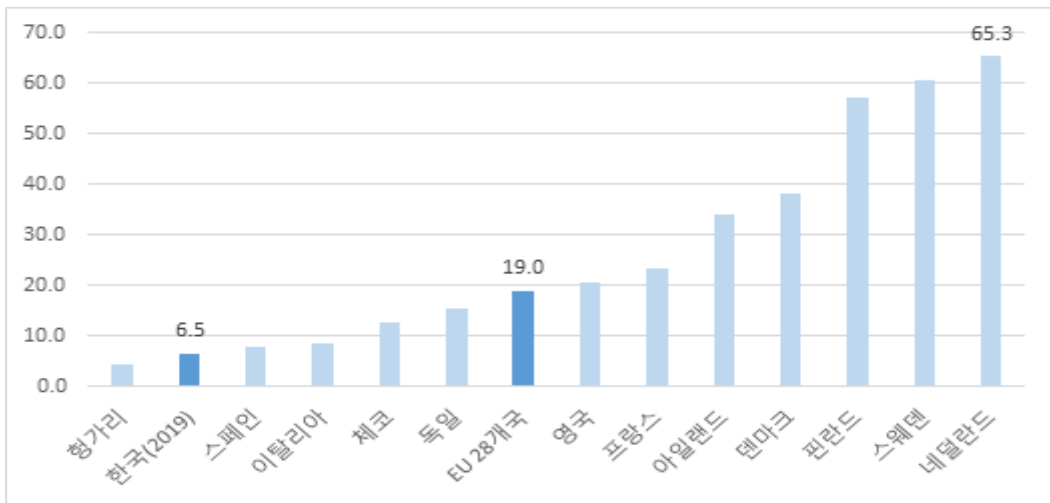
- 이에 EUROSTAT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표(Participation in formal or informal voluntary activities or active citizenship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와 OECD의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활동적 노화 수준과 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 정도를 비교하였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중은 2019년 6.5%로(통계청 사회조사),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EU 28개국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평균인 19.0%에 비해 12.5%p 낮으며, 65.3%의 노인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약 50%p 낮은 수치임.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이 된 이 시점에 노인들에 대한 활동적 노화 촉진 정책을 설계하여,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5-72] 국가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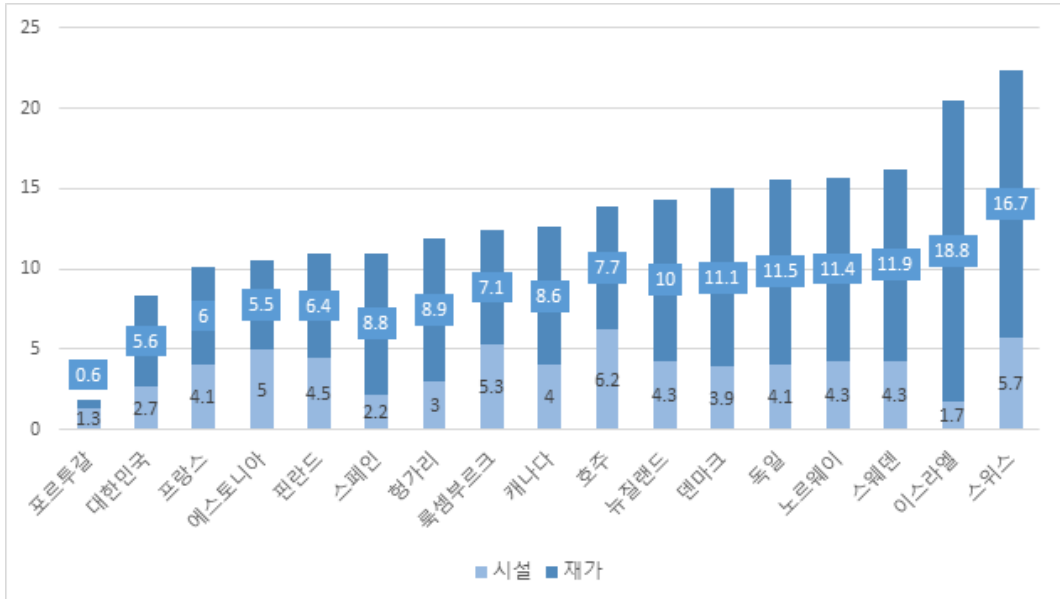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그림 5-7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2018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활동적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보호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역시 전체 8.3%(시설 2.7%, 재가 5.6%)로 시설과 재가급여 데이터 전체가 확보 가능한 국가 중 포르투갈(전체 1.9%)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스위스와 비교할 경우 시설급여 수급률은 3.0%p, 재가급여 수급률은 11.1%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물론 아직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7년 기준 13.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은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수급률을 비교할 때 감안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의 향후 추이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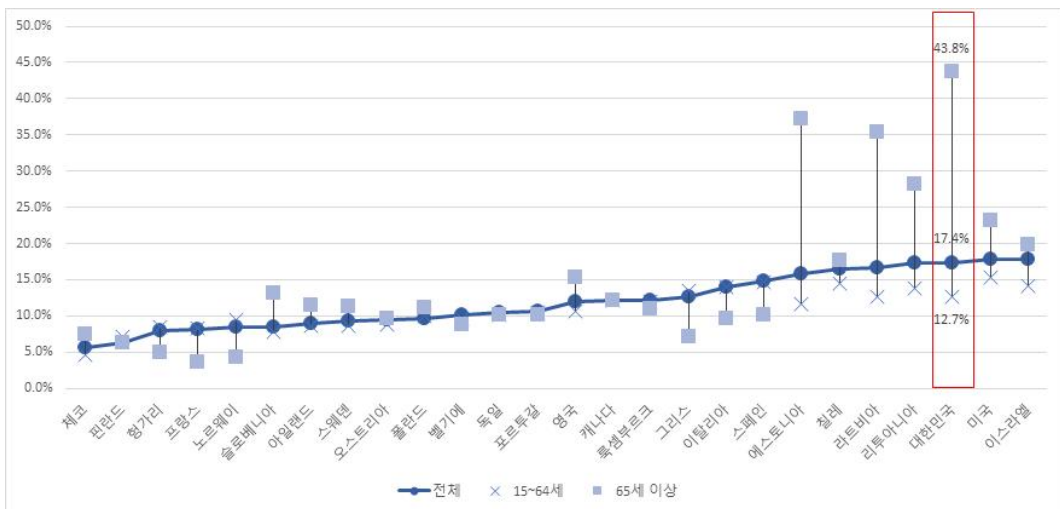
2. 생활기반

가. 소득

- 본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지, 재분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충분히 완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임.
- 이를 위해 OECD의 상대빈곤율 지표와 지니계수를 살펴볼 예정임.
-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감안하여 노인 연령대를 따로 추출하여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를 국제비교하고자 함.

[그림 5-74] 국가별 연령대별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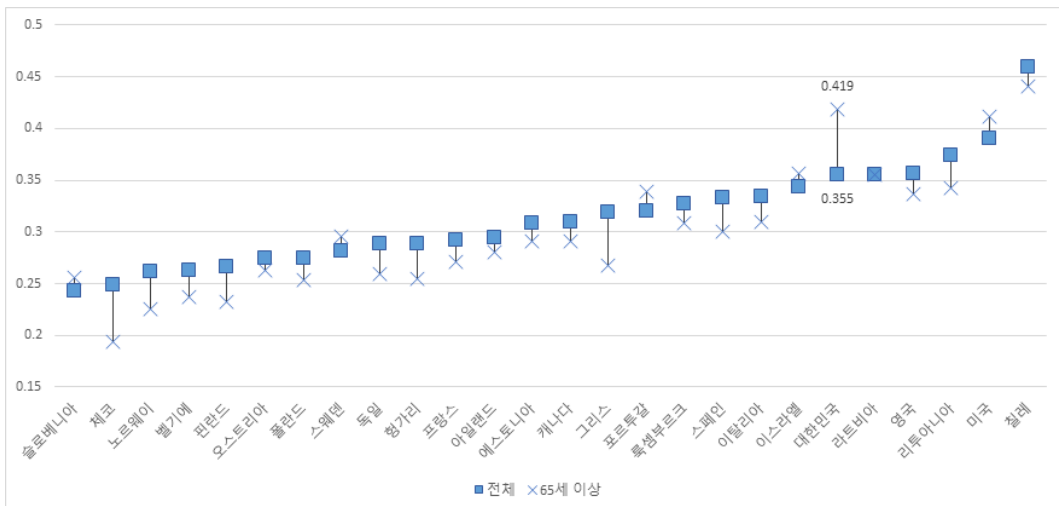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위 그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은 17.4%로, 이는 OECD 26개국 중 이스라엘(17.9%)과 미국(17.8%)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8%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프랑스(3.6%)와는 40.2%p나 차이남.

-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격차 역시 31.1%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말해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인 공적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는 매우 불평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2017년 기준 0.355로, 칠레(0.460), 미국(0.390), 영국(0.367) 등에 이어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불평등한 나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경우 지니계수가 0.419로 나타나, 칠레(0.441) 다음으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 노인 빈곤 문제와 더불어 노인 세대의 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75] 국가별 연령대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2017년)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나. 환경 ·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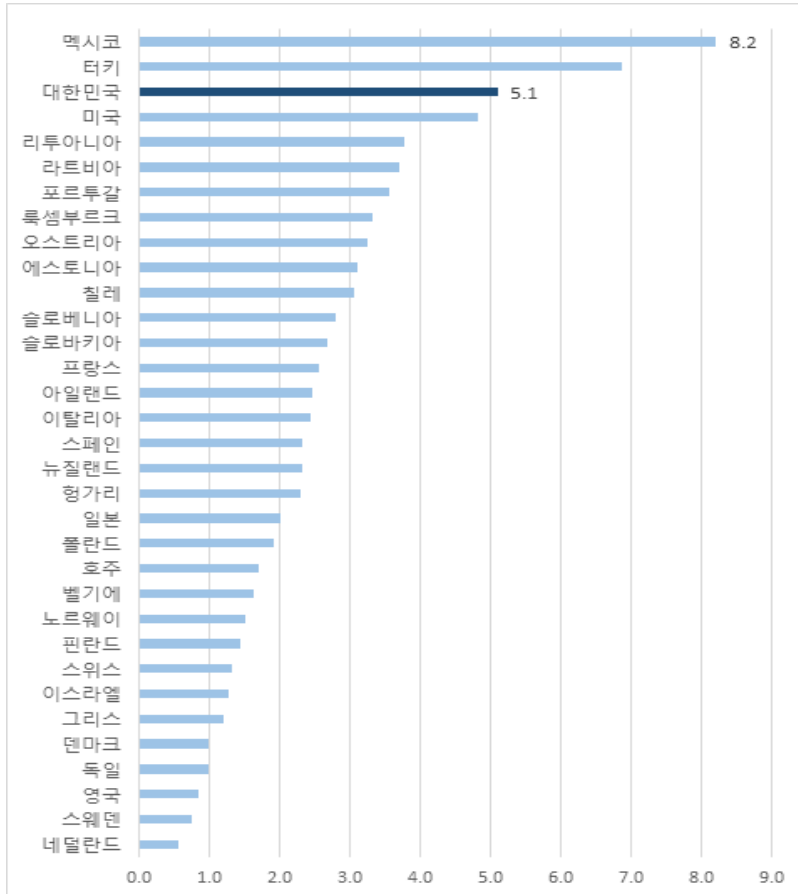
- 환경과 안전 분야는 사회정책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음.
 - 기존에 정부가 개입하던 영역을 환경이나 안전분야에서 보다 확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정책으로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본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과거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위험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위험 중 대표적인 것들을 비교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위험으로는 산업재해사망률을,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으로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자 함.
 - 산업재해 사망률은 ILO의 근로자 10만명 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³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미세먼지는 OECD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Exposure to PM 2.5 in countries and regions)를 통해 비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근로자 10만명 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은 2018년 기준 10만명 당 5.1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³⁵⁾.
 - 멕시코(8.2명, 2015년), 터키(6.9명, 2018년)에 이어 비교 가능한 OECD 33개 국가 중 3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내에서 산업재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음.

34) 치명적 산업재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업 사고의 결과로,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십만인율 등이 있음.(통계청 참조,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 최종접속일: 2020-03-02.

35) 해당 지표는 국가에 따라 총 근로자 수와 총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참조,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 최종 접속일: 2020-03-02.

[그림 5-76] 국가별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2018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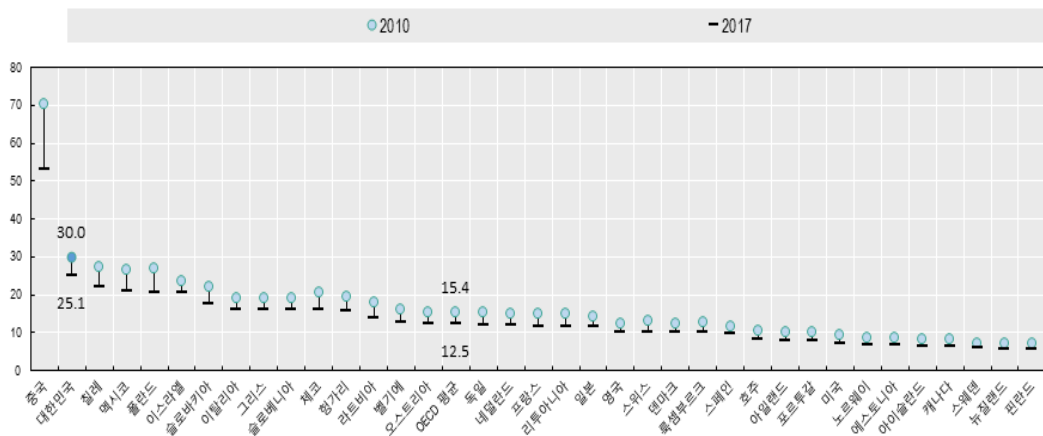


자료: ILOSTAT(2020년 3월 2일 자료 인출)

- 우리나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25.1\mu\text{g}/\text{m}^3$ 으로 OECD국가 중 대기의 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30.0\mu\text{g}/\text{m}^3$ 에서 7년 사이 $4.9\mu\text{g}/\text{m}^3$ 가 감소하였으나, 비교 가능한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물론 세계 전체 182개국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4위로 중위권 수준이나(OECD: Exposure to PM2.5 in countries and regions), $25.1\mu\text{g}/\text{m}^3$ 는 2017년 OECD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 $12.5\mu\text{g}/\text{m}^3$ 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3.5\mu\text{g}/\text{m}^3$ 에 달하는 주변국인 중국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절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림 5-77] 2017년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2010년 대비)

(단위: $\mu\text{g}/\text{m}^3$)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다.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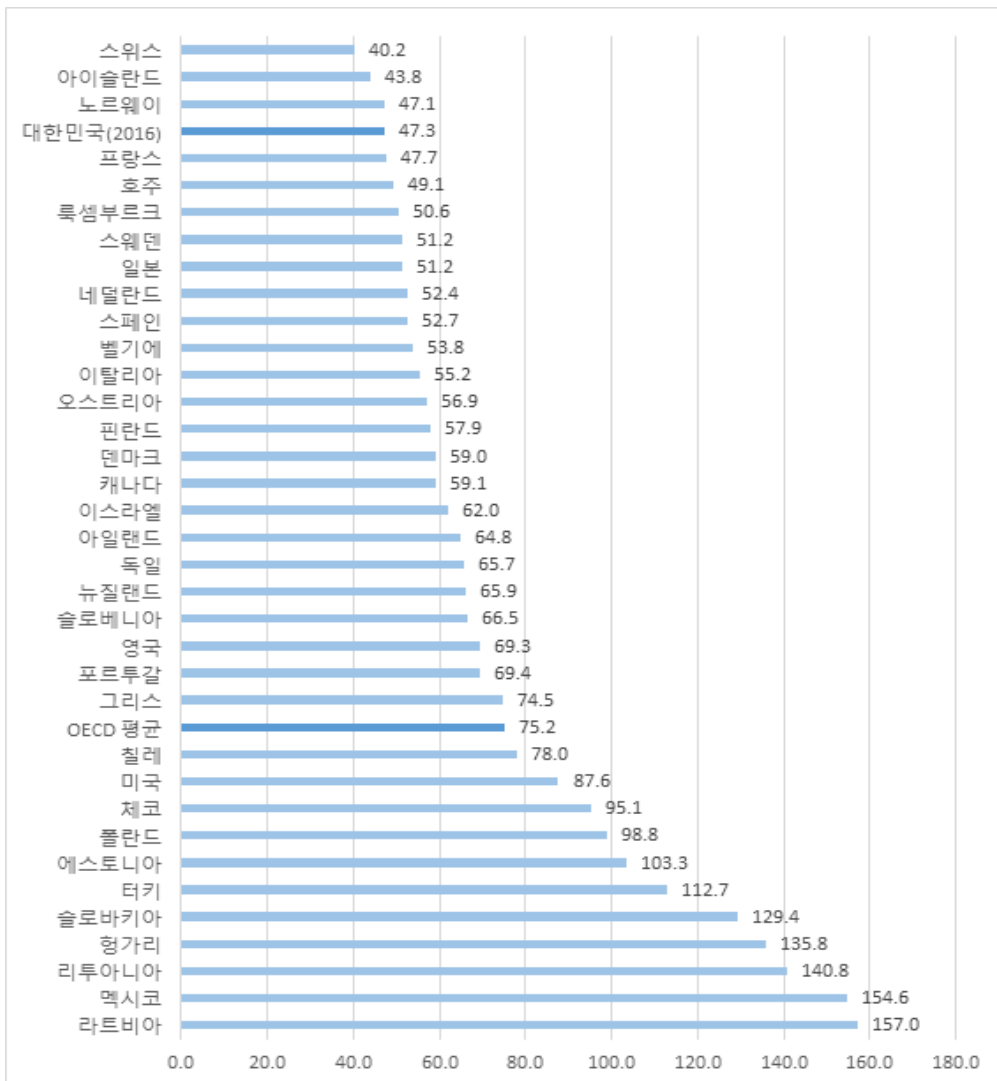
- 건강 영역은 국가가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함.
 - 우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비율인 OECD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Avoidable mortality 중 Treatable mortality) 지표를 통해 국가 내 의료자원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임.
 - 또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유병률(Overweight or obese population)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부담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할 것임.
- 우리나라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7.3명으로 스위스(40.2명), 아이

슬란드(43.8명), 노르웨이(47.1명) 다음으로 낮음.

- OECD 36개국 평균값이 인구 10만명당 75.2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78]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2017년 혹은 최근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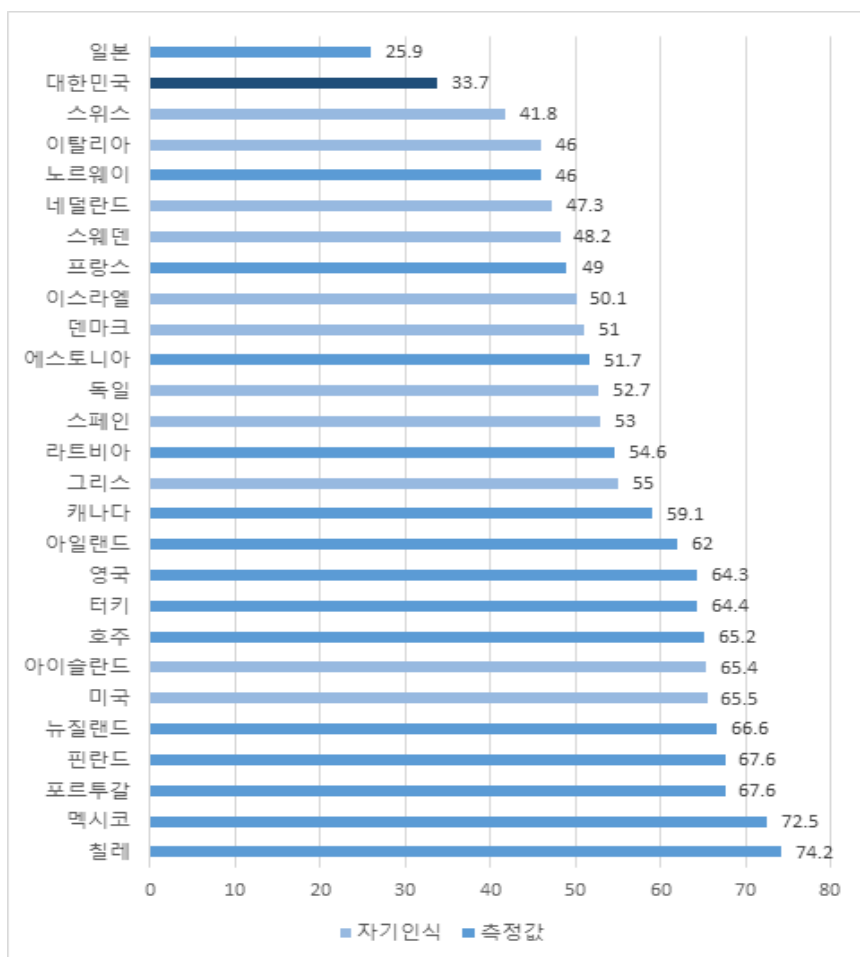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우리나라의 비만유병률(과체중 혹은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비만유병률은 2017년 기준 33.7%로 일본(25.9%) 다음으로 낮으며, 이는 비교가 가능한 OECD 27개국 중 2번째임.
- OECD 기준에서는 비만 수치가 낮은 편이나, 전 국민 중 1/3 이상이 비만이라는 의미를 감안하면 건강행태 개선을 촉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5-79] 국가별 비만유병률(BMI 25 이상)(2017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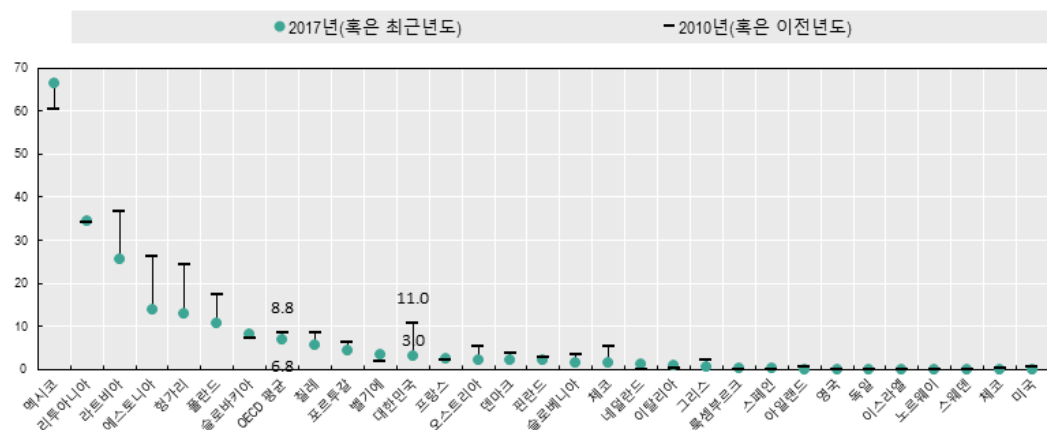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9. 주거 · 지역

- 본 영역에서는 주거생활에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주거정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 주거 생활에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주요 지표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과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을 들 수 있음.
- 해당 지표들은 주거생활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과 주거비용으로 인한 빈곤 위험 가구의 비중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임.
- 국제지표로는 OECD Better Life Index(OECD, 2020)의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와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를 통해 이 두 지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중을 확인하여,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는 가계소득 중 주거생활에 드는 비중을 나타냄.

[그림 5-80] 2017년 국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2010년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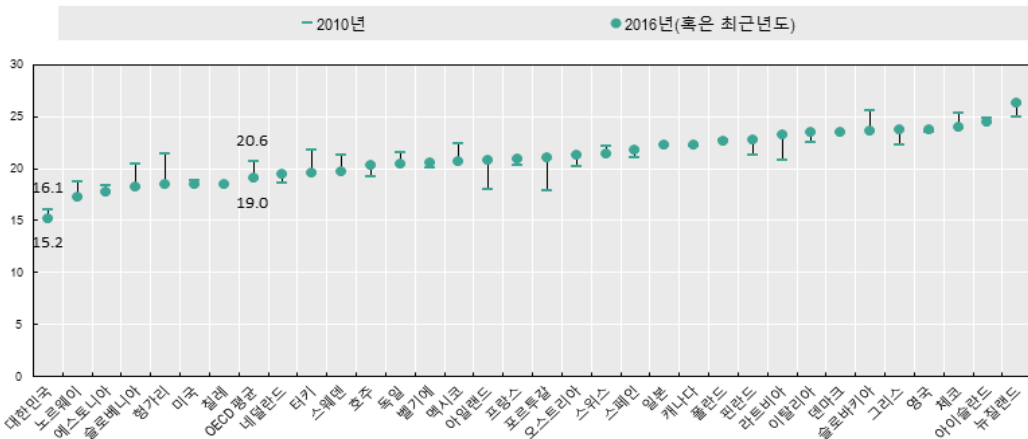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OECD 국가 중 중위권으로 확인되었음.
- 2010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구가 11.0%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으나, 2017년 3.0%로 중위권으로 진입함.
- OECD 평균이 6.8%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나, 멕시코, 리투아니아 등과 같은 이상치 값을 가진 국가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5-81] 2016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중(2010년 대비)

(단위: %)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상으로 우리나라³⁶⁾의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6.1%에서 2015년 15.2%로 0.9%p 하락하여, OECD 3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OECD 평균이 19.0%로 OECD 평균에 비해 3.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 시스템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6) 2015년 자료

제3절 소결

-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정리된 지표들의 시계열 검토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였음.
 - 점검한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돌봄 영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18년 86.6%) 및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18년 15.4%)은 모두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상향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지역별 편차가 커, 광역시도 단위로 최대-최소 격차가 3배가 넘음.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모두 상향하는 추세로 '18년 이용자는 78,202명, 이용률은 12.3%에 이르러 5년만에 85%의 증가율을 보임.
 -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율('18년 62.0%)은 상향하고 있지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수혜율('18년 27%.0), 장애아동수당 수혜율('18년 20.6%)은 5년 전에 비해 각각 2.8%p, 4.1%p 낮아졌음.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은 '18년 3.9%로 전년(3.6%)대비 소폭 상향했지만, 5년 전('13년)과는 유사한 수준임.
 - 종합적으로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배움 영역
 - 교육비 부담도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18년에는 64.4%의 가구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음. 소득수준별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응답자 비중이 낮은 월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기초학력 미달률은 '08년~'13년까지는 하향 추세였지만, '16년 이후 다시 상향하여 '19년에는 중3 수학 기준 11.8%, 고2 수학 기준 9.0%의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지난 5년간 2012년을 제외하면 5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수혜율은 51% 수준으로 나타남.
- PISA 학업성취도에서 한국은 모든 과목에서 국제비교 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18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 5수준 이상은 읽기 13.1%, 수학 21.3%, 과학 11.8%로 예년과 비슷한 반면, 2수준 미만은 읽기 15.1%, 수학 15.0%, 과학 14.2%로 세 영역 모두 '12년 대비 두 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음.
- 평생교육 참여율은 '18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평균 참여 시간은 '18년 9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집단별로는 고령,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18년 18.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4~15년을 예외로 하면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집단별 참여율은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저조함.
-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 비용 비중은 '18년 0.44%로 지난 3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08년 0.75%에서 10여년 간 하향하는 추세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향세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비중이 더 높음.
- 종합적으로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며,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편차가 크고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 영역

-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로('60.7%), 특히 여성고용률은 매년 상향하여 '18년 50.9%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남성(70.8%)과의 격차가 큼.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18년 57.9%)이 과거 대비 낮아져, 정책적 관심을 요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9년 기준 73,306명으로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는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의 영향으로 보임.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65%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용자는 46%로 사용률이 낮은 점을 볼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9년 105,1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같은 해 21.2%로 5년 전인 '14년의 4.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기업규모별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60%를 차지하는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음.
- 15~54세 기혼여성 경력단절률은 '15년 21.7%에서 '19년 19.2%로 소폭 하향하였음. 자녀 연령을 나누어 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지난 5년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임.
- 중위임금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8년 19.0%로 5년 전 대비 5.7%p 감소했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18년 남성 12.1%, 여성 30.0%)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시사함.
- '18년 임금격차는 정규직-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300인 미만 58, 비정규직-300인 이상 45, 비정규직-300인 미만 28로 과거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큼. 성별 임금격차도 '18년 63.3%(남성 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로 격차가 크지만, 5년 전('13년 60.5%) 보다는 감소하였음. 그러나 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 임금은 31.6%로 5년전(33.0%) 대비 오히려 격차가 커졌음. 다만 이는 월임금 기준 비교이므로 시간제 노동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 5분위 분배율은 '18년 4.67배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도 '18년 63.8%로 '10년(58.9%) 대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률은 '18년 34.5%로 5년전 대비 1.5%p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6%로 0.7%p 상향하여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8년 20.6%로 5년전 대비 3.5%p 상향하였음. 다만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17.3%)이 민간기업(21.5%)보다 오히려 낮음.
- 직무 스트레스는 '18년 기준 71.8%의 국민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 과거 대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임. 직무 스트레스는 30~40대, 고학력, 중상위 소득 계층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19년 14.5%로 20년 전인 '00년의 42.5% 대비 크게 감소했음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도 1.9%p 감소했음.
- 일 영역을 종합하면,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크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영역

- 총 근로시간은 '18년 월 156.4시간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근로시간 감소는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임금 영역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연간 일평균 여가시간은 '18년 3.93시간으로 '16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14년에 비해서는 더 낮음. 집단별로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여가시간과 달리 여가시간 충분도는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18년 평일 46.3%, 휴일 58.5%)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짐작할 수 있음. 집단별로는 실제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김.
- 휴가 경험률은 '18년 68.1%로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1인당 연간휴가사용일수는 5.4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음. 휴가일수와 휴가경험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음.
- 인구 10만명당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18년 문화시설 5.45개, 공공체육시설은 '17년 54개로 이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음.
- 쉼 영역을 종합하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도 증가 추세임. 다만 집단별로 볼 때 근로시간 감소와 여가시간 증가 폭이 더 큰 집단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소득 측면의 주의가 필요하며, 휴가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노후 영역

-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하향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는 소폭 증가하여 '19년 기준 39.8%로 나타났음. 사회적 고립도는 여성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의 고립도에는 후기노인 비중이 높은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최근 들어 상당부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지표로, '19년 58.7%를 나타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64.1%, 여성 54.7%로 10%p 가까운 차이가 있음.
-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1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8년에는 8.2% 수준을 나타냄.
- 노인의 치매 등록률은 '17년 52.1%로 2년 전에 비해 5.4%p 높아졌는데, 지역별로는 전북, 경북, 경남, 서울 순을 보이며, 특히 최근 서울의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음.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유형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국공립 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지방단체' 비중은 '18년 1.2%로 매우 낮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노인 영역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향후 고령화에 따라 후기노인층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지표들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소득 영역

- 실업률은 지난 20년 간 3~4%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19년 3.8%),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14년 이후 높아져 '19년에는 전체의 13.3%를 나타내고 있음.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 실업률 상승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연령집단별(아동, 근로연령대, 노인) 빈곤율은 모든 집단에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노인의 하향세가 뚜렷하지만, 노인빈곤율은 '18년에도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수급률은 모두 '16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9년에도 전년도보다 상승해 44%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18년 기준 0.345를 기록했으며,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감소율도 '18년 14.2%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음. 집단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불평등도가 0.403으로 근로연령대 인구(0.325)보다 높음.
-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과거보다 하향하여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는데, '18년 6.54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7.9배, 근로연령대 인구는 5.7배로 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상향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18년 46.1%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절반 이상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8년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전('13년 2.6%)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3% 내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빈곤율은 '16년 기준으로 노인가구 64.9%, 조손가구 65.5%, 1인가구 50.5%, 한부모가구 41.9%, 장애인 가구 31.5%, 다문화 가구가 15.8%로 나타나 다문화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 가구 대비 높은 빈곤율을 나타냄. 특히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경우 2012~2016년 사이 빈곤율이 상향하였음.
- 소득 영역 지표 현황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영역

- 환경만족도는 30~3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18년에는 33.5%를 기록하였음.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강원(54.1%)과 가장 낮은 대구(23.5%) 사이의 격차가 두 배가 넘음. 환경만족도 세부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녹지환경(50.2%)을 제외하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30% 미만에

머물러 있음.

- 미세먼지 오염도는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18년 PM10 기준 $41.5\mu\text{g}/\text{m}^3$, PM2.5 기준 $23.3\mu\text{g}/\text{m}^3$ 을 기록하고 있음.
-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8년에는 소폭 반등하여 산재율 0.54%, 사망만인율 1.12‰를 기록, '14~'17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0년 21.8명에서, '18년 7.3명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지역별로는 거의 6배(서울 3.1명, 전남 18.4명)의 차이를 보여 지역 격차 축소 필요함.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역시 '00년 14.2명에서 '18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범죄피해율은 '12년 4.6%에서 '16년 3.56%로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재산범죄피해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부부폭력 발생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16년 41.5%를 기록했으며, 신고율은 2.8%를 기록함. 성폭력 발생률도 감소하는 추세로 '16년 1.5%를 기록했으며, 신고율은 2.2%로 '13년의 1.2% 대비 높아졌음.
- 환경·안전 영역을 종합하면, 환경 측면에서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왔지만, 최근('18년)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나 아동 안전사고, 범죄피해율,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아진 것을 단순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건강 영역

- 지난 20년간 경상의료비 총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공적영역(정부 및 의무가입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9%에서 '18년 59.8%로 오히려 개선되었음.
-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은 '18년과 '19년의 자료를 비교했는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이 증가하였음.
-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

대로 본인부담은 하향함. 그러나 비급여 본인부담이 전체 본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음.

- 치료가능한 사망률의 시도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14~15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음. '15년 기준으로 서울, 대전, 경기의 사망률이 낮고, 충북, 경북, 강원 이 높음.
- BMI 25 기준 비만유병률은 '18년 34.6%로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더 높은 비만유병률을 보임.
-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18년 42%로 나타났는데, 장기상승하고 있지만 '17~18년 사이에는 하락하였음. 집단별로는 여성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높음.
- 건강영역에서는 의료비 총액의 증가 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료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영역

- 최저주거 미달가구 비율은 '18년 5.9%로 '1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은 2.8%로 '15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최저주거 미달가구는 수도권의 비중이,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는 도지역의 비중이 높음.
-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최근 4년간 하락세로 '18년 15.5%를 기록하고 있음. RIR은 수도권이 높으며, 저소득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18년 6.8%), 전체 임대주택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주택 건설에 비해 증가율이 적어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6년 10.6%로 전년대비 감소했음.
- 미충족 의료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18년 9.1%(조율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가 가장 낮고(5.8%), 충남이 가장 높음(12.4%).
- 전국적으로 보아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소폭,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함.

- 주거·지역 측면을 종합하면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주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다음으로 일부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영역별 사회정책 현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요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

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예컨대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이나 소득불평등, 산재사망률, 여가시간 등의 지표는 시계열 분석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파악됨.
 - 반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과 같이 시계열적 개선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는 우수한 상황의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지표(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들은 모두 『추진계획』에 제시된 부처별 성과목표(81개)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표들인 바, 향후 해당 부처에서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산출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향후 부처의 지표 산출 계획이 없다면,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지표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지표로 대체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대체 가능한 지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향후과제

제6장 ■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연구요약

- 본 연구는 2019년 2월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의 관리를 위한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로드맵 성격으로, 9개 부문, 22개 정책목표, 71개 정책과제, 8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 중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가 적어 성과지표의 달성이 실제 국민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지 측정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회정책 관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과 수준의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공공선택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388-289 재인용).
-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중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영역별 지표 중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구성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정책지표를 통해 정책문제 정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과정 모니터링, 정책결과 평가의 단계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정책주기의 어디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이 궁극적 목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중심의 정책관리가 필요
 - 물론 정책의 단계나 정책지표 활용 목적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표의 활용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수행자의 유인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에서 정책이 관리될 필요
 -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결과 수준 정책지표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가 중요
- 『추진계획』은 정책영역-정책목표-정책과제-성과지표에 이르는 정책관리 체계를 제시했지만, 81개 성과지표 중 16개 지표만이 결과 수준이며, 9개 영역 중 4개 영역에는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함.
 - 정책의 결과 수준에서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
 - 이 때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의 잠정적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였음.
 - 『추진계획』상의 9개 정책영역 및 22개 정책목표를 지표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 사회보장통계등 국내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OECD의 BLI와 EU의 QoL과 같은 해외의 사회지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영역별 중요 지표 『추진계획』에 제시되었던 기존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183개 후보지표 선정
 - 20명의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3차 델파이 조사 진행(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48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31개로 후보지표 확대)

-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64개 지표 선정
- 선정된 64개 지표 중 투입 지표는 1개, 산출 지표는 23개, 결과 지표는 40개로 결과 중심 사회정책지표 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였음. 선정 지표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씬(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의 과제를 남김.
 - 영역별 지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향후 결과 수준 지표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의 보완적 활용을 위해 투입-산출-성과를 결합하는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 측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주관적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장에서는 64개 지표의 시계열을 검토하고, 일부 지표를 국제비교하였음.

○ 시계열 검토

- [돌봄]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움]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크고,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일]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도 증가함. 다만 휴가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고,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노후]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어 있음.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하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 아동 안전사고, 범죄피해율,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큼.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다고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 [건강] 의료비 총액의 증가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료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주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요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 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제2절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결과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된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사회정책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64개 지표를 제시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우선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체계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작성된 지표체계는 지표 선정 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지표들만을 포함한 결과 일부 영역의 경우 선정된 지표수가 너무 적거나, 돌봄 영역의 경우처럼 결과차원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이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정책 성과평가에 용이한 결과 수준의 지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지는바, 영역별 성과에 재한 이론적·실제적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의 81개 지표를 결합하여 123개 지표체계로 성과지표체계 형태의 운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음. 기존 지표체계가 투입·산출지표 중심이고, 본 연구의 지표체계가 산출·결과 중심임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지표체계가 상호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보완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체계를 통합한 체계의 지표들의 투입 → 산출 → 성과지표 간에 가설적 수준에서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투입이나 산출 지표를 조정하거나 추가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과제와 연결시켜야 할 것임.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보완을 위해 추가적 조사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결과 수준 지표체계 작성 시 후보지표에 포함되었던 주관적 만족도·체감도 지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음. 이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관적 지표의 정책관련성 및 반응성(responsiveness)을 고려할 때 정책 성과지표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 때문임. 향후 이를 보완하고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반응성과 국민 삶의 질 측정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수혜자의 주관적 만족도·체감도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기존에 통계청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사를 중심으로 지표를 검토했는데, 이는 지표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했기 때문임. 향후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조사주기가 길어 활용이 어렵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 과정에서 연구진 및 자문 참여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된 지표들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있음.
 -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지표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지표 생산주기가 길어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 PIAAC의 성인역량,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여가시간 및 돌봄시간 등³⁷⁾
 - 기존 국내 사회 관련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는 지표: (예) 세대 간 사회이동성 관련 지표, 교육-노동시장 이행 관련 지표(NEET 통계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 측 지표(학습수요, 참여자 만족도 등), 건강불평등 관련 지표 등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사회정책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표체계 작성에서 끝나는

37) 선정된 64개 지표 가운데서도 PISA 점수,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및 신고율의 경우 3년 주기의 데이터 역시 평가의 신속성을 감안하면 활용도에 제약이 있음.

것이 아니라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추진계획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관리 거버넌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책지표는 정책의 문제설정, 대안선택, 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그리고 문제의 재설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지표체계에 포함된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로 기존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이 지표들로 나타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중 기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책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 환류(feedback)체계를 사회정책의 추진 거버넌스 자체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영국 PSA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관리체계는 정부 부처 간 정책과제 수행의 거버넌스 체계와 결합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사회정책의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바, 사회정책지표체계를 통해 증거 기반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참고문헌

- 감사원(2018).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강영철·이종환(2010).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고경환·장영식·강지원·김태운·고혜연·진재현·신선미(2012).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 수립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영선·윤희숙·이주호(2004).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보험통계』.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각 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노동부(각 연도). 『산업재해현황』.
- 관계부처 합동(20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교육부(각 연도). 『교육기본통계』.
- 교육부(각 연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 김미곤·여유진·정해식·박이택·김성아(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정해식·변재관·김성아·조한나(2017).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호(2019). 「사회지표를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와 한계」. 2019년 제 2차 사회정책포럼 발표자료.
- 김재훈 편(2014).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 남궁근(2001). 「정책지표개발의 이론과 방법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남재욱(2018).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한국사회정책』 25(4), 3-38.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화준(2003).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대한민국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도로교통공단(각 연도). 『교통사고 통계분석』.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박경귀·이행숙·한하늘·지현(2004). 『통계청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경돈·이재원(2009). 「사회복지정책과 성과관리. 2009년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세미나.

박영실·김석호·김인겸(2017).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 『2017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VI권』. 통계개발원.

박주언·심수진·이희길(2012).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201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박중훈(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한준·김우현·장준희·강민채·김은숙·구윤모·이정은·엄동욱·이정인·한혜란·김진아(2018).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반가운·김봄이·김형만·남재욱·이수현·조영철·최영준·티모 플렉켄슈타인(2018), 『사회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김봄이·박동진(2017).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분석을 중심

- 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준석·심수진·황선재(2019). 『지표작성방법론』, 통계개발원.
- 보건복지부(각 연도).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각 연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 보건복지부(각 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 사회보장위원회(2017.).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 석현호·이재열·한준·홍종호·김석호·조영태·조병희·이운석·김경근·장지연·박정수·손경환·장수은·김종호·민수홍·서우석·박원호·유성렬·이희길·심수진·하헌주·조세희·김대훈·이상운·정규남·정동명·황해범·손선(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성태제·송재기·이상진·이성도(2006).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 심수진(2019). 「국민 삶의 질 지표 바로알기」. 『통계포커스』, 2019년 봄호.
- 양재진(2001).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5(1), 211-231.
- 양재진(2005).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 『행정학회보』 39(1), 1-18.
- 여성가족부(각 연도). 『성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각 연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오영민·함영진·김희성·박지민(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사회보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 오윤섭(2017). 「공공가치와 사회보장 성과관리 방향」.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
- 오윤섭(2018). 「사회서비스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018. 8,

52-66.

오운섭·임완섭·이규환(2017).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원종학·윤영진·이영범·이재원(2010). 『성과관리와 정부간 재정: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이민호·이광희·윤수재·류현숙·윤광석(2012).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은국·이영범·이창길(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

이재열·한준·최문희·신인철·이희길·심수진(2014).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통계개발원.

장영식·변용찬·이삼식·김태현·권태환·남상호·장지연·김창환·박재용·손경환·김영호·정경옥·홍동표·정영근·권선진·정갑영·조현성·한성덕·이홍탁·문유경(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유·강병구·강신욱·김연명·김영순·김혜원·신정완·양재진·윤윤규·이일영·정건화·조성재·조영철·정무권·채창균. (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정무권(2007).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14(1), 256-307.

정영철·이기호·고금지(2018).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이기호·진재현·이태진·정해식(2014). 『사회보장통계 데이터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정영철·이기호·진재현·이태진·정해식(2014). 『사회보장통계 데이터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강신욱·김동진·김성아(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김성아(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5(9). pp.75-88

- 중앙치매센터(각 연도). 『대한민국 치매현황』.
- 진남·한승희(2014).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정책집행 성공사례 연구: 집행과학의 관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
- 최봉호(2013). 「보건복지통계의 동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9).
- 최영준·김보영·박치성·이주하·정재철·최종호(2012).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 최영준·김태일·김진욱·김보영·최혜진·최정은(2017).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 통계개발원(2019). 『지표 작성 방법론: 정책지표 설계와 활용』.
-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 통계청(2017).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조사』.
-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 통계청(각 연도). 『주택총조사』.
-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각년도
-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연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한국장학재단(각 연도) 내부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각 연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한준·박정수·김종호·김대훈·김월화·김영진·민규혁·이기로·정지모·곽맑음·하헌주(2018).

- 『국가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 방안연구』. 사단법인한국삶의질학회
- 한준·박정수·김종호·김대훈·김월화·김영진·민규혁·이기로·정지모·곽박음·하헌주(2018). 『국가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 방안연구』. 한국삶의 질 학회.
-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 홍민기. (2017).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 『노동리뷰』, 11-15.
- 환경부(각 연도) 『대기오염도현황』.
- European Commission(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European Commission(2018a). 『European Pillars of Social Rights』.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2018b). 『Joint Employment Report 2018』. European Union.
- Eurostat(2014). Towards a harmonis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 Part 1. Indicator typologies and terminologies.
- Eurostat(2017).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quality of life indications
- Eurostat(2017).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quality of life indications.
- Hacker, B. (2019). 「A European Social Semester?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practice.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practice (June 12, 2019)」. ETUI Research Paper-Working Paper.
- HM Government(2007f). PSA Delivery Agreement 18: Promote better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London: HMSO.
- HM Government(2008b). PSA Delivery Agreement 13: Improve children and young people's safety. London: HMSO.
- HM Government(2008c). PSA Delivery Agreement 14: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the path to success. London: HMSO.
- HM Treasury(2001). Choosing the Right FABRIC - A Framework for Performance Information. London, HM Treasury.

- IMF(2017). Fostering inclusive growth.
- OECD(2014), Social Expenditure Update
- OECD(2014). All on board
- OECD(201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 OECD(2017). How's Life?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 OECD(각 연도). PISA Results.
- OECD-World Bank(2017).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 Schumann, A.(2016).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Methods, Desig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 Treasury, H. M. S.(2007a). PSA Delivery Agreement 9: Halve the number of children in poverty by 2010-11, on the way to eradicating child poverty by 2020. London: HMSO.
- Treasury, H. M. S.(2007b). PSA Delivery Agreement 10: Rais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 PSA Delivery Agreement 11: Narrow the gap in educational achievement between children from low income and disadvantaged backgrounds and their peers. London: HMSO.
- Treasury, H. M. S.(2007c). PSA Delivery Agreement 15: Address the disadvantage that individuals experience because of their gender, race, disability, age, sexual orientation, religion or belief. London: HMSO.
- Treasury, H. M. S.(2007d). PSA Delivery Agreement 16: Increase the proportion of socially excluded adults in settled accommodation and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London: HMSO.
- Treasury, H. M. S.(2007e). PSA Delivery Agreement 17: Tackle poverty and promote greater independence and wellbeing in later life. London: HMSO.
- Treasury, H. M. S.(2007g). PSA Delivery Agreement 19: Ensure better care for all. London: HMSO.

Treasury, H. M. S.(2008a). PSA Delivery Agreement 12: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HMSO.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의 사회보장기본법 참고. 최종접속일: 2020.02.03.

국가지표체계(국가발전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kor>)을 참조하였다. 최종접속일: 2020년 3월 22일.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최종접속일: 2020.03.2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최종접속일: 2020.03.25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정책위키 「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최종접속일: 2020.03.01.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clusivekorea.go.kr/index.jsp> 최종접속일: 2020.03.0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Social scoreboard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explorer>). 최종접속일: 2020.03.06.

EUROSTAT Quality of life.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qol/index_en.html 최종접속일: 2020.03.22.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home> 최종접속일: 2020.03.25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최종접속일: 2020.03.2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최종접속일: 2020.03.25

OECD, Labor Force Statics(<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부 록

1. 사회정책지표의 지표정의, 출처, 생산주기
2. 델파이 조사 질문지(1~3차)
3. 델파이 조사 결과(1~2차)

[부록 1] 사회정책지표의 지표정의, 출처, 생산주기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돌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수) / (전체 0~5세 아동수) *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연도)	1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수) / (전체 0~5세 아동수) *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연도)	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중증 장애인)*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현황	1년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장애아동수당 수혜율 = (장애아동수당 수혜자 수) /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 * 100 장애아 보육료 지원률 = (장애아 보육료 수혜자 수) / (0~12세 장애아동 수) * 100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 수)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원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각 연도);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각 연도);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	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율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 건수) / (한부모 가구 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1년
배움	교육비부담도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기초학력미달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 (기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국가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금액	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율 =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 / (대학 재학생 수) * 100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1인당 정부재원 장 학금 평균 지원액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각 연도) 교육부, 내부자료.	1년
	학업성취도(PISA) 수준	OECD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 결과 OECD 내 한국 국가순위: 한국의 PISA 학업성취도 국가순위 PISA 성취도 2수준 미만 및 5수준 이상 학생 비율: 1~6수준까지 있는 PISA 성 취도에서 2수준 미만이거나 5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율	OECD, PISA Result(각 연도)	3년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참여율: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참여시간: 평생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 시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각 연도)	1년
	직업관련 평생교육참여율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조사 대상 인구) 중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각 연도)	1년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 (기업의 노 동비용 총액) * 100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1년
일	고용률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 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 월
	경력단절 여성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 (15~54세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 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 사(각 연도)	1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OECD, Labor Force Statics(https://stats.oecd.org ,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1년
	임금격차(기업규모 별, 고용형태별, 성별)	정규직 300인 이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사업장규모-고용형태의 비율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성별-고용형태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임금 5분위배율	임금5분위 분배율 = (상위 20% 근로자 평균임금) /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연도)	1년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와 기업이 가져가는 영업잉여로 구분할 때 전체 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 $\text{피용자보수} / (\text{피용자보수} + \text{영업잉여}) \times 100$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연도)	1년
	장애인고용률/실업률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 15세 이상 인구)*100 장애인 실업률 = (장애인 실업자 수) / (장애인 경제활동인구)*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각 연도)	1년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대상 사업장에서 여성관리자의 비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사업장: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이상 200. 3. 1 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2008. 3. 1 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각 연도)	1년
	직무 스트레스	지난 2주동안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매우 느낌"과 "느끼는 편임"으로 답한 사람의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장시간 취업자 비율	장시간 취업자 비율 =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 / (전체 취업자)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쉽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 연도)	1년
	여가시간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 $\{(\text{평일 여가시간} \times 5\text{일}) + (\text{휴일 여가시간} \times 2\text{일})\} \div 7\text{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2년
	여가시간 충분도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1점)'~'매우 충분(7점)'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2년
	휴가활용	휴가활용은 '휴가경험률'과 '연간휴가사용일수'로 구성 ☞ 휴가경험률: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적인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연간휴가사용일수: 지난 1년간 휴가사용일수의 평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2년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문화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인프라 수	인구 십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공공 체육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연도)	
노후	사회적 고립도	65세 이상 노인 중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을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각각에 대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 평균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친목단체, 종교단체, 여가활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의 사회단체 활동 중 한 개 이상에 참여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인구)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연도)	1년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 등록률: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대비 60세 이상 치매상담센터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수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각 연도)	1년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제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지방단체', '법인', '개인', '기타'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연도)	1년
소득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연령대별 빈곤율	각 연령대별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가처분소득 기준) ☞ 아동: 0~17세, 근로연령대: 18~65세, 노인: 65세 이상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실업급여 수급률	실업급여 수급률 = (구직급여 수급자수) / (실업자수) * 100 ☞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월별 수급자 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월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감소율): 지니계수 감소율 = (시장소득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 / 시장소득지니계수 * 100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변화			
	소득5분위배율	소득5분위 분배율 = (상위 20% 평균 소득) / (하위 20% 평균 소득)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공적연금수급률	만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사학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인구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각 연도)	1년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이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 주기 및 행정자료 미파악 문제로 현재 시계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로 대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년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빈곤률: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가처분소득 기준) ☞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조손가구: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노인가구: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다문화가구: 귀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환경 안전	환경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다음 각 항목의 환경에 대해 좋다고 체감하는 인구 비율의 평균 ☞ 항목: ① 대기질, ② 수질(하천), ③ 토양환경, ④ 녹지환경, ⑤ 소음 ☞ 좋다고 체감: 5점 척도에서 '매우좋다' 혹은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1m³에 들어있는 직경 10μm 이하 or 2.510μm 이하 먼지 입자의 질량 ☞ 월별 산출값을 평균하여 연평균으로 환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각 연도)	1개 월
	산업재해율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재해근로자에는 사망자, 부상자, 업무상질병 요양자가 포함) ☞ (재해근로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산재사망률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 ☞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각 연도)	1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각 연도)	1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만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안전사고: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각 연도)	1년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가정폭력 발생률 =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 가구 / 조사 대상 가구 * 100 가정폭력 신고율 = 경찰에 신고한 건수 / 가정폭력 발생 건수 * 100 성폭력 발생율 = 지난 1년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성폭력 신고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혹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중 대상이 경찰인 경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각 연도)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각 연도)	3년
	범죄피해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추정 ☞ 지난 1년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의 응답비율로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를 추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각 연도)	2년
건강	의료비 지출 비중	경상의료비 중에서 공적지출, 민간보험, 가계직접부담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각 연도)	1년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의료비용의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의료 재화를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의료기관 방문, 치료, 검사, 의약품처방, 의약품 구매 포기 경험)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각 연도)	1년
	비급여 본인부담	연도별 의료비 본인부담 중에서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본인부담 각각의 비중 ☞ 법정본인부담 = (법정본인부담액) / (의료비총액) * 100 ☞ 비급여본인부담 = (비급여본인부담액) / (의료비총액) * 10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각 연도).	1년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전국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개인별 자격,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각 연도)	2년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각 연도).	1년

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시도격차: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최고시도)/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최저시도) - 1] * 100		
	비만유병률	비만유병률 = (만 19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kg/m ²) 25 이상인 응답자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 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연도)	1년
	건강식생활실천율	건강식생활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연도)	1년
주거 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총가구수) *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2년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수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각 연도)	1년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포함),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수) / (총가구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각 연도)	1년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 / (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각 연도)	1년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미충족 의료율: 거주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지역별 격차: 미충족 의료율 최고 시도와 최저 시도의 격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각 연도)	1년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인구 십만명당 의료인 수 및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지역별 격차 -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각 연도)	1년

[부록 2] 델파이 조사 질문지(1~3차)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1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게 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1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19년 12월 27일(금)

☐ 회신 또는 문의처

- ▶ 연구진: 남재욱, 반기운, 김봄이, 감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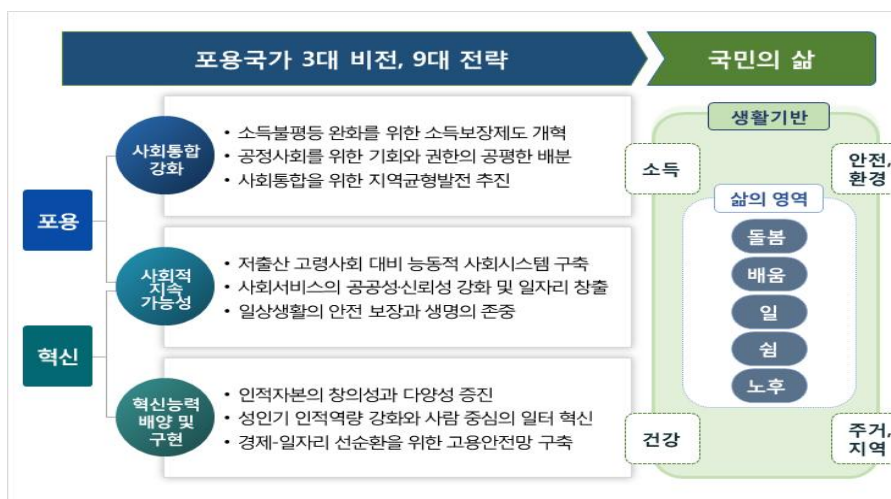
□ 포용국가 사회정책

-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 2)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상기 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 「돌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I. 「돌봄」에 대한 설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좌측에 제시된 돌봄 영역 정책목표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나홀로 아동수	①	②	③	④	⑤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보편적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 나홀로 아동 수	①	②	③	④	⑤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1-4. 유아교육 취원율	①	②	③	④	⑤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①	②	③	④	⑤
1-7.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1-8.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돌봄

아래 지표가 [장애인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1. 장애인의 (I)ADL제한율	①	②	③	④	⑤
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1-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가족 돌봄

아래 지표가 [다양한 가족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①	②	③	④	⑤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1-16. 다문화 이해교육 수혜자 수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돌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배움」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배움」에 대한 설명

- 우리나라는 사교육, 대학교 학비 등으로 인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수준
- 기존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지식, 창의성과 다양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 한계
- 일자리 수명 단축과 평균 수명 증대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요구되나, 학령기 이후 성인 역량은 급속하게 감소

☞ 배움 영역 정책목표

- ① (교육기회의 보편성)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② (교육성과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③ (성인기 역량개발)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기회의 보편성

아래 지표가 [교육기회의 보편성]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2-1. 교육비 부담도	①	②	③	④	⑤
2-2. 기초학력 미달률	①	②	③	④	⑤
2-3. 장애인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①	②	③	④	⑤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①	②	③	④	⑤
2-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역량지수	①	②	③	④	⑤
2-9. 학교폭력 피해율	①	②	③	④	⑤

교육성과 제고

아래 지표가 [교육효과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2-10. 학교교육 효과	①	②	③	④	⑤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①	②	③	④	⑤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4.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①	②	③	④	⑤
2-15.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①	②	③	④	⑤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①	②	③	④	⑤

성인기 역량개발

아래 지표가 [성인기 역량개발]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2-17. 고등교육 이수율	①	②	③	④	⑤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①	②	③	④	⑤
2-20.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①	②	③	④	⑤
2-22. 성인 문해율	①	②	③	④	⑤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①	②	③	④	⑤
2-25.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배움]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 「일」에 대한 설명

-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비정규직),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격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
- 일터 내 성차별, 위계적 조직문화와 낮은 수준의 업무재량이 생산성 저하와 직무불만족으로 이어지는 문제
- 보건·복지·소방·경찰 등 민생 서비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 역시 낮은 수준

☞ 일 영역 정책목표

- ① (일가정 양립)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 ② (불평등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③ (차별 없는 일터)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④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⑤ (노동 약자 대표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노동 약자의 권한 부여
- ⑥ (노동시장 약자 지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보장

일가정양립지원

아래 지표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 여성 고용률	①	②	③	④	⑤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①	②	③	④	⑤

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3-5. 성별임금격차	①	②	③	④	⑤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①	②	③	④	⑤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3-9.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①	②	③	④	⑤
3-10.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①	②	③	④	⑤

불평등 완화

아래 지표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⑤
3-12. 임금격차(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①	②	③	④	⑤
3-13. 임금 5분위 배율	①	②	③	④	⑤
3-14.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①	②	③	④	⑤
3-15. 노동소득 분배율	①	②	③	④	⑤
3-16. 사회보험 가입률	①	②	③	④	⑤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⑤

차별없는 일터

아래 지표가 [차별없는 일터]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①	②	③	④	⑤
3-19.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①	②	③	④	⑤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①	②	③	④	⑤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①	②	③	④	⑤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①	②	③	④	⑤
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①	②	③	④	⑤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의 질 개선

아래 지표가 [일자리의 질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25. 일자리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26. 직무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3-27. 평균근속년수	①	②	③	④	⑤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①	②	③	④	⑤
3-29.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①	②	③	④	⑤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 형태별)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쉽」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쉽」에 대한 설명

- 위라벨,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여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 세대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문화·예술·체육·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
- 그러나, 과도한 노동시간과 문화비 부담은 개인의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체육·여가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쉽 영역 정책목표

- ① (노동시간/여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② (여가문화환경 조성)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여가

아래 지표가 [노동시간/여가]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4-1. 총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4-2.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4-3. 여가시간 충분도	①	②	③	④	⑤
4-4. 여가시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5. 휴가활용	①	②	③	④	⑤
4-6. 1인당 여행일수	①	②	③	④	⑤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①	②	③	④	⑤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①	②	③	④	⑤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여가/ 문화환경 조성

아래 지표가 [여가/ 문화환경 조성]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4-10. 생활체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①	②	③	④	⑤
4-12.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①	②	③	④	⑤
4-13.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4-14. 문화여가 지출률	①	②	③	④	⑤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①	②	③	④	⑤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①	②	③	④	⑤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쉽]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노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노후」에 대한 설명

- 부모세대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 건강 등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
- 생애전환기 단계에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노후 영역 정책목표

- ① (활동적 노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② (노인 돌봄 지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활동적 노화

아래 지표가 [활동적 노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5-2.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①	②	③	④	⑤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①	②	③	④	⑤
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①	②	③	④	⑤
5-5. 은퇴연령	①	②	③	④	⑤

노인 돌봄 지원

아래 지표가 [노인 돌봄 지원]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5-6. 사회적 고립도	①	②	③	④	⑤
5-7. 노인의 ADL 제한율	①	②	③	④	⑤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5-9. 치매환자 관리율	①	②	③	④	⑤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①	②	③	④	⑤
5-11.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5-12.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노인]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소득」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소득」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등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생활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 <p>☞ 소득 영역 정책목표</p> <p>① (고용안전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p> <p>② (보편적 소득보장)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p>
--

고용안전망

아래 지표가 [고용안전망]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6-1. 실업률	①	②	③	④	⑤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①	②	③	④	⑤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 부조)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①	②	③	④	⑤

보편적 소득보장

아래 지표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6-7. 아동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8. 노인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9. 소득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①	②	③	④	⑤
6-11. 소득5분위배율	①	②	③	④	⑤
6-12. 공적연금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①	②	③	④	⑤
6-15.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득]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7.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지속
-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며, 대형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

☞ 환경·안전 영역 정책목표

- ① (생활환경 개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② (안전사고 예방)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여성·아동 안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아래 지표가 [생활환경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7-1. 대기질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2. 수질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3. 토양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4. 녹지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5. 소음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6. 기후변화 불안도	①	②	③	④	⑤
7-7. 환경향상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7-8. 환경성 질환자 수	①	②	③	④	⑤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①	②	③	④	⑤
7-13.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 비율)	①	②	③	④	⑤

안전사고 예방

아래 지표가 [안전사고 예방]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	-----	-----	-----------

7-15. 산업재해율	①	②	③	④	⑤
7-16. 산재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9. 화재 사망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①	②	③	④	⑤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①	②	③	④	⑤
7-22. 자살 사망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3. 국민안전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여성/ 아동 안전

아래 지표가 [여성/ 아동 안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①	②	③	④	⑤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①	②	③	④	⑤
7-29. 범죄피해 두려움	①	②	③	④	⑤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①	②	③	④	⑤
7-31. 범죄피해율	①	②	③	④	⑤
7-32. 야간보행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34.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환경·안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건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8. 「건강」에 대한 설명

-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전문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심화

☞ **건강 영역 정책목표**

- ① (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② (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공적, 사적 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

의료비 부담 감소

아래 지표가 [의료비 부담 감소]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8-1. 건강수명(5년)	①	②	③	④	⑤
---------------	---	---	---	---	---

8-2. 기대수명	①	②	③	④	⑤
8-3. 주관적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8-4. 우울감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8-5. 스트레스 인지율	①	②	③	④	⑤
8-6. 영아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①	②	③	④	⑤
8-8. 건강보험 보장률	①	②	③	④	⑤
8-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포기 경험	①	②	③	④	⑤
8-10. 비급여 본인부담	①	②	③	④	⑤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8-12. 치료 가능한 사망률 사도 격차	①	②	③	④	⑤
8-13. 의료미충족률 (지역사회건강조사)	①	②	③	④	⑤

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아래 지표가 [의료체계 합리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8-14. 노인진료비	①	②	③	④	⑤
8-15. 신체활동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8-16. 흡연율	①	②	③	④	⑤
8-17. 월간 폭음률	①	②	③	④	⑤
8-18. 비만율	①	②	③	④	⑤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건강]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

-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인구 감소와 기초 인프라 부족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

☞ 주거·지역 영역 정책목표

- ①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 ② (지역 인프라 개선)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 교육 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아래 지표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1인당 주거면적	①	②	③	④	⑤
9-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9-8.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프라 개선

아래 지표가 [지역 인프라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9-10. 주거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9-11. 통근시간(5년)	①	②	③	④	⑤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①	②	③	④	⑤
9-13.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①	②	③	④	⑤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거·지역]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게 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2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19년 1월 29일(수)

☐ 회신 또는 문의처

▶ 연구진: 남재욱, 반기운, 김봄이, 김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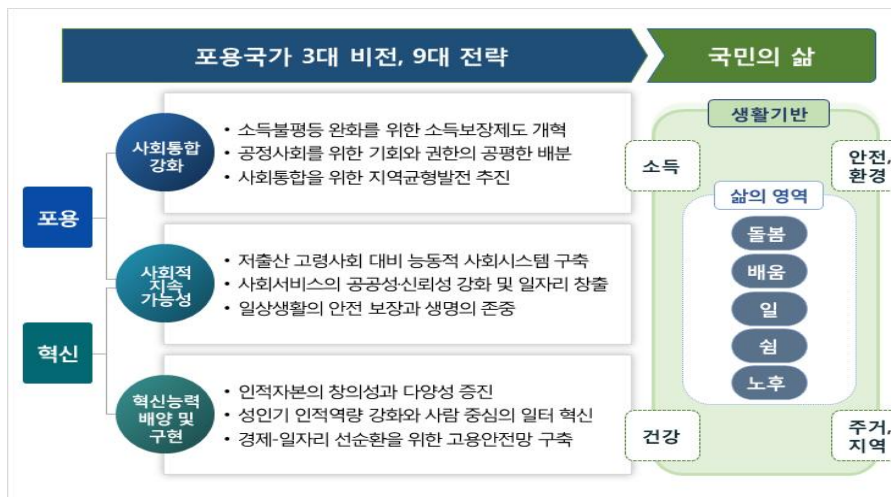
□ 포용국가 사회정책

-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 2)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상기 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 「돌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I. 「돌봄」에 대한 설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마흔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보편적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 나홀로 아동 수	3.79	4	3		()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차 조사의 유아교육 취원율과 통합)	3.95	3	2		()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11	1	1		()
1-4. 유아교육 취원율	3.25	12	8		(—)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20	14	9		()
1-6.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3.32	11	7		()
1-7.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3.53	9	5		()
1-8.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 「노후」 영역으로 이동	3.37	10	6		(—)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3.11	15	10		()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8	6	4		()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추가.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

장애인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1. 장애인의 (I)ADL제한율	3.56	8	3		()

1-12.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67	7	2		()
1-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4.06	2	1		()
추가.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추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

다양한 가족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3.78	5	1		()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22	13	2		()
추가.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
추가.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자 수					()
추가.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

「배움」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배움」에 대한 설명

- 우리나라는 사교육, 대학교 학비 등으로 인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수준
- 기존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지식, 창의성과 다양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 한계
- 일자리 수명 단축과 평균 수명 증대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요구되나, 학령기 이후 성인 역량은 급속하게 감소

☞ 배움 영역 정책목표

- ① (교육기회의 보편성)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② (교육성과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③ (성인기 역량개발)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기회의 보편성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업)	
2-1. 교육비 부담도	4.05	1	1		()
2-2. 기초학력 미달률	3.95	4	3		()
2-3. 장애인 교육수준	3.79	7	4		()
2-4. 학교생활 만족도	3.47	17	5		()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42	18	6		()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05	1	1		()
2-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21	21	7		()
2-8. 학생역량지수	3.11	22	8		()
2-9. 학교폭력 피해율	2.84	26	9		()

교육성과 제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업)	
2-10. 학교교육 효과	3.63	11	3		()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3.32	20	4		()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3.89	5	1		()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79	7	2		()
2-14.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3.00	24	6		()
2-15.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 재	3.11	22	5		()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3.00	24	6		()
추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

성인기 역량개발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업)

2-17. 고등교육 이수율	3.63	11	5		()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3.89	5	2		()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1	1		()
2-20.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3.61	14	7		()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58	16	9		()
2-22. 성인 문해율	3.60	15	8		()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79	7	3		()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39	19	10		()
2-25.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3.68	10	4		()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3.63	11	5		()
추가. 기업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
추가. 성인 독서량					()

■ 배움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 「일」에 대한 설명

-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비정규직),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격차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
- 일터 내 성차별, 위계적 조직문화와 낮은 수준의 업무재량이 생산성 저하와 직무불만족으로 이어지는 문제
- 보건·복지·소방·경찰 등 민생 서비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 역시 낮은 수준

☐ 일 영역 정책목표

- ① (일가정 양립) 일과 육이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 ② (불평등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③ (차별 없는 일터)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④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⑤ (일자리의 질 개선) 기존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지원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1. 여성 고용률	4.00	10	6		()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1	5	2		()
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05	9	5		()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10	6		()
3-5. 성별임금격차 ⇒ 3-12. 임금격차로 통합	4.11	7	4		()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4.37	4	1		()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47	24	10		()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74	17	9		()
3-9.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 율	4.21	5	2		()
3-10.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3.79	16	8		()
추가. 여성육아휴직자 휴직일수 대비 남성육아 휴직자 휴직일수					()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4.45	1	1	5	()
3-12. 임금격차(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45	1	1	5	()
3-13. 임금 5분위 배율	4.40	3	3	5	()
3-14. 소득만족도 (근로연령대 인구)	3.05	29	7	2	()
3-15. 노동소득 분배율	4.10	8	4	5	()
3-16. 사회보험 가입률	3.60	20	6	5	()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5	13	5	4	()

차별없는 일터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업)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3.39	26	6		()
3-19.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3.37	27	7		()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21	3		()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53	21	3		()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95	12	1		()
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4	17	2		()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 금	3.47	24	5		()
추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
추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
추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수					()
추가. 장애인 장기(3년 이상) 고용률					()
추가. 여성 경력단절 기간					()

일자리의 질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업)	
3-25. 일자리 만족도	3.80	15	2	4	()
3-26. 직무 스트레스	3.85	13	1	4	()
3-27. 평균근속년수	3.25	28	5	4	()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70	30	6	3	()
3-29.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3.74	17	3		()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 형태별)	3.50	23	4	5	()
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

■ 일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

「쉽」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쉽」에 대한 설명

- 위라벨,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여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 세대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문화·예술·체육·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
- 그러나, 과도한 노동시간과 문화비 부담은 개인의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체육·여가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쉽 영역 정책목표

- ① (노동시간/여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② (여가문화환경 조성)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여가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쉽]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4-1. 총 근로시간	4.45	1	1	5	()
4-2. 여가시간	4.40	2	2	5	()
4-3. 여가시간 충분도	3.75	4	4	4	()
4-4. 여가시간 만족도	3.65	7	5	4	()
4-5. 휴가활용 (휴가경험률, 연간 휴가 사용일수)	3.85	3	3	3	()
4-6. 1인당 여행일수	3.00	18	9	3	()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3.20	16	8	3	()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35	14	7	4	()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3.50	12	6	3	()
추가. 유연 근무제 적용비율					()
추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빈도수					()

여가/ 문화환경 조성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쉽]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4-10. 생활체육 참여율	3.68	6	2		()

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4	5	1		()
4-12.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32	15	8		()
4-13.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3.37	13	7		()
4-14. 문화여가 지출률	3.53	11	6		()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95	19	10		()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16	17	9		()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8	8	3		()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56	10	5		()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58	8	3		()
추가.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
추가.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
추가. 영화관 이용률					()
추가. 문화바우처 이용률					()

■ 쉽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다음 장으로>

「노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노후」에 대한 설명

- 부모세대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 건강 등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
- 생애전환기 단계에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노후 영역 정책목표

- ① (활동적 노화)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② (노인 돌봄 지원)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활동적 노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노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8	5	1		()
5-2.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3.61	7	2		()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61	7	2		()

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3.50	10	4		()
5-5. 은퇴연령	3.35	12	5		()
이동.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00	3			()
이동. 노인의 ADL 제한율	3.53	9			()
이동.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7	11			()
추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
추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추가.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및 집단·지역단체 참여)					()

노인 돌봄 지원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노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5-6. 사회적 고립도 ⇒ <활동적 노화>로 이동	4.00	3	3		(—)
5-7. 노인의 ADL 제한율 ⇒ <활동적 노화>로 이동	3.53	9	6		(—)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28	1	1		()
5-9. 치매환자 관리율	4.22	2	2		()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78	5	5		()
5-11.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 <활동적 노화>로 이동	3.47	11	7		(—)
5-12.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00	3	3		()
이동.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1-8에서 이동)	3.37				()
추가. 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추가. 치매발견율					()
추가.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
추가.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노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

「소득」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소득」에 대한 설명

-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등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생활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소득 영역 정책목표

- ① (고용안전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② (보편적 소득보장)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소득]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6-1. 실업률	4.16	10	4	5	()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47	1	1	5	()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37	4	2	5	()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26	7	3	5	()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84	14	6	4	()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11	5	4	()

보편적 소득보장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소득]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6-7. 아동 빈곤율	4.44	3	2	5	()
6-8. 노인 빈곤율	4.47	1	1	5	()
6-9. 소득 만족도	3.21	15	9	4	()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26	7	5	4	()
6-11. 소득5분위배율	4.32	6	4	5	()

6-12. 공적연금 수급률	3.94	12	7	4	()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89	13	8	5	()
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26	7	5	5	()
6-15.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4.33	5	3	5	()
추가. 빈곤집					()

■ 소득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7.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지속
-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며, 대형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

☞ 환경·안전 영역 정책목표

- ① (생활환경 개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② (안전사고 예방)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③ (여성아동 안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1. 대기질 만족도	4.06	7	2	()
7-2. 수질 만족도	3.94	11	4	()
7-3. 토양환경 만족도	3.72	25	11	()
7-4. 녹지환경 만족도	3.83	19	9	()
7-5. 소음 만족도	3.83	19	9	()
7-6. 기후변화 불안도	3.50	32	13	()
7-7. 환경향상 체감도	3.53	31	12	()
7-8. 환경성 질환자 수	3.89	13	5	()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22	4	1	()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13	5	()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89	13	5		()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9	13	5		()
7-13.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14년 대비 감축비율)	4.06	7	2		()
추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
추가.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

안전사고 예방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15. 산업재해율	4.44	1	1		()
7-16. 산재사망률	4.33	3	3		()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6	4		()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44	1	1		()
7-19. 화재 사망자 수	3.56	30	8		()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8	24	7		()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83	19	6		()
7-22. 자살 사망자 수	3.44	33	9		()
7-23. 국민안전 체감도	4.00	9	5		()
추가. 소방시설 설치율					()
추가. 도로 포장률					()

여성/ 아동 안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61	28	10		()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2	25	8		()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61	28	10		()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9	13	4		()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83	19	6		()
7-29. 범죄피해 두려움	3.94	11	3		()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4.00	9	2		()
7-31. 범죄피해율	4.12	5	1		()

7-32. 야간보행 안전도	3.89	13	4		()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3.67	27	9		()
7-34.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3.82	23	7		()

■ 환경·안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건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8. 「건강」에 대한 설명

-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전문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심화

☐ 건강 영역 정책목표

- ① (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② (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공적, 사적 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

의료비 부담 감소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건강]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8-1. 건강수명	3.89	10	7	5	()
8-2. 기대수명	3.58	15	9	5	()
8-3. 주관적 건강상태	3.42	17	11	5	()
8-4. 우울감 경험률	3.47	16	10	4	()
8-5. 스트레스 인지율	3.42	17	11	4	()
8-6. 영아사망률	3.32	19	13	5	()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47	1	1	5	()
8-8. 건강보험 보장률	4.42	2	2	5	()
8-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32	3	3	5	()
8-10. 비급여 본인부담	4.21	5	5	5	()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26	4	4	5	()
8-12. 치료 가능한 사망률 사도 격차	4.00	7	6	4	()
8-13. 의료미충족률	3.89	10	7	4	()

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건강]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8-14. 노인진료비	3.79	12	4	5	()
8-15. 신체활동 실천율	3.95	8	2	5	()
8-16. 흡연율	3.68	13	5	5	()
8-17. 월간 폭음률	3.63	14	6	5	()
8-18. 비만율	3.95	8	2	5	()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4.11	6	1	5	()
추가. 어린이 예방접종률					()

■ 건강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

-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인구 감소와 기초 인프라 부족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
- ☞ 주거·지역 영역 정책목표
- ①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 ② (지역 인프라 개선)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주거지 역]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33	2	2		()
9-2. 주택 이외의 거처(=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9-8과 중복으로 통합)	4.00	4	3		()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9	1	1		()
9-4. 1인당 주거면적	3.22	13	8		()
9-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39	11	7		()
9-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89	7	5		()
9-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89	7	5		()
9-8.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 9-2와 중복으로 삭제	3.94	5	4		()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3.00	14	9		()
추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추가.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
추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지역 인프라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주거지 역]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9-10. 주거환경 만족도	4.06	3	1		()
9-11. 통근시간(5년)	3.89	7	3		()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4	10	4		()
9-13.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3.28	12	5		()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94	6	2		()
추가.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
추가.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추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
추가. 도로율					()
추가. 인구당 의사 수					()
추가.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추가.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
추가.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
추가. 노후 주택/건물 비율					()

■ 주거·지역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3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3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게 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3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20년 2월 21일(금)

☐ 회신 또는 문의처

▶ 연구진: 남재욱 반가운 김봄이 감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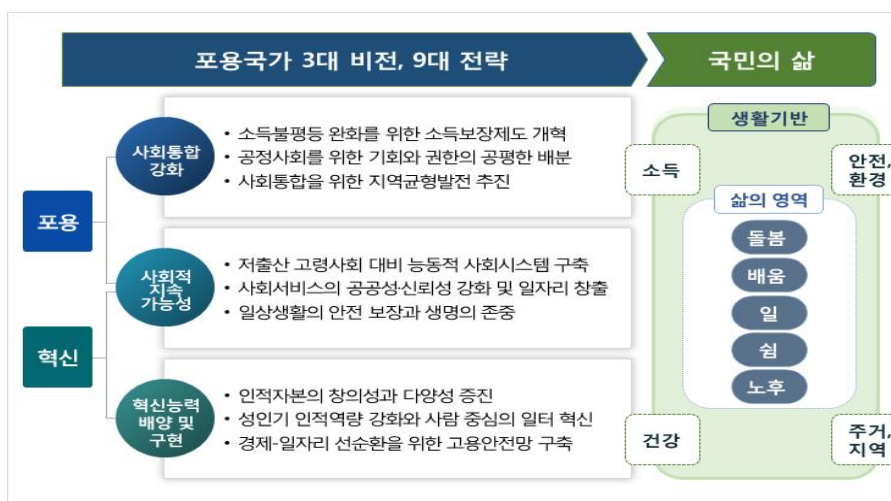
□ 포용국가 사회정책

-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 2)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상기 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I. 「돌봄」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돌봄』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돌봄」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돌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수혜율	()	()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	()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2. 「배움」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배움』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배움」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배움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2-1. 교육비 부담도	()	()
2-2. 기초학력 미달률	()	()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	()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	()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	()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	()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	()

■ 배움 영역 지표관련 의견

3. 「일」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일』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일」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일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3-1. 고용률 (성별, 연령)	()	()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	()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성별 비중)	()	()
3-4.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	()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	()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	()
3-7. 임금 5분위 배율	()	()
3-8. 노동소득 분배율	()	()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	()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	()
3-11. 직무 스트레스	()	()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	()

■ 일 영역 지표관련 의견

--

4. 「쉼」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쉼』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쉼」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쉼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4-1. 총 근로시간	()	()
4-2. 여가시간	()	()

4-3. 휴가활용 (휴가경험율 및 휴가횟수)	()	()
4-4.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	()
4-5.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	()

■ 쉼 영역 지표관련 의견

--

5. 「노후」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노후』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Q. 「노후」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노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	()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	()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	()
5-4. 치매환자 관리율	()	()
5-5. 국공립 장기요양보호시설 비중	()	()

■ 노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6. 「소득」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소득』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Q. 「소득」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소득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6-1. 실업률(전체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	()
6-2. 연령대별 빈곤율 (이동, 근로연령대, 노인)	()	()

6-3. 실업급여 수급률	()	()
6-4.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	()
6-5. 소득5분위배율	()	()
6-6. 공적연금 수급률	()	()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	()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	()

■ 소득 영역 지표관련 의견

--

7. 「환경·안전」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환경·안전』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Q. 「환경·안전」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환경·안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7-1. 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토지, 수질, 대기질, 소음 만족도 각각과 평균)	()	()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
7-3. 산업재해율	()	()
7-4. 산재사망률	()	()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	()
7-8. 범죄 피해율	()	()

■ 환경·안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8. 「건강」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건강」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건강」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건강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8-1. 의료비 지출 비중	()	()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	()
8-3. 비급여 본인부담	()	()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	()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	()
8-6. 비만유병률	()	()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	()

■ 건강 영역 지표관련 의견

--

9. 「주거·지역」 영역의 성과지표

• 다음은 「주거·지역」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 「주거·지역」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주거·지역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9-2.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	()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	()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	()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

■ 주거·지역 영역 지표관련 의견

--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부록 3] 델파이 조사 결과(1~2차)³⁸⁾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돌봄 (15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11	82.1	1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4.06	81.1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95	78.9	3
	나홀로 아동 수	3.79	75.8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3.78	75.6	5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8	73.7	6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67	73.3	7
	장애인의 (I)ADL제한율	3.56	71.1	8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3.53	70.5	9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3.37	67.4	10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3.32	66.3	11
	유아교육 취원율	3.25	65.0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22	64.4	13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20	64.0	14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3.11	62.1	15
배움 (26개)	교육비 부담도	4.05	81.1	1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05	81.1	1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81.1	1
	기초학력 미달률	3.95	78.9	4
	학업성취도(PISA) 수준	3.89	77.9	5
	성인역량(PIAAC) 수준	3.89	77.9	5
	장애인 교육수준	3.79	75.8	7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79	75.8	7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79	75.8	7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3.68	73.7	10
	학교교육 효과	3.63	72.6	11
	고등교육 이수율	3.63	72.6	11
	평생학습 성과인식	3.63	72.6	11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3.61	72.2	14
	성인 문해율	3.60	72.0	15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58	71.6	16
	학교생활 만족도	3.47	69.5	17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3.42	68.4	18

38)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본문(4장)에 제시하였음. <표 4-11> 참조.

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39	67.8	19
	대학졸업자 취업률	3.32	66.3	20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21	64.2	21
	학생역량지수	3.11	62.1	22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3.11	62.1	22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3.00	60.0	24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3.00	60.0	24
	학교폭력 피해율	2.84	56.8	26
일 (30개)	저임금근로자 비율	4.45	89.0	1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45	89.0	1
	임금 5분위 배율	4.40	88.0	3
	남성육아휴직 비율	4.37	87.4	4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1	84.2	5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4.21	84.2	5
	성별임금격차	4.11	82.1	7
	노동소득 분배율	4.10	82.0	8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05	81.1	9
	여성 고용률	4.00	80.0	10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80.0	10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95	78.9	1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5	77.0	13
	직무 스트레스	3.85	77.0	13
	일자리 만족도	3.80	76.0	15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3.79	75.8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74	74.7	17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4	74.7	17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3.74	74.7	17
	사회보험 가입률	3.60	72.0	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70.5	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53	70.5	21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3.50	70.0	23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47	69.5	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3.47	69.5	24
	여성국회의원 비율	3.39	67.8	26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3.37	67.4	27
	평균근속년수	3.25	65.0	28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3.05	61.0	29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70	54.0	30

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쉽 (19개)	총 근로시간	4.45	89.0	1
	여가시간	4.40	88.0	2
	휴가활용	3.85	77.0	3
	여가시간 충분도	3.75	75.0	4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4	74.7	5
	생활체육 참여율	3.68	73.7	6
	여가시간 만족도	3.65	73.0	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8	71.6	8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58	71.6	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56	71.1	10
	문화여가 지출률	3.53	70.5	11
	양육여성 여가시간	3.50	70.0	12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3.37	67.4	13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35	67.0	14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32	66.3	15
	취업시간별 취업자	3.20	64.0	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16	63.2	17
	1인당 여행일수	3.00	60.0	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95	58.9	19
노후 (12개)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28	85.6	1
	치매환자 관리율	4.22	84.4	2
	사회적 고립도	4.00	80.0	3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00	80.0	3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8	75.6	5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78	75.6	5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3.61	72.2	7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61	72.2	7
	노인의 ADL 제한율	3.53	70.6	9
	노인 직접일자리 수	3.50	70.0	10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7	69.4	11
	은퇴연령	3.35	67.1	12
소득 (15개)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47	89.5	1
	노인 빈곤율	4.47	89.5	1
	아동 빈곤율	4.44	88.9	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37	87.4	4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4.33	86.7	5
	소득5분위배율	4.32	86.3	6

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26	85.3	7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26	85.3	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26	85.3	7
	실업률	4.16	83.2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78.9	11
	공적연금 수급률	3.94	78.9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89	77.9	13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84	76.8	14
	소득 만족도	3.21	64.2	15
환경안전 (33개)	산업재해율	4.44	88.9	1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44	88.9	1
	산재사망률	4.33	86.7	3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22	84.4	4
	범죄피해율	4.12	82.4	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82.2	6
	대기질 만족도	4.06	81.1	7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4.06	81.1	7
	국민안전 체감도	4.00	80.0	9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4.00	80.0	9
	수질 만족도	3.94	78.9	11
	범죄피해 두려움	3.94	78.9	11
	환경성 질환자 수	3.89	77.8	13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77.8	13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89	77.8	1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9	77.8	13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9	77.8	13
	야간보행 안전도	3.89	77.8	13
	녹지환경 만족도	3.83	76.7	19
	소음 만족도	3.83	76.7	19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3.83	76.7	19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83	76.7	19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3.82	76.5	23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8	75.6	24
	토양환경 만족도	3.72	74.4	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2	74.4	25
	가해에 의한 사망률	3.67	73.3	27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61	72.2	28

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61	72.2	28
	화재 사망자 수	3.56	71.1	30
	환경향상 체감도	3.53	70.6	31
	기후변화 불안도	3.50	70.0	32
	자살 사망자 수	3.44	68.9	33
건강 (19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47	89.5	1
	건강보험 보장률	4.42	88.4	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32	86.3	3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26	85.3	4
	비급여 본인부담	4.21	84.2	5
	건강식생활 실천율	4.11	82.1	6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00	80.0	7
	신체활동 실천율	3.95	78.9	8
	비만율	3.95	78.9	8
	건강수명(5년)	3.89	77.9	10
	의료미충족률 (지역사회건강조사)	3.89	77.9	10
	노인진료비	3.79	75.8	12
	흡연율	3.68	73.7	13
	월간 폭음률	3.63	72.6	14
	기대수명	3.58	71.6	15
	우울감 경험률	3.47	69.5	16
	주관적 건강상태	3.42	68.4	17
	스트레스 인지율	3.42	68.4	17
	영아사망률	3.32	66.3	19
주거환경 (14개)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9	87.8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33	86.7	2
	주거환경 만족도	4.06	81.1	3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4.00	80.0	4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3.94	78.9	5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94	78.8	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89	77.8	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89	77.8	7
	통근시간(5년)	3.89	77.8	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4	68.9	1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39	67.8	11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3.28	65.6	12
	1인당 주거면적	3.22	64.4	13
	주택만족 가구 비율	3.00	60.0	14

2. 2차 델파이 조사결과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돌봄 (20개)	1-1. 나홀로 아동 수	3.63	72.6	8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95	78.9	4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32	86.3	1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16	63.2	16
	1-6. 아이돌봄비 이용가구 수	3.21	64.2	15
	1-7.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3.47	69.5	12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2.95	58.9	18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3	72.6	8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3.53	70.5	10
	추가.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3.53	70.5	10
	1-11. 장애인의 (I)ADL 제한율	3.32	66.3	13
	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79	75.8	7
	1-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4.11	82.1	2
	추가.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4.00	80.0	3
	추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3.95	78.9	4
	1-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3.84	76.8	6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05	61.1	17
	추가.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2.68	53.7	20
	추가.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자 수	3.26	65.3	14
	추가.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2.95	58.9	18
배움 (29개)	2-1. 교육비 부담도	4.42	88.4	1
	2-2. 기초학력 미달률	3.84	76.8	9
	2-3. 장애인 교육수준	3.89	77.9	8
	2-4. 학교생활 만족도	3.21	64.2	21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47	69.5	15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26	85.3	2
	2-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32	66.3	19
	2-8. 학생역량지수	3.11	62.1	24
	2-9. 학교폭력 피해율	2.63	52.6	28
	2-10. 학교교육 효과	3.58	71.6	12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3.26	65.3	20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3.95	78.9	6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84	76.8	9
	2-14.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2.84	56.8	26
	2-15.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3.00	60.0	25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2.79	55.8	27
	추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2.53	50.5	29
	2-17. 고등교육 이수율	3.47	69.5	15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3.95	78.9	6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26	85.3	2
	2-20.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3.47	69.5	15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47	69.5	15
	2-22. 성인 문해율	3.53	70.5	13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4.00	80.0	5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21	64.2	21
	2-25.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3.79	75.8	11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3.53	70.5	13
	추가.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4.05	81.1	4
	추가. 성인독서량	3.16	63.2	23
일 (36개)	3-1. 여성 고용률	4.21	84.2	8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6	85.3	7
	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11	82.1	9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80.0	11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4.42	88.4	4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37	67.4	32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89	77.9	13
	3-9.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4.32	86.3	5
	3-1.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3.68	73.7	23
	추가. 여성육아휴직자 휴직일수 대비 남성육아휴직자 휴직일수	3.79	75.8	17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4.70	94.0	2
	3-12.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75	95.0	1
	3-13. 임금 5분위 배율	4.55	91.0	3
	3-14.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2.95	59.0	35
	3-15. 노동소득 분배율	4.30	86.0	6
	3-16. 사회보험 가입률	3.60	72.0	24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0	76.0	15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3.42	68.4	30
	3-19.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3.26	65.3	33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70.5	25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47	69.5	29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11	82.1	9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9	75.8	17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3.42	68.4	30
	추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3.78	75.6	19
	추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3.72	74.4	21
	추가. 장애편의시설 개수	3.50	70.0	27
	추가. 장애인 장기고용률	3.94	78.9	12
	추가. 여성 경력단절 기간	3.83	76.7	14
	3-25. 일자리 만족도	3.75	75.0	20
	3-26. 직무 스트레스	3.80	76.0	15
	3-27. 평균근속년수	3.25	65.0	34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55	51.0	36
	3-29.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3.70	74.0	22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3.50	70.0	27
	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3.53	70.5	25
쉽 (25)	4-1. 총 근로시간	4.55	91.0	1
	4-2. 여가시간	4.40	88.0	2
	4-3. 여가시간 충분도	3.90	78.0	6
	4-4. 여가시간 만족도	3.70	74.0	9
	4-5. 휴가활용	4.05	81.0	3
	4-6. 1인당 여행일수	3.00	60.0	22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3.05	61.0	21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26	65.3	17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3.40	68.0	16
	추가. 유연 근무제 적용비율	3.60	72.0	10
	추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빈도수	3.80	76.0	7
	4-10. 생활체육 참여율	3.53	70.5	11
	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9	75.8	8
	4-12.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21	64.2	18
	4-13.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3.16	63.2	19
	4-14. 문화여가 지출률	3.42	68.4	13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63	52.6	25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05	61.1	20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3	70.5	11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42	68.4	13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42	68.4	13
	추가.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3.95	78.9	5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추가.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4.00	80.0	4
	추가. 영화관 이용률	3.00	60.0	22
	추가. 문화바우처 이용률	3.00	60.0	22
노후 (20개)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9	75.8	7
	5-2.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3.53	70.5	12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53	70.5	12
	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3.26	65.3	19
	5-5. 은퇴연령	3.26	65.3	19
	5-6. (이동)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21	84.2	3
	5-7. (이동) 노인의 A이 제한율	3.47	69.5	14
	5-11. (이동)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3.58	71.6	9
	추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3.58	71.6	9
	추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33	66.7	17
	추가.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3.89	77.9	5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53	90.5	1
	5-9. 치매환자 관리율	4.47	89.5	2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89	77.9	5
	5-12. 공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16	83.2	4
	1-8. (이동)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3.47	69.5	14
	추가. 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3.58	71.6	9
	추가. 치매발견율	3.32	66.3	18
	추가.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3.37	67.4	16
	추가.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3.63	72.6	8
소득 (16개)	6-1. 실업률	4.25	85.0	10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70	94.0	2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70	94.0	2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45	89.0	6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70	74.0	15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79.0	12
	6-7. 아동 빈곤율	4.70	94.0	2
	6-8. 노인 빈곤율	4.75	95.0	1
	6-9. 소득 만족도	3.10	62.0	16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40	88.0	8
	6-11. 소득5분위배율	4.50	90.0	5
	6-12. 공적연금 수급률	4.00	80.0	11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95	79.0	12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40	88.0	8
	6-15.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4.45	89.0	6
	추가. 빈곤갭	3.95	79.0	12
환경 안전 (37개)	7-1. 대기질 만족도	3.95	78.9	8
	7-2. 수질 만족도	3.84	76.8	13
	7-3. 토양환경 만족도	3.47	69.5	29
	7-4. 녹지환경 만족도	3.74	74.7	21
	7-5. 소음 만족도	3.84	76.8	13
	7-6. 기후변화 불안도	3.47	69.5	29
	7-7. 환경향상 체감도	3.32	66.3	36
	7-8. 환경성 질환자 수	3.74	74.7	21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32	86.3	4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74	74.7	21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74	74.7	21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4	76.8	13
	7-13.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4.11	82.1	6
	추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3.58	71.6	26
	추가.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3.47	69.5	29
	7-15. 산업재해를	4.68	93.7	1
	7-16. 산재사망률	4.58	91.6	2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05	81.1	7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53	90.5	3
	7-19. 화재 사망자 수	3.42	68.4	35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9	75.8	19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84	76.8	13
	7-22. 자살 사망자 수	3.47	69.5	29
	7-23. 국민안전 체감도	3.95	78.9	8
	추가. 소방시설 설치율	3.58	71.6	26
	추가. 도로 포장률	2.84	56.8	37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58	71.6	26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9	75.8	19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47	69.5	29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4	76.8	13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95	78.9	8
	7-29. 범죄피해 두려움	3.84	76.8	13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89	77.9	11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7-31. 범죄피해율	4.21	84.2	5
	7-32. 야간보행 안전도	3.89	77.9	11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3.47	69.5	29
	7-34.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3.63	72.6	25
건강 (20개)	8-1. 건강수명	4.05	81.0	7
	8-2. 기대수명	3.65	73.0	13
	8-3. 주관적 건강상태	3.30	66.0	19
	8-4. 우울감 경험률	3.60	72.0	16
	8-5. 스트레스 인지율	3.45	69.0	18
	8-6. 영아사망률	3.20	64.0	20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75	95.0	1
	8-8. 건강보험 보장률	4.65	93.0	2
	8-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35	87.0	5
	8-10. 비급여 본인부담	4.55	91.0	3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45	89.0	4
	8-12.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00	80.0	8
	8-13. 의료미충족률	3.80	76.0	10
	8-14. 노인진료비	3.75	75.0	12
	8-15. 신체활동 실천율	3.95	79.0	9
	8-16. 흡연율	3.65	73.0	13
	8-17. 월간 폭음률	3.50	70.0	17
	8-18. 비만율	3.80	76.0	10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4.10	82.0	6
	추가. 어린이 예방접종률	3.65	73.0	13
주거 지역 (25개)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68	93.7	1
	9-2. 주택 이외의 거주(=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9-8과 중복으로 통합)	4.21	84.2	3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47	89.5	2
	9-4. 1인당 주거면적	3.26	65.3	20
	9-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42	68.4	16
	9-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95	78.9	6
	9-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00	80.0	5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2.79	55.8	25
	추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3.84	76.8	9
	추가.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3.68	73.7	14
	추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7	67.4	18
	9-10. 주거환경 만족도	3.89	77.9	7

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9-11. 통근시간(5년)	3.84	76.8	9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7	69.5	15
	9-13.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3.26	65.3	20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74	74.7	13
	추가.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3.89	77.9	7
	추가.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4.11	82.1	4
	추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3.37	67.4	18
	추가. 도로율	2.95	58.9	24
	추가. 인구당 의사 수	3.79	75.8	12
	추가.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3.42	68.4	16
	추가. 1km2당 학교 수	3.26	65.3	20
	추가.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3.84	76.8	9
	추가. 노후주택/건물 비율	3.26	65.3	20